

지금여기,
치유와 전환의
생명운동을 위하여

생명운동 대화마당

2014년 5월 21일(수) 오후 2시

원주 가톨릭센터

협동운동 대화마당

한국 협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무 위 당 2 0 주 기 기 념

생명 · 협동 대화마당

2014년 5월 21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센터

생명운동 대화마당

| 원주가톨릭센터 마리아홀 |

[초대마당] 지금 여기 길을 묻다

13:30 ~ 15:00

진행 |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말씀 |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정성현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야기마당]

15:00 ~ 18:00

진행 |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I. 지금 여기 무위당이라면
무슨 말을 건넬까?

김용휘 한울연대

유두희 한살림전북

윤박경 대화문화아카데미

전진택 생명평화결사

장동영 무위당만인회

II. 지금 여기 생명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양재성 예수살기

이항민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황선진 밝은마을

협동운동 대화마당

| 원주가톨릭센터 202호 |

[1부] 토론회
14:00~15:50

“원주 협동운동 돌아보기”
진행 | 김용우 원주 한알학교

원주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과정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원주 운동의 의미와 역할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시원,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부] 대화모임
16:00~18:30

“우리 시대 협동운동의 진단과 내다보기”
진행 | 윤형근 한살림성남용인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하승우 땅땅책협동조합

협동조합과 노동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생명위기 시대, 협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패널토론 | 김성훈 대전민들레의료생협
구교선 원주생협
우미숙 한살림성남용인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종합토론

차례

_ 생명운동 대화마당

모시는 글 •8

지금은 | 이병철 지리산생태영성학교 교장 •9

초대마당: 지금 여기 길을 묻다

인문운동은 생명운동이며, 이 시대 변혁운동의 한 축이다 |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11

생명의 위기와 생명운동 •22

생명의 위기와 문명의 대전환 | 정성현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25

이야기마당

I. 지금 여기 무위당이라면 무슨 말을 건넬까?

김용휘 한울연대 •31

유두희 한살림전북 •33

윤박경 대화문화아카데미 •36

전진택 생명평화결사 •43

II. 지금 여기 생명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47

양재성 예수살기 •49

이항민 인드라마생명공동체 •55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57

황선진 밝은마을 •65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70

_ 협동운동 대화마당

[1부] 토론회 “원주 협동운동 돌아보기”

원주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과정 |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 77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원주 운동의 의미와 역할 |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111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사원,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124

[2부] 대화모임 “우리 시대 협동운동의 진단과 내다보기”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 하승우 땡땡책협동조합 • 135

협동조합과 노동 |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 148

생명위기 시대, 협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 159

패널토론 | 김성훈 대전만들레의료생협 • 182

구교선 원주생협 • 186

우미숙 한살림성남용인 • 189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192

무위당 20주기 기념
생명운동 대화마당

지금 여기,
치유와 전환의
생명운동을
위하여

생명운동집담회

모심과살림연구소 · 밝은마을
생명평화결사 · 인드리망생명공동체
예수살기 · 한알학교 · 한울연대

“지금 여기, 무위당이라면 무슨 말을 건넬을까?”

“지금 여기, 생명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2014년 5월, 우리는 상중(喪中)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왜 아이들의 생명신호에 응답하지 못했는가? ”,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

지난 수년 살처분된 수백만 말없는 생명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지난 2월 세 모녀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여기 촛불 같이 어린 영혼들 앞에서 한없이 참담합니다. 생명운동가 무위당에게서 배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생명은 하나”라는 것을, “생명운동은 쓰러진 생명을 보듬어 안는 것”이라는 것을.

“‘전복’ 당할 것인가 ‘전환’ 할 것인가? ” 지금여기, 세월호의 질문에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여기, 아이들의 생명신호에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여기, 생명운동의 고향 원주에서 제 2의 ‘생명선언’ 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무위당과 함께 참다운 삶의 길, ‘치유와 전환의 생명운동’을 탐색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열망하는 님들을 이야기마당에 초대합니다.

모시는 이들 | 생명운동집담회

모심과살림연구소

밝은마을

생명평화결사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예수살기

한알학교

한울연대

지금은

이병철

지금은
그저 고마워할 때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내밀어 그 손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고맙고
마냥 눈물겨워할 때

지금은
오직 사랑할 때
그 사랑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때
망설임 없이 달려가
주저함 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지금은
다만 가슴을 열어야 할 때
가림 없이 품어 안아야 할 때
마주 안은 가슴으로 눈물 흠치며
다시 환하게 웃어야 할 때

처음이듯
그리고 마지막인 듯
혼신으로
한사코 오롯할 때

- 잊고 있었던 것, 미루어 두었던 것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더 우선하는 것인지 다시 깨닫고 먼저 하기.

초대마당

인문운동은 생명운동이며, 이 시대 변혁운동의 한 축이다

- 새로운 인문운동을 제안하며

이남곡 |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1. 배경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적 과제를 매우 빠른 기간에 달성하였다. 이것은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물질적 생산력 분야에서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지표와 인간 존엄이라는 분야에서의 세계 최악의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좋아진 조건들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제도의 정비와 개혁 그리고 물질의 준비와 함께 ‘의식의 변혁’이 그 성공의 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의식의 변혁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현상화 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질이나 제도의 개선도 그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이념과 정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문적 바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다. 우리처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모순을 가진 나라에서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과 집단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견해와 이해를 같이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가 나뉘어 대립하고 때로는 투쟁하는 것 또한 민주화된 나라의 당연한 모습이다. 낡은 진영논리와 정서를 벗어나자는 것은 그것과는 질이 다른 것이다.

식민지배와 남북상잔의 아픈 역사를 통하여 겪어야만 했던 격렬한 ‘편가르기’의 정서가

시대와 현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현실과 관념의 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괴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다원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단순화되고 도식화된 해답을 요구함으로써, 실사구시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상대방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분리의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세계의 실상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이 지배적이 되면, 그 사회, 나라,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구한말에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가 새로운 인문적 바탕을 세울 수 있다면,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일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나아가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출발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시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역발상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이미 물질적 분야에서는 ‘중심교역국가’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제 사상 문화 분야에서의 진정한 고기압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위대한 시도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21세기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는 옳은 길이다. 21세기 인류사의 ‘정명’ 正名을 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꿈은 우리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 속에서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비원에 뒷받침되어 있다. 이제 선진국과 제3세계의 ‘중간국가’로 되어 있는 객관적 조건들이 이 꿈을 현실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닦는 데 한 축이 인문운동이라고 생각한다.

2. 내용

1) 중도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는 단지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도는 다양한 견해의 일시

적 타협의 소산인 ‘미봉’이 더욱 아니다. 중도의 ‘중’은 가운데라는 의미보다 ‘적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 시점에서 시대정신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계사는 이 ‘중도’를 향해 거칠게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는 이 중도에 이르는 길을 보다 부드럽게 하는 시스템과 의식이다.

2) 무고정(無固定)에 바탕한 탐구

제도가 민주화되어도, 의식(意識)이 나아가지 못하면 진정한 소통과 탐구가 어렵게 되어 부실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뇌과학’을 비롯한 과학의 성취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소통과 탐구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가)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통찰: 인간은 사물을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뇌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어떤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을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나) 그러나 '불가지론'이나 '회의론' '현실도피' 또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 시점에서 제기되는 모든 가능성과 입장들을 검토하여 그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가를 철저하게 구명해 간다.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감각과 판단일 뿐'이라는 자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지식·정보·신념·가치관 등을 비우거나 억제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 기운이 빠지거나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지식·정보·가치관 등이 아니면 무엇으로 탐구할 것인가? ‘자각’이란 다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는 그 착각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지적 자산들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려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적자산까지도 거리낌 없이 풍성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명한 이치가 왜 실제로 그렇게 어려울까?

오래된 '내가 옳다'는 단정과 독선의 문화를 그 근저에서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 시대의 인문운동이라고 생각한다.

3) 하나의 단위'라는 관점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바탕이 '분절 I → 무분절 → 분절 II'로 진화한다. 원래 본질이란 존재의 한계 짓기, 즉 존재의 부분적·단편적·국소적 한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규정된 본질을 둘러싸고 하나의 사물이 조립된다. 그러한 사물의 전체가 분절 I의 세계다. 오랫동안 그것은 상식의 세계였으며, 소수의 선구자들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분절'을 통과한 분절 II의 세계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실이라고 보았다.

분절 II의 존재차원에서는 모든 분절의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을 취해서 보아도 반드시 무분절자의 전체 현현이며 부분적·국소적 현현은 아니다. 이것을 7세기의 위대한 선각자 의상은 그 유명한 법성계(法性偈)에서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역여시'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예전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오직 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현대 즉 21세기의 인류사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무분절의 깨침은 이제 현대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계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일체(一體)', '온생명', '한생명', '한살림', '하나의 생명단위로서의 우주' 등 표현은 다양할지 몰라도 분리독립된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하고 있다. '한 장의 종이, 한 벌의 옷 속에서 우주를 본다'는 표현은 더 이상 신비스럽지 않게 되었다. 무분절을 깨닫는 삶은 '자기중심성을 넘어 일체(一體)를 자각하는 삶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실한 것이 된다. 사회과학과 사회적 실천도 분절 I의 세계에서 분절 II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아마도 인류가 위기의 자본주의 문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절 II의 의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사회운영의 구체적 원리로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비로소 증오와 배제 그리고 자연생태계교란의 문명을 넘어 '형제애'와 '자연과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4) 솔직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라야,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 엄격함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선택은 그 자신이 기꺼이 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한 계급적 관점', '특정한 민족적 관점', '특정한 종교적 관점' 등은 그것을 분명히 할수록, 그 자각이 뚜렷할수록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들 생각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실의 일정한 부분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런 저런 특정한 관점을 '틀림없다' '진리다'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정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 혁명 등의 사회적 실천들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병폐를 우리는 지난 한 세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되, 어떤 주장도 그것이 무오류의 진리라는 허위의 탑을 쌓지 않는다.

단상斷想들

1. 인문운동은 생명운동이며, 우리시대 변혁운동의 한 축이다.

물신(物神)의 지배와 자기중심성은 반(反)생명이다.

세월호 이후의 일상은 어떻게 변해야할까?

우리의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적 욕구는 억압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몸에 붙어버렸다. 정신적·예술적 욕구를 확대해야 한다. 채기고 탐내는 것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훨씬 기쁜 것이라는 것을, 한 송이 들꽃의 아름다움이 어떤 보석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성의 변화를 일상의 삶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의 원천이, 그 욕구의 질이 점차 바뀌

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문운동이다.

나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제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옳다'는 아집이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과학적 자각을 떠올린다. 이것이 인문운동이다.

이것이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자치가 안 되는 곳에 독재와 관료주의의 온상이 마련된다. 아파트에서 마을에서 동료들끼리 회사에서 이 자치를 확대해가야 한다. 협동운동과 마을운동은 아주 좋은 연습장이다. 자치는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긍정적 에너지를, 진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만 자랄 수 있다.

이기적 경쟁은 자본주의 생산력의 근본적 추진력이다. 그것은 반(反)생명적인 생산력이다. 이제 자기실현의 건강한 노동의 자율적 자주적 협동적 조직에 의한 생산력이 이 반생명적 생산력보다 우수하다는 실례들을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한 세기 이상의 세계적 실험의 실패를 극복하는 위대한 걸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동기를 확대하는 것이 인문운동이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성이나 독재·부패·관료주의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변혁운동은 이 인문운동을 속살로 갖출 때라야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두 흐름이 서로 만나 큰 강을 이루는 곳에 세월호의 희생이 고귀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곳 어디에나 함께 있だよ'

인디언의 노래가 이 새벽 가슴 깊이 파고든다.

2. 세월호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금처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지금처럼 온 국민의 마음 속에 '총체적 변혁'에 대한 요구가 하나로 모아지는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슬픔과 분노를 총체적 변혁의 지속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이 안타깝고 고귀한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불인不仁'을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불인不仁'에 물들지 않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불인'을 다른 말로 하면 '반생명反生命'이다. 반생명적인 제도를 변혁하는 것과 알게 모르

게 반생명적인 의식과 문화(생활양식)에 물든 자신을 변혁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폐북공간을 보면서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또 다시 세월이란 망각의 늪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3. 녹색당을 선택한 아들을 생각하며

풀뿌리 정치를 해보고 싶어하는 아들이 내년의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보려고 한다. 정당은 녹색당을 선택하고 있다. 아버지로서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지만, 이 두 가지 실험이 성인으로서의 그의 인생에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것은 꼭 지금의 선택이 가장 옳은 것으로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20대인 그의 앞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이 놓여 있다. 다만 지금 들어서는 정치의 길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이 길이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기쁨과 세상의 허기가 만나는 곳인가?' 하는 질문 앞에 일관되게 서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이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도 말고, 때로는 너무 머뭇거리지도 말기를 바란다. 마음의 '헛힘'을 빼고, 진정한 힘과 만나는 숙성의 장으로 정치와 만나기를 바란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인문운동가인 아버지로서는 공자의 절사(絶四)를 판단의 기준으로 권하고 싶다.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가 그것이다. 대단히 편안한 길이며, 광대무변한 에너지와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의 느낌 수준이겠지만 녹색당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버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인문운동(물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의식의 진화)과 정치의 융합이 녹색당이라는 실험을 통해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지금은 1%의 지지도 못 얻는 정당이라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의 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깊이 본 것이 아니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냥 국외자의 느낌 정도로 받

아들여 주기 바란다.

첫째는 ‘자기중심성’에 대한 것이다.

내가 만나거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녹색주의자(?)들은 지금까지의 문명이 일으킨 폐단과 그로 인한 인류의 위기가 ‘자연생태계 안에서 엄청난 행위능력을 가진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종(種)으로서의 인류가 자연생태계 안에서 갖는 자기중심성에 대해서는 자각하면서도, 인간 상호간 즉 인간생태계 안에서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다. 사실 이 두 가지(種)으로서의 자기중심성과 개체로서의 자기중심성)는 일관되어야 진실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녹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강박하고 완고한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하고, 같은 세계관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다보니 녹색이 차가운 색깔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개체로서의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하나의 집단문화로 자리잡을 때 지금의 다수결보다 뛰어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녹색당이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인류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될 때 녹색은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생기를 주는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정당으로 된다면, 지금의 1%는 엄청난 1%로 될 것이다.

둘째는 물질문명에 대한 태도이다.

지금과 같은 소유 소비문명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지속적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목표와 정강을 가진 정당은 역사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는 정체성을 갖는다. 다만 그 명칭이 꼭 색깔로 표현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문명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관념적 과격성으로 비추어질 때 보편성을 획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의 실태를 공격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현명하거나 과학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의 확대를 위해 긴 역사를 걸어 왔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생산력을 발전시켜 왔고, 사회적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거의 그 성과들을 대공정하면서, 현재의 모순과 맞서고, 그 모순과 맞서는 힘을 현재의 실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물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이후에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이런 점을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물질적 자유가 최대의 목표로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이야기해도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공생공빈’이나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강제나 부자유 또는 비현실적 관념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많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가 물신의 지배로 전락할 때 그것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에게 이런 목표들이 마음으로부터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문명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으로 이행하는 ‘조용하지만 튼튼한 혁명’의 길을 닦는 것이 아닐까?

물질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예술적 욕구가 커짐으로서, 즉 욕구의 질이 변화함으로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으로 이행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녹색당원들이 이런 점에서 선구적이 된다면, 그 당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생각한다. 당원들에게서 그 밝음이 빛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반생태적이고 반인간적인 제도나 정책과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경우라도, 그 밝음과 진정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그런 녹색당원이 되기를 바란다.

국외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 그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요즘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시장' '이기적 이타주의' 같은 말들이 많이 들려온다.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인간양심의 요구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관문이라는 자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아마도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통일의 꿈도, 그 후에 펼쳐질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의 원대한 꿈도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필요에는 공감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에 오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다. '화쟁'의 고수이며, 삼국통일의 정신적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원효의 사상과 방법이 주목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누구도 진실을 그대로 말하기 힘들며, 누구의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비동비이이설 非同非異而說(동의도 동의하지 않음도 없이 말한다)'한다. 전적으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니까 '리(理)'에 어긋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부정하지 않으니까 '정(情)'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양비론' '양시론' '회색기회주의' 등으로 비난 받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화쟁할 수 있는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정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 그런 모델 집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 같다.

'중도'나 '화쟁'을 이야기하면 현실회피적인 회색적 관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 실상은 그 반대다. 중도나 화쟁이라는 관념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 아니다. 관념의 세계는 양면(양극)이 되기 쉽다. 실제로 일을 풀어가려면 실사구시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을 하려는 사람의 몸에 붙는 태도가 바로 중도이며 화쟁인 것이다. 브라질의 성공한 죄과 대통령 룰라의 경우도 그 한 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좌측 깜박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지만, 비록 성공한 사례는 아닐지 몰라도, 야당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려면 결국 중도나 화쟁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못하면 어리석거나 무능하거나 나쁜 것이다.

5.

갑오년.

120년 전이 자주 떠오른다.

'개벽' 사상이 어떻게 그 시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을까! 물질도 제도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거의 없던 그 시대에... 우리는 경탄스러운 선조들을 가졌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그 다음에 나타날 혁명은 내 머리로는 아무래도 '개벽'인데... 제도, 물질, 의식의 동시 혁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의 동시추구. 이것을 포괄할만한 말이 '개벽'말고 더 있을까! 이제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도해볼만한 때가 되었지 않나!

한번 큰 꿈을 같이 꾸어보면 어떨까.

다음에 나타날 세계혁명을 한국혁명이라고 부르게 될 꿈을... ●

생명의 위기와 생명운동

정성현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1. 어떤 위기인가

- 전면적, 총체적, 지속적 복합다중 위기
 - 사회위기, 경제위기, 문화위기, 정치위기 → 인간사회의 위기
 - 개체 생명의 위기, 못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 생명사회의 위기
 - => 존재의 위기, 관계의 위기
- 서로 연결되어 확대, 심화되는 위기
 - 자본운동의 격화(= 독과점화, 지구화)와 화석연료 다소비 동력체제의 상호결합과 영향
 - 사회과열과 지구고열의 합병증
 - 독점과 차단, 사회구조와 대량생산, 유통, 소비, 폐기 문명의 상호 결합과 영향
 - 독점자본 지배구조와 거대문명의 악순환.
- 인식은 어느 정도 되나 인정하기 싫고, 기본적 완화해법은 있으나 현실적 해결은 안 되거나, 회피하거나, 더 나빠지는 위기
 - 인간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과 대응주체인 인간과 사회의 문제
 - 인간의 개별적, 집단적 욕망과 충족수단과 체제의 문제
 - 근본적, 전면적 위기이나 현상적, 국지적 인식, 대처하는 위기
 - => 국민국가, 국민경제 단위의 대응과 대의제 민주체제의 한계
- 역사의 교훈에서 지혜를 구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위기
 - 인간사회 욕망충족구조(수단 포함)와 전체 생명사회 존재양식의 완전한 적대적 모순구조 즉 인류라는 종의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한 공격, 파괴, 훼손
 - 독점구조, 거대문명의 전면화와 종말은 무엇인가.
 - => 과연 인간에 의한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Mass extinction)은 오는가?

오면 언제 오는가?

2. 위기의 모습

- 자원고갈 특히 생명자원(불, 물, 밥, 흙, 공기)의 과소비, 불평등 구조와 과부족
 - 공해(오염의 문제) → 환경(파괴의 문제) → 생태(멸종의 문제)가 서로 중첩되며 순서적으로 악화
 - 인간과 인간(=인간사회) 인간과 자연(=생명사회) 사이의 공존, 조정, 통제기능의 약화, 마비, 회피, 포기, 무능, 부작동
- => 임계점에 선 지구생명공동체
기로에 선 인류의 생활양식과 존재양식

3. 생명운동 -성과와 한계-

- 1) 성과
 - 생명운동에서 생명평화운동으로의 지평확대
 - 마을, 농업, 자치, 협동, 대안의 중요성 확산과 현실적 실천 토대 부분적 조성
 - 부문, 지역, 국제적 연대의 초보적 실천
- 2) 한계
 - 담론(노자, 장자, 해월사상 중심과 서구의 생태학, 일본의 생협 실천운동)
 - 실천(종교인의 순례, 유기농산물 중심의 협동운동)
 - 생명운동의 부분적 성과에 안주하며 관료화(끼리끼리현상, 일보다 조직 중심) 되는 경향

4. 대전환을 향하여

‘구상과 계획은 크고 실천과 자세는 정성스럽게’

- 1) 근본, 기본, 현실을 통합한 담론과 실천

2) 개혁 수준의 새 종교운동, 문화혁명의 전개

3) 기본의 변혁 토대 구축

○ 생명의 호혜경제 단위(개인, 가족, 마을, 지역, 조합, 기업 등)의 연대와 집단화

→ 광장과 시장의 통합

○ 교육개혁의 집중적 실천

– 전인교육(독자적, 사회적, 우주적 존재 통합교육)

– 노동, 영성, 이론, 예술의 통합교육

– 가정교육, 공교육, 대안교육, 사교육, 사회교육 상호 침투

○ 정치운동의 기본 토대 조성, 지원

– 인재 발굴, 육성

– 직접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민회활성화로 대의 민주주의, 엘리트민주주의 극복.

– 서구의 녹색당은 참고하고 우리의 창색녹색당으로

5. 결단과 실천

‘어떻게 하면 불을 조금 쓰고 행복할 수 있을까?’

○ 창조적 소수의 결단과 헌신

○ 대전환 실천 주체 대오형성과 새로운 차원의 대중운동 전개

○ 생명사회 실천계획 수립, 실천- 시, 군, 구 단위. ●

생명의 위기와 문명의 대전환¹⁾

정성현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세월호 대참사!

그 참담한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6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동반성취한 대한민국의 드러나지 않았던 나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다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반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만, 어린 생명들의 희생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돈과 물질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사람중심의 세상을 이루고자 할진대, 우리는 생명중심의 세상을 바탕에 놓지 않는 한 사람중심의 세상은 말만 그렇고 내용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문명으로 대전환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의 위기 -드러난 위기와 드러나지 않은 위기- 와 다가올 위기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뼈저리게 깨달을 때 조금씩 현실화될 것입니다.

드러난 위기는 대부분 “인간사회의 위기”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위기는 대부분 “생명사회의 위기”입니다. 다가올 위기 -이미 다가온 위기와 곧 다가올 위기- 는 불의 위기, 물의 위기, 땅의 위기, 밥의 위기... 못 생명의 위기입니다. 밤낮없이 불을 때며 원자력 발전의 위기를 걱정하는 스스로의 삶을 봅니다.

1) DMZ 평화생명통신 32호에 실린 글입니다.

세월호의 대참사는 체르노빌, 드리마일, 후쿠시마 원전의 초대형 참사와는 질과 양 모두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걱정하던 수많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른바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토목공사로 과연 4대강을 살려내겠다는 그 오만한 폭력은,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을 담보해 준 지식행상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초 겨울까지 우리는 조류독감(AI) 때문에 닭과 오리를 1000만 마리 이상 “산 채로” 문었습니다. 철새가 다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만에 인류는 절멸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DMZ평화생명동산에는 살구, 복숭아, 사과 등 온갖 꽃이 이미 피고 지고 지금은 사과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벌이, 토종벌이 없어 우리 협동부장이 모레 진도까지 1400km를 왕복하여 벌 5~6통을 싣고 올 것입니다.

세월호의 어린 생명을 제대로 살려내는 일은 지금까지의 돈과 물질 제일주의를 혁파하고 사람중심의 세상으로 변혁하는 일입니다. 사람중심 세상으로의 변혁은 생명중심의 문명 토대에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실무자들은 희망근로 할머니, 건국대학생들과 함께 생명살림 오행동산에 약초와 야생화 모종을 19,000여 개나 심었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인데도 남은 6,000여 개를 다 심겠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온갖 채소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합니다. 사람농사와 작물농사를 같이하다 보니 개구리, 뱀, 벌레, 지렁이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것은 사람농사입니다. 생명의 세계관, 평화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정립한 지혜로운 일꾼들이 스스로(=자치), 함께(=협동) 세상을 변혁하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다짐해 봅니다. ●

깨어나기, 우리를 위한 구명정

이병철 | 지리산생태영성학교 교장

우리는 지금 난파선을 타고 있다. 저 캄캄한 바다 밑 세월호 속에서 비명에 죽어간 이들의 모습은 바로 내일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탄 배 또한 그렇게 침몰하고 있다. 가라앉고 있는 배, 이 난파선에서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비통해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에 분노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구조 활동에 대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책임 추궁하기에 급급하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목숨들에게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를 묻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나는, 우리는 이 참사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나에게, 그리고 지금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당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 속으로 가라앉히고 수많은 목숨들을 수장시킨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이, 생명보다, 존재보다 돈과 물질과 그 소유를 더 중요시한, 함께 도우며 살기보다는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려고 한 우리의 탐욕과 그 어리석음이 급기야 이런 참사를 일으킨 까닭이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생명을 돈과 바꾸며 사람보다 물질과 그 소유를 더 중시해온 우리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이 빚어낸 참사가 세월호 비극의 외면당한 진상이다.

지금 우리가 비난하고 지탄하는 선장과 선주와 고장난 재난 관리 시스템과 그 운용체계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가려워진 다른 모습들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온 것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예견된 참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제2, 제3의 세월호가 가라앉고 무너질 것이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대형 참사는 줄을 이어 일어날 것이다. 저 체르노빌

과 후쿠시마의 비극 또한 다른 나라, 남의 불행과 고통일 수 없다.

그러나 세월호 비극에서 더욱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은 세월호의 참사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그 사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의 저 비명은, 저 절규는 바로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세월호의 조난신호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조난신호이다.

우리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누가 와서 우리를 구조해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국지적으로는 우리 사회, 한국호라는 이 나라의 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류 문명 전체의 배이기도 하다. 인류가, 인류문명의 배가 모두 함께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지상에 우리 밖에 다른 누구는 없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우리를 구조해줄 수 없는 것이다. 가라앉는 배, 이 난파선을 가라앉지 않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침몰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길은 하나이다. 가라앉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모든 힘을 다해 구명정을 가능한 많이 마련하는 일이다. 오직 이 길뿐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여기에 모두 매달려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가 탄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난파선에서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구명정을 마련하는 것뿐임을 알려야 한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거나 동요하는 이들을 자제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먼저 고요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구명정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들이 무사히 타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그 세상을 안전하게 향해갈 새로운 배 그 문명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난파선에서 우리의 기도는 저 후쿠시마 참사 때의 어머니들의 절규 그 애절한 기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우리에게 숨 쉴 공기, 마실 물, 그리고 믿고 디딜 수 있는 땅을 허락하소서.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만 사치일 뿐입니다.’

그렇다. 이 절박한 사태 앞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선 살아남고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하거나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한갓 사치일 뿐이다.

지금 여기, 세월호의 저 참사 앞에서 우리의 구명정은 그렇게 숨 쉴 공기와 마실 물과

안심하고 닫고 서서 생명을 보듬고 가꿀 땅을 일구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손길도 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슴을 열어 서로를 먼저 품어 안는 것이다. 상처 입은 가슴으로 상처받은 가슴을 보듬어 안아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것이다.

내 아이가 저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지금 오직 하나의 바람은 다만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그 밖에 따로 무슨 요구가 있겠는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대가로 치르는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가치, 생명의 무게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아이가 세월호에서 간절히 살아남아 있어만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던 바로 그 아이이고 그 생명, 그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아이, 그 사람, 그 생명,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다. 돈보다 생명이, 물질적 가치보다 사람의 존재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 이 존재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뼈에 깊게 새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목숨붙이들부터 먼저 품어 안아야 한다. 그것이 저 세월호의 참사로 비명에 죽어간 영혼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전하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난파선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구명정이다.

깨어나야 한다. 제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서로 모시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것이 바른 길이며 제대로 사는 길임을 일깨워야 한다.

깨어나는 것, 우리가 한 목숨 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태워 보낼 목숨 줄인 그 구명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명가치가, 존재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세상 그 사회와 문명을 일구어가는 것이 그 구명정이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다음은 없다. 지금 바로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 서로 감싸고 돌보며 마음 모아 함께 나셔야 한다. 지금 우리들의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야기마당 I.

지금 여기 무위당이라면
무슨 말을 건넬까?

깊은 마음과 신성한 경제

김용휘 | 한울연대

“한 민족이 진정한 역사에 도달하는 것은 타고난 심리적 재능이 아니라, 그 민족이 역사를 체험하거나 혹은 역사를 만드는 숙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단행하는 확고한 결단에 달려있다”

세월호 사건이 한 이 더 지났다.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문제를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무책임과 해경의 무능, 그리고 유병언 일가의 비리의 문제로만 몰고 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결국 해경의 해체라는 파격적인 조치와 국가안전처 설치, 그리고 유병언 사법처리로 문제의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진보진영은 이걸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정권타도, KBS 사장의 퇴진 투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특정한 한 사람에 돌리는 방식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진정한 원인은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가 이미 ‘생명보다 돈’,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게 된 데 있다. 여기에는 IMF 체제 이후에 더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이미 자본에 포섭되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초국적 자본과 금융자본의 탐욕이 파리를 틀고 있다.²⁾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은 탐욕이라기보다는 돈, 화폐시스템, 금융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³⁾ 자연파괴, 전쟁, 빈곤, 실업 등의 모든 문제가 ‘무한히 자기증식하는 돈’, ‘상품으로 매매되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하일 엔데는 “중요한 점은 빵집에서 빵을 사는 구입대금으로서의 돈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으로서의 돈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돈이라는 인식”⁴⁾이라고 한다. 현재 거래되는 돈의 98퍼센트가 헤지펀드, 금융파생상품 등과 같은 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물경제 왜곡하고, 모든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후손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돈’, 귀중한 자연과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끊임없이 자기증식하는 돈을 전제로한 현대의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실비오 게절은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여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 본연의 기능을 회복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런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찰스 에이젠슈타인 역시 진정한 원인은 화폐 시스템 자체에

2)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탐욕으로 보거나 국가로 보게 되면 윤리적 문제나 정치적 투쟁의 문제로만 환원되어 버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다. 한사람을 끌어내린다고 바뀌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전환’으로 가야한다. 물론 저항도 필요하고, 정권교체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며, 그것을 실천할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다.

3) 엔데의 유언, 카와무라 아츠노리, 김경인 옮김, 갈라파고스, 2013.

4) 엔데의 유언, 65쪽.

있다고 한다. 진짜 원인은 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방식에 내재해 있으며, 그 시스템의 중심에 고리대금이 있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이야말로 이 세계에 만연한 결핍의 원인이자, 이 세계를 집어 삼키는 무한 성장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한다는 것이다.⁵⁾

에이젠슈타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역행 과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한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 영역에 있던 것들을 선물, 호혜, 자급자족, 공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역이자 화폐, 경제적 지대의 제거, 공유자원 고갈에 대한 배상,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 경제, 통화의 지역화, 사회 배당금, 경제 역성장, 선물 문화와 P2P 경제 등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다.⁶⁾

그런데 돈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들 자신의 참된 변화의 문제이다.⁷⁾ 그래서 마음공부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함께 가야 한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인간 이해의 현실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마음, 하늘 마음, 그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인간과 모든 생명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문명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명이 현대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⁸⁾ 특히 동학의 시천주는 우리 안에 누구나 하늘이 있다는(내유신령) 자각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외유기화) 이러한 우주의 생명 네트워크에서 이탈하여 생존할 수 없다는 자각(각지불이)을 표현한 것이다.

무위당 선생은 생전에 박정희도 전두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셔서 듣는 이를 뜨악하게 하신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면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다. 무위당 선생이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박근혜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통찰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혜가 요구된다. 서양의 정치철학이 동아시아의 수양론과 만나서 인간의 깊은 마음에 바탕한 신성한 경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지 못하면 역사는 사건으로 다시 보여준다. “한 민족이 진정한 역사에 도달하는 것은 타고난 심리적 재능이 아니라, 그 민족이 역사를 체험하거나 혹은 역사를 만드는 숙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단행하는 확고한 결단에 달려있다”⁹⁾ 이제 근본적 전환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

5) Charles Eisenstein, Sacred Economics, Random House Inc, 2011.

6) 같은 책, 18장 참조. 경제적 지대의 제거는 조지 헨리의 『진보와 빈곤』에서 제기한 탁월한 통찰인 토지소유에 따른 지대 제거를 오늘날 경제 상황에 맞게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며, 사회배당금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7) 엔데의 유언, 80쪽.

8) 동아시아의 특징은 인간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기초한 문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맹자의 성선, 불교의 불성론, 동학의 시천주 등으로 표현되었다.

9) 토를라이프 보만 지음, 허혁 옮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분도출판사, 1982년, 2판서문, 5쪽.

어린 새싹들을 바다에 묻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에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비교할 수 없지만 이번 참사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3년 전 소중한 아들 같은 조카를 잃었습니다. 추석 3일 후의 아침에 비보를 접하였습니다. 29세의 창창한 젊은이가 뇌출혈로 밤새 안녕이었습니다. 작별의 시간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한 이별이었습니다. 지금도 큰누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먼저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만을 이야기합니다. 매형의 가슴도 타다가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관이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저는 미래에 저당 잡히는 경향이 많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루하루를 잘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주위를 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건에도 주위 가족들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생명을 모시는 삶을 지향한다고 십수 년을 여러 동사님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위당 선생님을 생전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원주의 어르신들과의 교류가 벌써 10여 년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주의 여러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했을 것이라는 조금의 추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평생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적에는 소달구지, 쟁기질, 서래질 등 동물을 통한 일과 아버님의 지게질, 어머님의 광주리 등 순전히 기계는 배제된 노동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모를 심는 모내기에서 호미를 가지고 하는 지심, 논에서 벼를 낫으로 베고 말리고 묶고 해서 집까지 지게로 등짐을 해서 낫가리를 쌓아놓고 흘태를 가지고 벼를 훑는 과정이 눈 올 때까지 지나간 과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조금씩 기계화가 되더니 지금의 농촌은 정말

로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거나 휴일, 방학 때에는 당연히 농사일을 거들어야만 했고 심지어 농번기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번기에는 한 동네가 한 집 안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많은 논농사, 밭농사가 가능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존재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의 변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농업사회에 가졌던 사고,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느끼는 사고,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의 혼란감, 스마트 사회라는 데 가지는 막막함과 독재에 반대만 하면 되었던 시절에 가지는 정의감, 시민운동에 동참한다면서 가지는 여러 자괴감, 공동체운동을 한다면서 대안도 없는 허탈감. 생명운동을 한다기에 따라다니기는 하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여러 사고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혼재된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조선시대부터 일제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사대주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끝에 있는 신자유주의, 분단을 이용하는 극단적 보수주의 등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 혼돈입니다. 거기에 물신만능의 풍토는 모든 원칙을 왜곡하고 적당한 처신으로 실용을 강조하는 속물적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숙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어린 소녀 300여 명이 납치당하고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열차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서운 사고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동남아의 쓰나미,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폭발 등 이미 여러 경고들을 우리는 무시해 왔습니다. 이미 경고의 임계점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도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가치인 생명까지도 무시하는 것일까요?

생명은 유한하면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갑니다. 미래의 생명이 온전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의 숙제입니다. 인간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 선각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많은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모범답안이 우리에게 왜 실천

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 작지만 아름다운 실천을 하려고 시작한 원주의 움직임이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하는 것은 아무리 암울해도 희망을 가진 삶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무위당 선생님의 삶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도 조용히 밑으로 기어라 하시며 한 원주캠프의 모습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원주보고서, 한살림을 지속적으로 성원하시며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격려한 것 등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 제시라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은 아픔과 혼돈의 시기에 선생님은 무어라 하실지 궁금합니다. “나락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 “나는 미쳐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옆으로의 답례“ 등 선생님의 좋은 말씀 중에 이미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가르침을 주신다면 어떠한 말씀일지 정리해보았습니다.”큰 담론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작은 것에 충실해라.”, “바닥을 기면서 옆을 보고 질기게 해라“. 저의 요즘 고민의 답입니다. ●

좁쌀 한 알_장일순 선생님에게 길을 묻다!

: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

윤박경 | 대화문화아카데미

2014년 5월, 한국사회는 아프다.

세월호처럼 한국사회의 희망과 믿음이 가라앉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과 무책임이 아프고, 그로 인해 꽃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어린 청소년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살아도 죽은 목숨’들의 깊은 슬픔과 상실, 영혼에 새겨진 상처가 내내 쓰리고 아프다.

아픔에 공감하고 결코 도망칠 곳도, 안전한 곳도, 믿을 수 있는 곳도 없는 불안한 현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과 분노, 절망을 느끼는 듯하다. 언제 터질지 모를 사고와 재난에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사회. 수많은 비극과 여기저기서 생명을, 삶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느끼며 그 근원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길이 안 보일 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 스승이 길을 안내해줄 수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가 아픈 한국사회에 생명살림을, 희망을 다시 부활케 하고 삶을 바꾸는 만남의 장이 되면 좋겠다.

‘오래된 새길’을 찾아가는 여행(여기에 행복을!)의 노자는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는 무위당 선생님의 말씀과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마음이다. 홀로 아프면 절망/병이 되지만 함께 아파하면 치유와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삶/한살림의 스승_장일순 선생님”께서 걸었던 그 옛길을 ‘지금 여기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의 삶, 말씀, 길

- 나 세상에서 깨진 놈들 속에 있노라
 _ 일등공해, 인물이 아닌 떨거지(거지), 쪽정이
- 좁쌀한알, 밑으로 기어라,
- 지도자는 어머니다, 무주상행(무주상보시).
- 집주인은 아내. 저 사람이 부처네, 잘 모시게! (결혼 주례사)
 칠거지악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다.
- 누가 하느님인가? 하느님(한울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하라
- 새로움, 청년의 가슴을 회복하는 것
-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글씨는 삶에서 나온다
-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관계와 공감, 생명감수성.. 돌봄과 보살핌으로 살림의 세상을..)
- 연대 : 만나라, 함께 하라
- 혁명 : 새로운 삶과 변화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 운동의 과정과 방식

“진실을 위해 싸운다면 그 방법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 자성과 일상의 수행

향아설위 : 내 안의 모든 답이 있다./ 영혼의 깊은 자성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라.

- 사회운동

‘파워게임과 야합이 판을 치는 정치판’ 보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밑바탕에서 돕는 일이 더 필요하다’

- 사회운동가가 서 있을 자리(Standpoint_positioning)

“사회에 밀접하면서도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면서도 본인은 항상 그 밖에 있는 것 같고,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고, 구슬이 진흙탕 속에 버무려 있으면서도 나오면 그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사람_장일순” (리영희 선생님이 기억하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여기 지금, 나의 말걸기

- 장일순을 만나다 _ 좁쌀한알, 밑으로 기어라

장일순 선생님과 만남은 7년 전 어느 가을이었다. 그때 당시 나는 ‘오만이라는 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차서 세상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된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다. 또, 내가 옳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을 내 옹졸한 잣대로 판단하며 함부로 비판하고 기고만장하다 걸려 넘어져 내 안의 분노로 많이 아파하던 나날이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낸 마음의 지옥을, 내가 뭔가를 했다는 자만, 뭔가를 이루려는 데 함께 하려는 마음보다 독불장군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외롭고 힘겨웠을 때 생명운동을 하는 한 선배를 만났다. 밥과 술을 사주며 내 말을 듣던 선배는 ‘지랄하지 말고 이 책이나 읽어봐! ‘하며 두권의 책을 선물로 주었다. 그 책이 <좁쌀한알>과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이야기> 였다. 좁

쌀 한알에서 내 뇌리 속에 남은 것은 '밑으로 기어라'라는 말씀과 원주시장 국밥집 아주머니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소탈하고 정겨운 장일순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 책이, 그 말씀과 삶이 그다지 들어오지 않았다. 7년여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더 깨지면서 그때마다 잠언서처럼 <좁쌀한알>과 <노자이야기>를 꺼내 읽었던 것 같다. 장일순 선생님의 말과 삶이 내 삶으로 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듯 하지만, 장일순 선생님을,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를 배우기를 바랬던 그 선배의 믿음과 사랑은 여전히 내 삶에 등대처럼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 40대 긴 세대 : 나도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요즘 들어 철없던 내가 철이 들어가는 것인지(?) 현재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주고 길을 보여줬던 선배와 스승을 많이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 40대의 생명운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도 우리는 40대 긴 세대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 나이나 운동의 경험상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사회를 보는 안목과 사랑을 배웠고 후배들과의 만남이나 소통도 비교적 원활한 세대. 무엇보다 우리도 선배들에게 무좌 대들고 말 안듣던, 선배들의 운동 방식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개기며 지금도 여전히 '재미와 의미'가 있는 새로운 운동, 다른 삶을 꿈꾸고 있는 경계인들이자 중간인들로서 40대 긴세대. 새로운 운동, 새로운 주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어느때보다 고민하는 지금, 40대 긴 세대로서 선배와 후배, 이전의 사회와 앞으로의 사회, 이전의 운동과 앞으로의 운동을 이어주고 소통하게 하는 다리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긴 세대, 중간/경계가 있다는 것은 앞뒤, 이전과이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배들은 선배들의 운동경험 속에서 지금 현재와 다음 세대에 열린 마음으로 청년의 가슴을 회복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후배들은 다른 삶, 사회를 향한 자신들의 고민과 실험들,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는 안목을 배울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가야 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은 '꼰대스러움'을 무좌 싫어한다. '꼰대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내지는 '저런 어른도 있구나' 하는 말이 괜찮은 선배들에게 하는 칭찬의 말이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강요하고 너는 몰라, 하는 식으로 일방통행의 소통과 관계 맺음이 싫은 거다. 그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이 관리, 운영하는 조직/단체를 '무쇠고

롯 '이라 표현하며 숨막혀 한다. 하지만, 끈대스러움과 무쇠그릇이라는 지적이 비단 선배, 기성세대들만이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를, 자기의 신념과 원칙, 예고에 갇혀 소통하지 않고 변화에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끈대스러운 것'이다.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처럼 '청년의 가슴'을 회복해가기/잊지 않기가 더 중요하다. 좁쌀 한알의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와 삶을 나누는 선, 후배의 만남을 자주 갖는 게 그 출발이 아닐까. 아울러, 장일순 선생님의 삶을 보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함께 했다. 우리끼리만 만나서는 고립되어 버린다. 조금은 이질적이고 때론 상종 못할 것 같은 사람과 운동, 삶을 만나면서 우리를 옆으로, 옆으로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세상을 살맛나게 바꿔가려는 우리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 우리들의 하느님들과 아픔을 여기의 행복한 삶으로!

자살률 세계 1위, 세모녀 자살사건, 세월호 참사 등등..생의 희망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한국사회의 슬픈 현실들을 보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시고 살려야 될 하느님은 누구일까 하는 물음을 던져본다. 개인적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은 같은 여성으로서, 가장 낮은 자들의 슬픈 죽음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한 명의 사람도 그녀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비정한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는 못할망정 월세와 공과금을 남겨놓고도 미안하다는 마지막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죽음이 더욱 슬프고 무섭기까지 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여성과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살처분당한 동물들,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자연, 자살하는 청소년과 버려지는/방치되는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비극으로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이 시대의 하느님들이 아닐까.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밑으로부터 사람을, 삶을 살려내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공감과 생명의 감수성, 그리고 내가 바로 너라는 연결과 긍정의 관계 맺기를 통해 힘겨워도 살아 볼만하다고 느껴지게 하고, 손맛잡아

줄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을 때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되,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함께 살기/운동_손맞잡기’을 펼쳐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운동, 큰 운동일 필요는 없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층위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상의 작은 혁명들이/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생명적일 것 같다. 나는 한 개의 운동을 하지만 여러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운동의 네트워크로 변화를 꿈꾼다.

• 운동은 삶에서 나온다

: 인문학적 성찰의 깊이, 고백(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다), 아는 것을 ‘자기답게’ ‘함께’ 살아내기

한 선배가 원서를 읽다가 “Wonderfulness”를 ‘경이’ ‘경이로움’으로 해석하다 내가 떠올랐다며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다. 삶의 길목마다 그때그때의 삶의 지향을 담아 닉네임으로 쓰고 있다. 잊지 않기 위해! 20대에는 ‘길찾기’, 30대에는 ‘우보천리_소걸음’ 40대에는 ‘경이로움’으로 이메일의 닉네임이 변화되어 왔다. 물론, 아이디는 여전히 ‘길(rlf)’이다^^ 40대 낀세대인 지금의 닉네임인 ‘경이로움’의 의미는 첫째, 세상은, 삶은 경이롭다. 둘째, 나답게, 경이롭게 살자 셋째, 경_이롭게 세상에 쓰이자 이다.

장일순 선생님의 ‘글씨는 삶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운동은 삶에서 나온다’는 말로 조금 바꿔보고 싶다. 또한 진리를 위해 싸운다면 그 방법은 진리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운동이나 새로운 변화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여성운동, 생명운동을 하면서 정작 내 안의 차별하는 마음, 누르고 강요하는 마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태도, 내 안의 화와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산다면 어떠한 변화도,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세상을 향해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세상,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성찰의 시간, 내 삶의 고백(삶의 이야기나눔), 그리고 ‘아는 것을 나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가능하리라.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사회는 더 철저한 비관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지셨

다. 심각한 문제들에 우리는 너무도 빨리 긍정의 낙관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또”라는 불안한 재난과 사고, 비극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맥락에서 말한 것 같다. 물론 일면 동의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사람들이 경이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믿음/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다른 것이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경이로움, 삶의 찬미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40대 낀세대인 내가 세상을 보는, 살아가는 마음의 힘은 경이로움이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자기다움과 자기의 세상을 보는 안목,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이로운 세상 만들기에 잘 쓰였으면 한다. 물론 강요가 아닌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40대 낀 세대로서 경이로운 삶을 제안하며 지금 여기의 슬픔과 아픔이 삶의 행복으로 다시 되살려지기를 소망한다. ●

생명의 길벗들에게 띄우는 편지

전진택 | 생명평화결사

갑오년, 4월 16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온 나라는 삼시간에 깊은 슬픔과 분노, 우울함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로 세월호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건 발생 한주일 후 노란 물결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간절한 기도였고, 절로 우리나라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대한 기도의 그물망이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펄럭이는 나비의 날갯짓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교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에 상관없이 간절하고 절절한 한 마음의 기도가 퍼져가는 동안 커져가는 노여움과 함께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정서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부끄러움과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이 불편해지는 미안함인 듯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위험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현실인식과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내 안에 서도 발견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사이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만큼 자책하게 되는 이 현실의 지점이 어찌면 새로운 문명을 향한 전환의 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던 붉은 물결이 스스로도 낯설었던 우리 안의 신명이 바깥으로 드러난 밝은 기운의 표출이었다면, 2014년 아직도 번져가고 있는 노란 물결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자기 성찰의

기운으로 이어지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노란 리본에서 나비의 날갯짓 소리를 들으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림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오르려던 욕망의 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돌아와 스스로 고치를 틀며, 죽음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견뎌 내고 마침내 나비가 된 애벌레의 이야기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손 모아 빕니다.

오월입니다.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고마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고마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고마워하다가 울컥, 다시 미안해 눈물을 떨굽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선장을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했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사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총칼과 군화발로 힘없는 백성을 폭도로 만들었던 5월 광주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주먹밥 이야기’로 전해지는 5월 광주의 서럽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사랑만이 /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 나눌 줄 안다’고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을 다시 되뇌며 이 슬픔과 분노의 시절에 희망의 싹을 키웁니다.

날마다 더 깊은 기도로 마음 모으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무차별한 살처분으로 사라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과 개발과 건설의 이름 아래 죽어간 모든 생명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당한 돈과 권력의 횡포로 인해 곳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번져가는 노란 물결이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로 결집하며 밖으로만 향하는 성난 물결이 아니라, 자책하는 스스로를 보듬어 세우고, 미안해하는 서로를 껴안아 일으키며, 모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연민과 공흥의 따뜻한 기운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으로 채우며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곁을 내준 이들을 잘 모시고, 먼저 손 내밀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

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잘 나누는 일에 힘쓰며 자족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새로운 문명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더 나은 연대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무위당 선생님의 말씀처럼 주장하기보다 고백하는 말과 글이 서로의 가슴에 공명을 일으키며 번져가서 마침내 새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의 임계질량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살리는 기운과 정보와 기도를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부디 함께해주시길... ●

고백

우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고백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얘기,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실수하고, 또 욕심 부린 얘기,
그래서 감추고 싶은 얘기를 고백하며 가자는 거지요.

지금은 삶이 뭐냐,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헤아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뭘 더 갖고, 꾸며야 되느냐에 몰두하는 시대는
이미 절정을 넘어섰어요.
글 쓰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고백의 글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 무위당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29쪽 -

이야기마당 II.

지금 여기 생명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백초시불모 百草是佛母

맹주형 |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좁쌀 한 알

1980년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 나와 한 일이 탄광촌 공부방 교사였다. 나름 치열한 삶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방 선생을 하며 노동을 통해 참 사람 되는 길을 모색했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이 농사일을 배우던 충주 김상덕 회장님 집에 가 일도 돕고 소주도 얻어먹곤 했는데 그 김상덕 회장이 충북 지역 대표적 가톨릭농민회 일꾼이셨다. 그 인연으로 당시 대전에 있던 가톨릭농민회 전국 본부 일을 시작하였고, 그 시절 일을 잘 몰랐던 터라 농민회관 자료실에 수북이 쌓인 가톨릭농민운동과 생명·공동체운동 관련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밤이면 농민회관 사랑방에 앉아 농민회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이야기 속에는 ‘장일순(요셉)’이란 이름이 있었다. ‘좁쌀 한 알’, ‘무위당(無爲堂)’이란 호와 함께. 그게 선생과의 첫 만남이었다.

풀 한 포기 소중함

물론 나는 선생이 세상을 뜨신 1994년이 지나서야 농민회 일을 시작하였기에 선생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가톨릭농민회의 분위기 속에는 그 분의 사상이 녹아 있었다. 밥 한 그릇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농민들 앞에서 우쭐대지 말고 기어야 하는 겸손함과 운동에 있어 부드러움의 중요성, 그리고 풀 한 포기의 소중함을 배웠다. 선생의 원주 집 정원에는 잡초가 가득했다 한다. 선생을 찾아온 손님이 “잡초도 가꾸십니까?” 묻

자 선생은 “저놈들이 아침저녁으로 나를 반기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여. 공생의 윤리가 우주의 법칙이 아닌가.”하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풀과 관련해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라는 글을 남겼다. 백 가지 풀, 다시 말해 ‘모든 풀이 부처의 어머니’란 뜻이다. 풀이 지구의 사막화를 막고, 모든 동물을 먹여 키우니 땅 위의 풀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는 선생의 큰 생각이었다.

묵암 선사 이야기와 촛불

1970년대 원주 지학순 주교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선생은 80년대부터는 풀 한 포기 소중히 여기는 생명가치를 화두로 돌아가실 때까지 생명농업운동, 공해추방운동, 생명문화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리고 선생은 그 이유로 묵암 선사의 시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쥐를 위해 늘 밥을 남겨놓는다. 모기를 염려하여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 절로 돌아나는 푸른 풀을 위해 함부로 계단을 밟지 않는다.”

인간 중심의 산업문명과 자본주의 가치관에서 시작된 지구생태계 위기는 유례 없는 기상 재해로 이제 우리를 위협한다. 그리고 광우병, 유전자조작옥수수, 조류독감 문제 모두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맹목적 추종 결과일 뿐이다. 이 시절 선생의 생명 중심 가치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한권의 책 ‘좁쌀 한 알(최성현 글, 도솔)’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힘 빼고 밑으로 기어 부드러움으로 평생을 사신 선생 모습답게 책 또한 겸손하다. 참 쉽다. 촛불이 꺼져가며 자본과 물질의 지배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잔잔히 “그래도 힘내라. 힘 내야 하는 거야.”하시는 선생의 편안한 위로가 참 고맙다. ●

죽임의 문화 살림의 신앙

양재성 | 예수살기

죽임

한 해에도 우리나라 인구인 5천만 명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도 200만 명이 죽습니다. 내전으로 수백만 명, 자연재해로 수백만 명, 슈퍼 바이러스로 수백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각종 질병으로 죽는 사람까지 하면 수천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1,2차 세계대전, 6.25 전쟁, 6일 전쟁, 베트남전쟁 등, 전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수가 1억 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죽임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보고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는 다릅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괴물 문화,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문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례한 사회

요즘 홍익대 김호월 교수가 최근 유가족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을 놓고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무슨 벼슬 탄 것처럼 썰 난리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그러게요. 자식 잃어서 모두 미쳤나요 ㅎㅎ", "청해진 회사나 유명언한테 가는 게 정상 아닌가, 돌아도 정도껏 돌아라." "거기에 불순분자들이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갑니다.", "유가족들도 기본 자세는 잊지

않았으면..."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통령도 부모 두 분 모두 흉탄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청와대에 간 이유 정말 어이없지요... KBS 간부의 발언 문제 가지고 청와대 간다? 청와대가 그렇게 시켰는지?"라고도 썼습니다.

또한 유족과 국민들의 가슴에 든 피명을 보듬어 주어야 할 대통령이 재를 쓰고 참회하기 보다는 이런 애도의 분위기가 사회혼란을 낳고 사회혼란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불순분자가 유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유족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확인해 보니 진짜 유족이었습니다. 아픔의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자는 국장, 라면 먹는 장관, 그 장관을 비판했더니 계란도 안 넣어 먹었는데 너무 심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유족들의 아우성을 미개인라고 비하하는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 그 아들을 두둔하는 엄마,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잠수부가 죽은 것을 유족들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MBC 부장, 세월호 사망자 수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적은 수라는 발언 등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례한 발언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례한 사회가 되었나를 보여줍니다. 그 사회가 무례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스트

평범한 도시 오랑시에서, 어느 날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쥐의 떼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후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나갈 때어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지금 닥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페스트라는 전방위적인 재난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페스트라는 비극 앞에서, 어떤 사람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난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재난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페스트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겨내는 것. 온갖 압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 매순간 강물을 거슬러야하는 물고기처럼, 멈추지 않고 바위를 굴러야하는 시지푸

스처럼. 아무리 힘겹더라도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난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의 시대

우리는 근심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언제 퇴출될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암에 걸린 것은 아닌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은 어떻게 될지, 퇴직 후 노후는 어떻게 될지 등등, 이런 근심 속에서 태어나 근심 속에서 살다가 근심 속에서 죽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자신은 물론 사회를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면 가는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적을 알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길이신 예수

우리는 도상의 존재들입니다. 길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자기를 완전히 실현하는 길, 생명평화의 길, 모든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으로 가는 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한 세상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서 그 길을 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보여준 예수 사건입니다.

시인 김준태는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광주>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나안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한 사람이 모세였다면 로마 제국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 해방을 노래하신 분은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제국의 심장으로 뛰어 들어, 그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 죽음을 돌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죽이는 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이며 진리입니다.

세월호와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길이 살림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었던 십자가는 예수조차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모시고 살았던 예수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며, 또한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며, 예언자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로마제국은 십자가에서 반역자를 잔인하게 처형함으로 식민지 백성들의 저항과 반역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제국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불의하고 무능한 정권에 의한 학살이며 악덕 기업과 이미 괴물이 된 탐욕스런 인간으로 인한 참극입니다. 신자유주의 문명이 빛은 폭력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불의한 정권과 악덕 기업과 신자유주의 문명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 시대의 총체적인 부정과 불의에 대한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에서 예수가 비춰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계승한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아니 제자들 자신이 작은 예수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사건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생자들의 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불의와 부정에 저항

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는 새로운 길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삶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가리킵니다. 지금 살던 그대로 살면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가 터진다고 경고합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진짜 국가도 붕괴되고, 지구도 붕괴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사태는 생명의 호소이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살림의 신앙

2차 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나치 수용소엔 많은 포로들이 붙들려 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막사에 100명씩 배치되었습니다. 1명이라도 탈출자가 있으면 10명을 무작위로 차출하여 지하 감방에 가두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한 막사에서 1명의 탈출자가 생겼고 그 막사에서 10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자신에겐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감옥 동료 중에 꼴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풀어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꼴베는 그렇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고 주검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은 끝났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걸하던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꼴베 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속적 죽음은 예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 시대의 예수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시대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요, 사람의 의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깊은 인간애로 가득차고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삶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조작과 위선으로 일관했던 삶이 진실과 정직한 삶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결론

세월호 사태는 우리 시대 문명의 근본부터 새로워져야 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모든 말물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신성과 능력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모든 생명은 서로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갖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알고 공동의 지혜를 만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좁은 길, 가난하면서도 품위 있게 사는 길, 절제된 삶에서 희망을 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작은 마을 공동체를 실현함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현실 인식이 전혀 없고 그 대책도 엉뚱하였고 실종자 및 유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직을 걸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구의 운명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달려 있습니다. ●

생명평화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이항민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1. 몸. 마음. 영성이 충만한 삶을 위한 생명평화 기도를 일상화 한다.
 - 방향과 내용을 함께 마련하고 지원한다.
 - 마을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2. 생명평화 헌법을 제정한다.
 - 공존, 생명, 평화, 살림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이나 헌장을 통해 문명전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지향과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되 구체적 법률은 최소화 해 사람들의 자발성을 높여 갈수 있는 법률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3.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 남북 통일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와 평화적 접근방법을 연구 시행한다.
 - 생명평화적 사회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통일 이후도 혼란이 덜할 것이다.
 - 한반도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방법을 연구 시행한다.
4. 생명평화군을 창설하고 그에 참여한다.
 - 생명평화군은 마을 일꾼 역할도 함께 한다.
 - 생명평화군의 무기는 비폭력과 불복종이다. (지혜와 자비)

5.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의성을 낮추는 교육, 법원, 병원, 언론 등 무한욕망을 재생산하는 권력화된 사회시스템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조정한다.
6. 농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지정하고 식량자급률을 헌법에 명시한다.
 - 농업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을 재구성 해야 한다.
 - 식량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7.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론 적녹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을 한다.
 -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
 - 텔레비전 시청을 줄인다.
9. 생명평화 사상을 바탕으로 미래 세상을 운영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 하여 삶의 목표와 지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
10. 생명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 100년을 내다보는 상상력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생명평화 교육 기관을 설립한다. ●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왜, 지금 다시 돌봄과 살림인가

오랫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왔다. 왜 여성은 공적 사회적 주체가 아닌 가족을 돌보고 살림살이를 하는 사적 존재인가. 왜 여성은 시민이나 노동자가 되지 못하고 미래의 노동자를 출산하고 돌보는 존재인가.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에서 출발한 임금노동과 그림자노동의 이분법 속에서 여성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과 더불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여성억압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싸워왔다.

‘한 자녀 낳기’ 출산 정책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 정책으로 바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성은 정책의 주체가 되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도 하고 아이도 더 낳아 잘 길러야 하는 ‘일가정 양립’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족 단위의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아이를 낳아 미래의 인력을 기르는 것보다 일을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은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노인들과, 자립하고 싶은 십대와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할 권리를 위해 싸웠던 여성운동에 주어진 결과는 간병과 도우미, 보육 등 돌봄 노동 중심의 사회서비스업이 대다수였고 결국 이러한 일자리는 다시 더 열악한 이주여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계속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우

리 사회의 오래된 생산성/비생산성 이분법의 결과이다. 공들였던 보육정책은 여성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여성의 돌봄노동은 안팎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돌봄이 다시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가는 것이다. 양극화를 전제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 좋은 일자리란 결국 신기루에 불과할 뿐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돌봄과 살림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싸워왔다. 가정폭력과 여성폭력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싸워왔고,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차별 철폐를 위해 각종 사회 제도와 법, 인식을 바꾸기 위해 쉽 없이 노력했다. 또한 여성정치세력화를 목표로 90년대 3%대의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할당제를 주장했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남녀동수범여성연대 등 좋은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대의 여성국회의원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점점 더 열악해지는 신자유주의는 여성들의 정치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젠더 정치는 더 묘연한 상황이 되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여성의제는 제대로 사회의제화 되지 못하고 올해는 두 남성 정치인의 독단에 따라 할당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여성정치세력화가 정당정치와 남성정치 엘리트의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상황마저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폭력적인 생산소비 시스템과 점점 더 심화되는 지구의 위기를 성찰하는 대안적인 생명/환경운동이 생협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풀뿌리 등 실천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살림 생명운동과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파헤쳐졌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원자력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허구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값싼 향수만으로 집권하게 된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기반이다. 생명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역시 돌봄과 살림이다. 지난 30년간의 생명운동은 지금 어디에서 꽃을 피우고 있을까.

임금노동만을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여겼던 자본주의에 판지를 걸며 그 밑의 그림자였던 여성과 자연의 착취를 전면 부인하면서 생협에서는 무불노동자인 '활동가'의 가치를 찬양했고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했으며 풀뿌리에서는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정체하고 있고 생협에서는 자발적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민단체의 시민 참여는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 공동의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치의 피곤마저 초래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다시 돌봄과 살림이 회자된다. 우리는 지금, 돌봄과 살림이 우리의 핵심가치이며 여전히 부문운동으로 분화된 모든 사회운동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과 살림의 핵심 내용은 자본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더 이상 기본적인 삶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 일자리, 교육, 안전 등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장에 맡겨지고 이러한 불평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소수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영화와 개방, 탈규제, 유연화의 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는 가장 먼저 여성이다. 여성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빨리 비정규직화되고 가장 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폭력의 대상자가 된다. 이미 주류경제학에서도 ‘성장 없는 경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축소지향적인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로는 성장도 불가능해져니와,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 이제는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단지 경제의 위기만은 아니다. 이미 자원과 연료로써의 자연은 고갈되기 시작하여 인류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과 같은 한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위험이나 공기, 물, 화학물질 등 일상의 위험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5년짜리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임에도 정치나 정책은 정부와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사안의 복잡성과 정권의 단발성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과 살림의 경제, 돌봄과 살림의 운동이 대두되고 있다.

진보운동의 대안인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다. 세금을 많

이 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북유럽의 경험을 보면 복지국가는 보육과 육아의 사회권, 여성의 노동권과 정치 참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보인다. 실제로 여성의 능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삶의 기본적인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등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 속에서 모두가 함께 일자리를 나누는 완전고용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신식민지나 이주노동자라는 출구 없이 지금의 욕망 수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분배의 평등만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한편에선 소비와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자본주의적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임금노동에만 가치를 부여했다면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살리는 시민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합의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사회모델이다.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사야했던 공공재와 가치재들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면서 자본주의적 거래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자급적 삶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이는 모두가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착한 자본주의와 복지라는 1세계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나온 3세계 모델들이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부품으로서 노동하고 삶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유에 기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는 삶을 살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무보수로 여성들만 해왔던 살림과 돌봄을 공식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고 자본주의로부터 안전과 건강, 생명을 돌보는 기본 단위로서의 삶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동시에 돌봄과 교육, 문화, 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화폐의 영역에서 탈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공의 영역을 방치하고 단지 생태공동체의 공상적 모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학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돌봄과 살림에 대한 화두는 자본주의 이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운동을 통해 삶을 지켜갈 것인지, 복지국가와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공존은 가능한지 실천적으로 논의할 때인 것이다. 지금의 돌봄과 살림은 여성이 담당했던 영역이 중요하다는 선언 이상의 커다란 사회변환에 대한 이야기다.

여성정치운동은 2012년에 살림정치여성행동이라는 연대활동을 하였다. 지금까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에 ‘살림’이란 용어를 넣음으로서 정치의 개념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의 반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오랜 설득과 토론 끝에 생명을 북돋아 살려낸다는 의미와, 가꾸고 경영해나간다는 뜻인 살림을 ‘살~림’으로 표기했다. 어쩌면 자본주의적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돌봄과 살림은 정말 어려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환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법제화운동과 그를 위한 정치적 활동, 언론 활동을 중시했다면 상대적으로 시민과 여성을 만나는 현장의 풀뿌리운동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풀뿌리운동이 약하다는 것은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때론 단체 내부 구성원의 사전논의도 없이 정치계로 가는 사건도 많았다. 여성의 출마는 의미도 많았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이 정치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여성이 진출했느냐보다 누가 어떻게 진출하느냐이고 여성들의 삶의 욕구와 의지들이 정치에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치가 특정 시기, 특정 사람에겐만 발현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정치이고 생활이 곧 정치라는 것을 더 많은 여성들이 알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장에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정책은 전문가나 정치가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만 누리던 정치의 경험을 일반 여성들의 삶의 장으로 끌어오는 정치운동,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돌봄과 살림의 역할을 지금껏 해왔고 지금 역시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일에 많은 여성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의 70% 이상이 여성들이고 풀뿌리단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90%에 이른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실천들에 먼저 귀기울여야 한다. 그 실천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지지해야 한다. 운동이 외부 어딘가에서 오지는 않는다.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도록 돌보고 살린다면 여성들 스스로 답을 길을 내지 않을까. 가장 풀뿌리적인 방식인 돌봄과 살림의 정치는 모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돌봄과 살림의 연대를 제안하며

여성운동은 법제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단지 괴물을 찾아 처단, 격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가부장문화를 바꾸어내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주요한 성과였던 성주류화, 성인지예산 등은 여성 대중들은 모르고 정책 현장에서는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법이 생겨도 여성폭력과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이후의 모니터링과 참여가 더 중요한 것이다. 환경운동 역시 고민이 많다. 성장과 개발담론을 온몸으로 싸웠기에 한때 대중적 지지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개발향수에 대한 본능을 확인하거나 완고한 기득권과 싸울 때마다 절망스럽다. 환경법제화마저 후퇴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 일쑤다. 그러나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와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민을 조직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안전한 급식과 원자력과 일상의 화학물질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운동 역시 언론을 상대로 한 운동에서 벗어나 풀뿌리 운동과 주민참여 운동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즐거운 소식도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탈핵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이란 문구를 어른 중심 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보호와 보호주의는 다른 것이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핵없는 세상을 외칠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운동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반갑다. 우리는 같은 팀끼리 싸우면 저들에게 빌미를 줄까봐 사실 관심도 안 갖고 문제가 있어도 발설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에서는 미리조심주의는 있어도 보호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영역 속에서 운동을 해온 것이다. 서로의 운동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공유한다거나 자신의 운동과 타인의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기 어려웠다.

어찌 보면 우리 운동의 현실인 칸막이 쳐진 이슈 중심의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고 미래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상상력에 장애가 되었는지 모른다. 환경/생명운동은 여성운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잘 모르고 여성운동은 환경/생명운동이 환경의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왜 고민하는지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나기 시작한다. 풀뿌리 운동이 인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운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서로의 운동에서 배우고 함께 통합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강박을 멈추고 돌봄과 살림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찰에 이르렀다. 새로운 운동주체들이 나타나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운동가들이 변화할 것인가? 아마도 둘 다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우리가 그동안 합의했던 여성인권과 지속가능한 사회,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사회의 모든 실험과 실천들이 지역에서 모아져 풀뿌리 생활정치가 한 걸음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진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300여명의 목숨이 수장되는 것을 온 나라가 지켜보았다. 위험사회라는 익숙한 말과 체제의 무능력이라는 단어가 맴돈다. 아마도 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란 예감이 든다. 87년 여름, 97년 IMF, 2008년 촛불, 그리고 2014년의 세월호. 침몰의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선원들을 살인자로 몰아 처벌하고 두꺼운 매뉴얼과 해경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지, 6.4 지방선거 여야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지 그 이상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영리와 지배를 위한 시스템은 교묘하게 발달했지만 정작 생명을 보전하고 지키고 살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저 술한 생명들은 어떻게 하나. 새로 짜는 돌봄과 살림의 정치가 정말 절실하다.

지금 생명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에서 생명운동은 커밍아웃이 필요하다.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동은 사회 전체를 바꾸는 기획이지만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생명운동을 같이 할 수는 없다. 운동의 주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운동이 종교와 같이 ‘내 탓이요’ 운동처럼 정신문화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생명 감수성을

높이고 나와 더불어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자는 도덕적 계몽운동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다.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비자본주의적 경제공동체를 실험하고 대안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지역 곳곳에 확산하는 것이다. 갑오농민전쟁 중의 집강소 개혁은 완전히 자율적인 민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생명운동이 소비자협동조합의 틀에 갇히면 지금 고통의 삶의 문제에 접속하기가 어렵다. 먹거리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먹거리만으로는 세계를 다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삶에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정치 공간 속에서 자율성을 잃고 요구의 리스트가 되어버리곤 한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여성의 실질적 취업과는 무관한 무상보육, 경쟁과 타율을 배우는 교육, 건강이 아닌 의료의 대상이 된 몸. 우리는 객체가 되어 정책서비스의 고객으로 존재한다. 스스로의 삶과 교육과 건강을 위해 나와 공동체가 할 주체적인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씩 선거 때마다 얻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립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던 미래였을까. 12% 밖에 안되는 노동자 조직율로는 유럽처럼 노조와 진보정당의 연합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던 모델은 어쩌면 불가능할 지 모른다. 또한 사회안전망조차 없고 스스로를 대변해줄 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이상이다. 시장과 맞서 싸우거나 다른 시장을 만드는 것, 복지서비스 이외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살아내는 것, 시장을 감시하고 약자를 위한 정부의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분배, 호혜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사회운동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이 말을 처음 썼다고 했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추구한 신자유주의의 파장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들어왔다. 이제 10여년이 지났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맨날을 점점 더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끝없는 이윤이고 모든 정치와 문화의 본질이다. 지금 우리의 대안운동이 자본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런 자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그것을 해갈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생명운동은 사회운동이 아닌 위안의 종교가 될 것이다. ●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꽃피울 집과 마을과 나라를 세우세!

황선진 | 밝은마을

(세월호에서 젊은 꽃들이 산화했습니다. 순교(殉敎)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 모두와 이 세상을 정화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발아해 새로운 싹이 돌아날 것입니다. 그 싹이 생명 본래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새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산화한 젊은 꽃들은 이윽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는 꽃들은 이 세상에 주는 하늘의 선물이자, 그 자체로 곧 하늘입니다. 하늘로 부활하여 이 세상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밝음의 땅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시호시호(時乎時乎) 이내 시호

부재래지(不再來之) 시호로다.

1. 세월호는 사회의 민주화, 민중의 생존권, 생명 본연의 질서 등을 추구해온 사람들 및 대다수 평범한 대중들에게 많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초래된 국면에서 각 개인이나, 그룹, 단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본을 중심으로 물살 틈 없이 짜여진 이 체제에서 민중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국면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불의(不義)한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할 좋은 기회로 여겨 힘 있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주된 역량을 배치할 수도 있고, 아마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나, 불의한 정권의 퇴진까지 이끌어내기에는 그를 담당할 주체적 역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면밀하게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문민정부와 사회의 민주화

를 이룩하였고 노동조합과 같은 수많은 민중의 권익을 위한 조직을 건설하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민주화 정도, 권력 및 재화의 독점화 정도가 그 이전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아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체제를 만든 그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의 개혁은 그만큼 한계가 있으며, 언제라도 반동(反動)의 가능성이 있고, 그 반동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면을 맞이하여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 수구세력 중심의 정치/경제/사회적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중심적인 에너지를 투여하는 개인/그룹/사회단체/정당 등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야말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그룹에게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양한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개약진 하면서, 또한 합종연횡하면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명운동 및 대안운동은 지금 하늘의 이치를 땅 위에 구현하려는 생명들과 연대하여 스스로의 철학과 삶의 방식에 따른 독자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길을 잡을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운동은 신자유주의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수행을 하고, 탈핵의 깃발을 들거나, 친환경 먹거리의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마구 파헤쳐지는 땅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대안교육을 하는 등 눈물겹고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세월호를 통하여 생명운동에게도 성찰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너희의 삶을 살거라. 너희 생명을 너희와 철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말고 이제는 벗어나거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구축한 체제 내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너희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 너희의 삶의 방식을 옳게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거라!〉

올해 동학혁명 120주년입니다. 동학을 당대(當代)에 맞게 법고창신(法古創新)해야 하는 지금, 우리들. 우리가 이어받을 법은 무엇이고, 그 법을 어찌 새롭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어받을 옛 법은 <모든 생명이 곧 하늘>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이니, 모든 일에서 <하나됨과 어울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예부터 그러했듯이 스스로를 밝히고,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이 서로서로를 밝히는 일이며,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 법을 이어 새롭게 하는 일의 핵심은 <나>를 세우고, 나아가 <집, 마을, 나라>등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심으로서 본래 신성한 존재입니다.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가르칩니다. 습관적으로 ‘나’라고 알고있는 ‘나’를 넘어 신성(神性)으로서의 나를 세우는 일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집>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혈연공동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기초모임을 말합니다.

<마을>의 본래 뜻은 ‘참되고 뿌리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여기서의 마을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전통 마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을 공유하며 여러 집을 아우르는 공동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 교육/의료/문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정치 등 삶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터전입니다. 특정 지역을 베이스캠프로 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본래 뜻은 하늘(=태양)의 기운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하늘의 이치로 운영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은 국가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는 창(槍=무기)으로 빼앗고 지키는 영토를 가지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피라미드형 위계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재화를 소수의 세력이 독과점하고 있으며, 그 밑에 권력과 재화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군대와 경찰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원칙적으로 군대와 경찰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때를 당하여 외적으로부터 나라에 참여하는 마을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편성되는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나라’는 본래 평등한 사람들의 수평적인 연대입니다. 불평등이란 애초부터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등(無等)입니다.

3. 무릇 좋은 일도 그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는 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생명운동을 하는 분들이 폭넓게 지지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호혜시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집과 마을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과 물자를 나누는 일종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올해로 무위당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20주년입니다. 무위당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이들이 생협이 물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협을 통해 스스로 신용을 창조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각 환경운동, 귀농운동, 정당 등에서 등불과 씨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의 길은 <근본적이면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대가 바로 나>를 구현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일을 상대적으로 각성된, 생협, 환경운동, 수행단체 등의 중견 여성들이 신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에서 찾고 싶습니다. 각성된 중견 여성들이 앞장서서 한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일! 근본적이면서, 새 세상의 길에 벽들을 쌓을 수 있는 일! 그것은 아마도 호혜시장을 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의 이윤 동기에 따른 상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정성으로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을 하는 시장은 곧 천시(天市), 즉 하늘시장일 것입니다. 저 옛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삶을 영위하던 분들은 정성으로 물건을 만들고, 이를 선물로 나누었듯이 말입니다. 집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구성하고, 이미 마을을 이룬 사람들은 그 마을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각각 자신의 천품(天稟)에 따라 새로운 물건(=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나누거나, 교환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흐드러진 놀이와 문화/예술 마당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그 어떤 방향으로
도 가능성이 있는 장치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호혜시장을 열 수 있다면, 그리고 생명운동과 대안운동의 플랫폼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길, 즉 <하늘
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으로 가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길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
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되는 시스템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세월호 이상의 대참사에서 눈에 보
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무위당과 전환의 사회운동

주요섭 | 모심과살림연구소

“반생명적인 일체의 조건을 갖다가 다시 보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 엑서더스. 그것은 주목을 쥐고 상대를 때려눕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비협력으로 탈출해야 돼. 비폭력으로 탈출해야 돼.”

무위당의 ‘엑서더스’가 떠오릅니다. 1992년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월호의 참담함 속에서 [나라 한알 속의 우주]를 다시 읽다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탈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생명운동은 대탈출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위당의 엑서더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는 정녕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라는 느낌이 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시기에는 ‘생명감각’에 의지해야 합니다. 전환의 계기가 ‘각비(覺非)’ 즉 아니다 라는 자각이라면, 그 실천적 출발점은 엑서더스입니다.

농약으로부터의 엑서더스

핵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서울로부터의 엑서더스

고용노동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요양병원으로부터의 엑서더스

학원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자동차로부터의 엑서더스

자본승배와 경쟁시스템과 물질주의적 생활양식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이미 탈출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탈(脫)’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도시, 탈학교, 탈노동, 탈성장, 탈종교, 탈정당… ‘반생명적인 것’ 으로부터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탈출하는 순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가나안땅을 향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출애굽과 가나안이 공존합니다.

귀농이 그렇고, 힐링 신드롬과 협동조합 열풍이 그렇습니다. 결단하여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순간, 귀농공동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고단하여 위로를 받고자 하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마음공부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자본 중심의 경제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탈학교 대안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비정당적 정치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비종교적 영성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탈(고용)노동 생활협동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

1977년 즈음부터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무위당은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라는 성찰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으로는 아니다 라는 자각, 각비(覺非)입니다. 그리고 다시 근본을 묻기 시작합니다.

“난 사실은 77년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중독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분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뀌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뀌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잠시 기존의 활동을 멈추고 성찰합니다. 되돌아봅니다. 아마도 이때 젊은 시절 접했던 동학을 다시 보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귀(歸), 돌아감입니다. 근본문제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듯이 엑서더스는 사실 돌아감입니다. 제 삶의 터전으로, 생명의 근본자리로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얻은 깨달음,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 나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만 생명이 아니라,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 모두가 한 생명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공동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삶의 영역이 우주로 확장”됩니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다시 자연으로, 그리고 우주, 혹은 깊은 내면으로 확장 심화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일본과 대만 등에 활동가들을 보내고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의 사례를 연구합니다. 영감을 얻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위당과 원주의 선배님들은 지금 여기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갑니다. 1985년 원주소협이 문을 열고, 1986년 한살림농산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운동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이윤을 위한 결사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운동은 너와 나 안에 숨겨진 하나됨의 실현입니다. 상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너를 변화시킵니다. “사심 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나면”, 지금 여기 하느님나라가 됩니다.

못 생명의 아픔과 함께 하는 ‘치유의 사회운동’, 구조를 타하기 전에 삶을 바꾸는 ‘대안적 사회운동’, 부역과 농촌에서 문명을 바꾸는 ‘전환의 사회운동’, 우주로 확장된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깨달음과 영성의 사회운동’이 시작됩니다. 생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협동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한 협동운동, 이윤을 나누는 협동운동에서 서로를 살리는 협동운동, 생산과 소비가 하나인 협동운동 말입니다.

무위이화의 꿈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삶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피난(避難)과 장생(長生)의 땅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궁궁촌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거시험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서학도 아니고 비결서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귀(歸), 과거의 사사로운 욕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문득 하나됨체험으로 하게 됩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접(接)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전환의 프로세스라고나 할까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 1) 각비(覺非): “이렇게는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생명감각
- 2) 엑서더스(歸): 기존의 질서로부터의 탈출, 혹은 제자리로 돌아감
- 3) 각성: ‘생명은 하나’ 라는 깨달음
- 4) 새로운 공동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생활/문화 공동체
- 5) 사회개혁: 새로운 생활양식과 공동체의 사회적 확장, 그리고...

물론 각비와 돌아옴과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위당과 선배님들이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작은 숲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개혁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열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세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경향각지에서,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 이리저리한 웅달샘에서 발원한 새로운 흐름이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위당의 무위(無爲)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무위당을 동학을 빌어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위이화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다’는 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덕분에 저절로’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천지 기운이 활동하여 어떤 일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은 ‘발명’ 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 되는 것입니다. 무위당의 꿈은 1986년 12월 ‘한살림’이 세상과 만나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마당’입니다. 아니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함께 할 수 있는 120여 년 전 동학의 ‘마당포덕’입니다. 숨어있던 열망, 이심전심의 마음이 표출되고 실현될 수 있는 마당 말입니다.

오늘 원주에서 ‘생명운동대화마당’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마당입니다. 열망의 모이는 흙어지는 마당, 지혜가 모이는 흙어지는 마당, 에너지가 모이고 흙어지는 마당 말입니다. 깨달음과 새로운 삶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마당도 필요하고 얼굴 보는 마당도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작은 마당이 만들어지고 한편에서 학습이, 한편에서 공연이, 한편에서는 호혜시장이 열리는 크고 작은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주에서도 모이고 보은에서도 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모이고 지역

적으로도 모입니다.

크고 작은 마당이 열리고, 120년 전 동학혁명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사발통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새문화/새문명운동의 피리를 불어야 할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처럼, 사람을 살리는 만파식적처럼 생명평화의 공명(共鳴)이 일어날 때입니다.



무위당 20주기 기념
협동운동 대화마당

한
국
협
동
운
동
에
대
한

진
단
과
전
망

무위당만인회
모심과살림연구소

1부 | 토론회

“원주 협동운동 돌아보기”

원주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 과정

김소남 | 국사편찬위원회

1.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20세기 말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다른 한편으로 21세기를 전후한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범람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의 첨예화라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지나왔던 압축적인 산업화과정과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더 이상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관계 속에서 ‘경쟁’과 ‘탐욕’이 아닌 ‘협동’과 ‘공존’, ‘나눔’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과 지향이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해방 이후의 협동조합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즉, 위로부터의 개발독재 흐름 속에서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관 주도인 관제협동조합운동의 전개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이라는 흐름이 그것이다. 당시 관 주도의 협동조합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정책에 기반하여 추진되면서 그 자체는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한 조합원의 자율성과 주체성, 민주성 등을 크게 훼손하였던 한계가 있었다. 반면, 당시의 관제협동조합에 대항해서 지역단위에서 민간 주도로 자발·자율·민주성을 지니면서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원주 지역에서 전개된 1960~80년대 협동조합운동이었다.

1960~80년대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1965년 가톨릭 원주교구 설정 및 지학순 주

교의 부임을 계기로 한 1960년대 후반 평신도운동과 신협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1972년 8월 남한강유역의 대홍수를 통해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이하 재해위로 약칭)가 조직되고 남한강유역수해복구사업(이하 남한강사업으로 약칭)이 추진되면서 형성된 원주그룹¹⁰⁾에 의해 주도되었다. 재해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그룹은 1973년도 남한강사업과 한우지원사업, 1976년도 원주원성수해복구사업(이하 원주원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장기적인 부락개발사업에 기반한 농촌개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1950~60년대 장일순의 교육운동에 기반한 지역사회운동, 1960년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따른 원주교구의 창설과 평신도운동, 1960~70년대 초 신협운동의 전개와 조직기반 마련, 원주그룹의 형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전개과정은 1970~80년대 원주그룹이 3개도 13개 시군 80~90여개 농촌부락과 10여개의 탄광지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한 부락개발운동과 신협운동, 소비조합운동과 생명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역사적 배경

1) 원주의 지역사회운동

일제하 원주 지역의 사회운동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연계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해방 후 각 정치세력의 국가건설운동과 연계되면서 원주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지향을 가진 사회운동단체들이 속출하였으나 1946년을 거치면서 우익 주도의 사회로 변모하였으며, 문막과 부론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세력은 우익세력의 탄압에 대처하면서 물밑에서 활동을 도모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은 문막·부론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세력이 붕괴되고, 중요 인물들

10)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반박정희정권운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된 원주 지역의 사회활동가들을 1980년대 전반 외부에서 이른바 '원주캠프'라고 불렀다. 본 논문에서 '원주그룹'이라고 함은 1972년 8월 남한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1973년 1월 災患委가 중심이 되어, 부락개발운동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던 인물들에 한정해서 지칭하고자 한다.

이 완전히 파편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3년 한국군 최초로 제1군사령부가 창설 되면서 원주 지역의 전후복구를 주도하였고, 각종 반공교육을 통한 반공이데올로기와 냉전 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신흥군사도시’로 명성을 얻어갔다.¹¹⁾ 그 결과 원주 지역은 분단구조의 고착화 속에서 압도적인 우익주도의 사회로 변모되었으며, 사회주의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제하~한국전쟁기 면면히 이어온 사회운동과 운동세력은 거의 꺾멸되거나 파편화된 기반 위에서 장일순을 중심으로 원주 지역의 혁신세력이 점차적으로 새롭게 규합되고 활동해 나갈 수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원주 지역은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만큼 그 피해는 막심하였으며, 교육환경은 원주농업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당시 장일순은 분단과 전쟁의 책임이 외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일제 통치로 인해 ‘민주가 뭔지, 민족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고 지내왔던 조선민중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육운동에 뜻을 품었다. 1950년대 초 장일순은 성육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하는 한편, 1954년 3월 대성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그가 학교명을 ‘대성’이라고 하고, 교훈을 ‘참되자’라고 한 것은 도산 안창호가 평양에서 설립한 바가 있었던 ‘대성학교’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함이었다.¹²⁾

장일순은 원주 지역에 정착해서 전개하는 교육운동을 통해 원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들을 규합하거나 배출하고자 하였다. 즉, 대성고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훗날 원주그룹의 핵심이었던 김영주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규합하는 한편, 교육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반해서 원주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세대들을 배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장일순은 몇 가지 사상적 특징과 운동론에 입각해서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는 계급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운동이 아닌 간디와 비노바 바베의 ‘비폭력운동’과 ‘종교우회론’에 입각해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에 거점을 둔 일종의 ‘소도시거점론’에 기초해서 지역자치에 기반한 지역사회운동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지역에 거점을 둔 운동이 바로 동학이지요. 내가 지역자치에 관심을 두면서 터득한 것이 바로, 동학이란 결국 지역의 반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그래서 원주의 지역운

11) 장영민, 2004 『원주역사를 찾아서』, 경인문화사, 227~248쪽.

12) 당시 장일순이 안창호를 존경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닌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영화, 2006 「무위당 장일순(1928~1994)의 사상과 활동」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37쪽).

동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지요. 지역의 거점 또는 전국적인 일종의 저항운동으로, ‘소도시거점론(작은 지역운동에서 시작하여 넓게 펼쳐간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¹³⁾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요. 우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신 것은 사회안전법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당정치 면에서는 진보나 새로운 세력이 발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몇 사람 앞장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뿌리를 박고 사는 생활인들이 하는 삶의 운동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고는 길이 없다’ 라고 선생님은 보신 것 같아요.”¹⁴⁾

위의 언급과 같이 1952년 원주로 귀향한 이후 한 번도 원주를 떠난 적이 없었던 장일순은 원주를 중심으로 ‘소도시거점론’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운동과 사회운동 등이 몇 사람이 앞장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해서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과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는 지역자치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2)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원주교구의 창설

교황 요한23세가 공의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59년 1월이었다. 현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개혁하고 쇄신하는 것, 교회의 현대화가 공의회의 목적이었다.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지 3년 9개월 만인 1962년 10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목현장에서 “구제해야 할 것은 인간이며, 개혁해야 할 것은 인간사회”라고 밝혔듯이 당시 세계정세에서 핵병기를 보유한 인류 상호간의 영속적인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과 빈부의 차가 극심화된 국제사회에 정의의 합당한 질서를 실현하는 것, 분열된 교회 내의 일치를 가져온다는 3가지 점에 핵심적인 목적이 있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채택한 혁신적인 현장과 교령, 그리고 선언은 전 세계의 교회개

13) 최종덕, 2004 「도덕과 정치-김지하 시인에게서 듣는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엮음), 녹색평론사, 189쪽.

14) 윤형근, 2004 「언제나 생명 가진 모든 존재와 함께-박재일 선생님이 들려주는 무위당 이야기」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무위당을 기리는 모임 엮음), 녹색평론사, 182쪽.

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공의회의 논의에 참가하였던 전 세계 각지의 주교들은 그들 나라의 교구로 돌아가 각 교구 내 평신도운동과 교회일치운동, 그리고 교구가 소재했던 지역과 국가를 둘러싸고 직면했던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¹⁵⁾ 이 과정을 통해 1960~70년대 세계 천주교회는 공의회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폐쇄적·권위주의적인 교회상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제와 함께 교회의 혁신과 사회문제 등에 적극 나서는 교회상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는 한국 천주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1965년 3월 원주교구가 설정된 후 젊은 신부였던 지학순이 초대 주교로 선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학순 주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과 가르침을 철저히 수용하였으며, 원주교구가 이를 실현하고 평신도 중심의 교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먼저 자신을 대신해 공의회의 정신에 따른 주교의 구상을 추진할 인물과 조직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혁신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일순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원주교구가 평신도 중심의 교구가 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지학순 주교는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 활동을 제약받았던 장일순을 원주교구 사도회 회장에 임명함으로써 그가 원주교구를 배경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고, 1967년 신자도 아닌 김영주를 교구 내 사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교 비서실장이자 기획실장에 임명하였다.

한편, 지학순 주교는 원주교구 관내를 순방한 후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적극 참여하여 정신적인 지도적 위치를 갖자”, “대중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자” 등 사목치침 5개항을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목목표로 사제연수와 교회운영의 자립화, 평신도지도자 양성과 평신도단체 조직 등을 설정하고 이를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실행토록 하였다. 1965년 10월 지학순 주교는 왜관 김영근신부의 지도로 원동 주교관에서 사제 피정과 1966년 4월 지구 사제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사제연수를 통해 사제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사제들이 공의회의 정신에 기초한

15)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주교들이 앞장 선 천주교회의 혁신운동·해신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1970년 필리핀 주교회의의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서, 1971년 개최된 세계주교대의회회의에서 공포한 문건인 “세계의 정의”, 1973년 돔 헬더 까라마대주교가 주도한 브라질 주교단의 인권선언, 1974년 제3차 세계주교대의회회의에서 “인권과 화해”라는 메시지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주교들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기반으로 교회의 혁신과 빈부의 차의 사회문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도한 것이었다.

교회의 쇠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특히, 이들 사제연수에는 강사로 이영희, 김병태, 김금수, 이문영, 김윤환, 김낙중, 박청산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교수들이 초빙되면서 진보적 학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제들이 교회의 쇠신과 근대화를 활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학순 주교는 여전히 교회가 성직자들에 의해 존립한다는 전통적 교회관에 젖어 있는 사제와 신자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평신도운동”이자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형 신심운동”이었던 꾸르실료운동에 기반한 평신도의 교육과 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학순 주교는 196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꾸르실료에 장일순을 참여토록 하였고, 제3차 꾸르실료에 최창규 원동성당 주임신부를 파견함으로써 평신도에 입각한 교구상의 정립을 위한 꾸르실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꾸르실료교육의 활성화는 그 특성상 사제와 평신도가 차별 없이 사도직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원주교구는 평신도인 장일순·김영주·김영일 등 원주그룹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그룹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광범위하고 열성적인 청년들이 다수 포진되면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었다.

3) 신흥운동과 안티고니쉬운동

지학순 주교는 부임 초기 원주교구가 관할하고 있었던 농촌과 광산촌, 어촌지역을 둘러보면서 대부분의 농민과 광부, 서민 등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조건 하에서 곤궁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지학순 주교는 전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고리채에 시달리던 지역주민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당시 지학순 주교는 1962년 부산 초당동성당의 주임신부로 봉직하면서 지켜보았던 부산지역의 신흥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1966년 원동성당 내 신흥의 창립을 필두로 황지신흥(1966.11), 문막신흥(1966.12), 단구동신흥(1968.2), 삼척신흥(1969.10)이 설립되도록 추동하였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 교구 내 신흥운동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진광중학교 부설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1972년 신흥 강원지구평의회 창립을 지

원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기반으로 원주를 넘어 강원도지역의 신탁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다.

1960년대 신탁연합회와 협동교육연구원의 이념적 기반이 기본적으로 캐나다 안티고니쉬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고, 이에 기초해서 신탁을 조직하고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안티고니쉬운동의 핵심은 지역민들이 교육과 자체 학습모임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의 현안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며, 신탁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협동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즉, 안티고니쉬운동에 기반한 신탁운동은 그 자체 조합원들만의 협동활동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참여와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운동의 논리와 경험이 결합되어 있었다.¹⁶⁾ 당시 장일순은 이러한 안티고니쉬운동에 주목해서 신탁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전통적 협동조직인 두레와 계, 품앗이와 향약 등 다양한 한국의 협동문화를 바탕으로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탁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론을 보여주고 있었다.

원주그룹은 원주 지역 신탁운동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1969년 1월 신탁연합회의 지원하에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조합원강습회와 임원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원주그룹은 4일간의 강습회를 통해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만이 강원지구평의회와 주재지도역이 부재하면서 강원도지역의 신탁운동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원도지역의 신탁운동을 주도할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69년 10월 원주그룹은 원주교구 내 진광학교의 협동교육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였다.¹⁷⁾ 1970년 상반기에 3차례의 협동세미나를 개최한 후 협동교육연구소의 장상순과 박재일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1970년 5월 진광신탁, 8월 영산신탁과 세교신탁이 잇달아 설립되면서 강원지

16) 안티고니쉬는 캐나다의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반도 내의 소도시이다. 1919년 대공황 이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안티고니쉬 지역주민들이 비참한 생활상태에 빠지자 그 지역의 세인트 프란시스 세비어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의 톰킨스(James Thomkins)와 코디(M. Coady)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농어촌의 사회구조적 제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21년 민중학교를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자립 기반마련과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안티고니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유영 역.엠.엠. 코디, 1968 『안티고니쉬운동』). 1950년대 말 장대익신부와 가브리엘라수녀는 모두 세비어대학에서 안티고니쉬운동을 직접 배우고 귀국한 후 이에 기반해서 신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초기 신탁운동의 사상적·교육적·이론적 기반이었다.

17) 협동교육연구소의 설립자는 지학순 주교였으며, 진광중학교의 교장과 교감이었던 장화순과 김용연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상임간사로서 장상순이 실무일을 주도하였다.

구평의회 창립의 기반조성을 마련해 나갔으며, 1972년 4월 협동교육연구소가 주도한 원주 원성지구 신헌임원 강습회(4.26)가 실시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되었다. 그 결과 1972년 6월 12개 단위조합 중심으로 신헌 강원지구평의회가 창립(6.17)되면서 원주그룹은 강원지역의 신헌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였다.¹⁸⁾

4) 원주그룹의 형성과 인적 연결망

1965년 원주교구가 설정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톨릭교회의 자체 혁신을 도모할 인물을 찾고 있었던 지학순 주교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사회운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장일순이 만나 의기투합이 되면서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원주교구 초기 사목활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지학순 주교는 교구 내 평신도운동과 신헌운동 등을 장일순을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요청하였고, 김영주,¹⁹⁾ 김영일,²⁰⁾ 장상순,²¹⁾ 박재일²²⁾ 등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원주 지역 사회운동가들이 자

18) 당시 간사장은 협동교육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김용연이 맡았으며, 강원지구평의회 사무실은 협동교육연구소에 두고 자원지도역인 장상순으로 하여금 평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19) 김영주는 1934년생으로 세계일보사 기자(1957.4), 원성군 공보실장(1961.4)과 춘천시 공보실장(1963.5)을 역임하였으며, 1966년 5월부터 천주교 원주교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973년 1월부터 재해대책사업 집행위원장으로써 1979년까지 활동하다가 1979년 조직 개편 이후 社開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소협중앙회 고문(1984.6~1986)과 신헌연합회 연수원장(1986)을 역임하였다.

20) 김영일은 1941년생. 김영일의 필명은 김지하이다. 1956년 원주중학교, 1959년 중동고, 1966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하였다. 1966년 김영주가 원주교구 기획실장에 임명된 직후 기획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71년 10월 '원주시위'를 주도하였으며, 1973년 災害委 구성시 왕성한 대외적 활동으로 인해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학순 주교의 배려로 다른 상담원과 같이 이에 해당되는 급여를 1980년대 초까지 받았다(災害委, 1979 「직원명부」 『인사관계철』). 1980년 12월 출소 후 김영일은 장일순의 권유에 따라 社開委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70년대 원주그룹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위에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을 기초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21) 장상순은 1936년생. 1956년 원주대성고, 1958년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다. 1969년 9월 제23차 신헌지도자강습회와 제2차 한국-이스라엘 공동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관한 연찬회(9.22~10.4), 1971년 10월 GRI지도자훈련과정(10.15~27) 등을 수료하였다. 또한 장상순은 1969년 10월 진광중학교 부설 협동교육연구소 간사, 1970년 신헌연합회 자원지도역, 1973년 8월 한우지원사업 상담원, 1974년 원주밝음신헌 이사장, 1977년 신헌 강원지구평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2) 박재일은 1938년생. 경북고 졸업. 1960년 서울대 문리대 지리학과 입학. 1970년 장상순과 함께 협동교육연구소에서 신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3년 초 災害委 구성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지도부장으로 참여하였다. 1975년 사업2부장, 1979년부터 사업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85년 6월 원주소비조합 이사장, 1986년 12월 한살림농산 대표 등을 거치며 1980년대 원주그룹을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의 전개에 주도적으로 활약하였다.

연스럽게 결합되면서 <표1>과 같이 제1차 원주그룹이 형성되었다.

〈표1〉 원주그룹의 분류별 현황

구분	성명	출생년도	학력	활동일	직책	비고
원주 출신	장일순	1928	서울대 미학과	1972.8	원주교구 사도회 회장	1차(1965)
	김영주	1934		1972.8	재해위 집행위원회 위원장	1차(1965)
	이한규	1932	국민대 경제과 졸업	1973.3	재해위 상담원	
	이경국	1939	중앙대사회학과	1973.5	재해위 상담원	
	장상순	1937	서라벌예술대학 연영과	1973.11	한우지원사업 상담원	1차(1969)
	김상범	1939	원주대성고	1974.11	한우지원사업, 재해위 상담원	
	박양혁	1943	원주대성고	1975.7	재해위 상담원	
	임광호	1957	경북대 영어교육과	1983.3	재해위 상담원	
	최기식	1943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1983.11	사회사업국 국장	
비원 주출 신	지학순	1921	로마 푸로파간다대학	1972.8	재해위 위원장	1차(1965)
	김영일	1941	서울대 미술대학 미학과		원주교구 기획위원	1차(1965)
	박재일	1938	서울대 문리대 지리학과	1973.1	재해위 지도부장, 사업2부장	1차(1970)
	김인성	1934	대구 한남신학대학	1973.1	재해위 사업1부장, 공소사목부	
	한마리아	1939		1973.1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김현식	1939	서울대 대학원	1973.3	재해위 상담원	
	홍고광	1940	서울농대 임학과	1973.5	재해위 상담원	
	김현일	1943	서울대 상대	1973.5	원주교구 교육원, 재해위 상담원	
	정인재	1943	고려대 농업경제과	1973.6	재해위 상담원	
	강태용	1943		1977.1	재해위 상담원, 공소사목부	
	유재동	1954	파독간호사	1979.1	벽지보건사업 담당, 재해위 상담원	

비고: 1)활동일은 災害委와 관련한 '활동개시 연월'을 뜻함.

2)비고의 1차와 연도는 초기 원주그룹의 형성과 시기를 의미함.

당시 원주그룹은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한 원주교구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지학순 주교의 권유에 따라 원주교구 사도회 회장직을 맡았던 장일순은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 교구 내 평신도운동과 꾸르실료교육 등을 주도하면서 교구청년연합회와 본당별 청년회를 조직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장일순은 교구청년회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우회의 명단을 보여주는 <표2>과 같이 1950년대 대성고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맺은 인맥과 대성고 졸업생 등을 교구 산하 청년회로 끌어들이고 있었으며, 청년회를 통해

원주농업고등학교와 원주고등학교 등 원주 지역의 유망한 청년들과 일정한 관계망을 가지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선대로부터 내려온 지역기반과 명망²³⁾, 평신도회 장직을 통한 교구조직의 활용을 통해 원주신협과 협동교육연구소, 밝음신협과 신협 강원 지구평의회의 창설을 주도해 나가면서 1970년대 초 조직기반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70년대 초 평신도운동과 신협운동, 꾸르실료교육의 추진과정에서 서울의 진보적 학자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유수의 학자들과의 연결망과 교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으며, 1970년대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추진에 커다란 인적·지적·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표2〉 신우회 명단 현황

성명	소속	비고	성명	소속	비고	성명	소속	비고
강준희	진광고교		박재일	社開委		이창복	가톨릭노동청년회	원주고
강태용			선종원	천하태평		이환승	원일주류	
고재복	진광고교	원주농고	신현구	진광고교	대성고	임득중		
김상범	社開委		손상훈	가톨릭센터	원농고	장병욱	단구동 총무	대성고
김선국	삼화인쇄	원주농고	이경국	社開委		장예순	MBC	대성고
김성만	진광고교		이계열	진광고교	원농고	장병한	형제부력	원주고
김영일	社開委		이금래	덕수칼국수		정준교	대호용달	대성고
김현일	社開委		이병주	선아아파트	원농고	최규택	셋별사진관	대성고
박광석	KBS		이상욱	장성강원은행	원주고	최기식	천주교 교육원	社會事業局

출전 : 「신우회 회원 명단」(김상범 소장자료)

비고 : 1) 원주농고는 원주농업고등학교, 원주고는 원주고등학교, 대성고는 대성고등학교를 의미.

2) 소속은 1980년대 초의 상황을 나타냄.

1973년 1월 재해위가 조직되면서 원주그룹은 <표1>과 같이 그 조직과 범주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1970년대 원주그룹은 본격적으로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그룹은 1973년 1월 재해위가 출범하면서 이에 상담원으로 선발되었

23) 당시 원주교구를 통한 장일순의 활동에는 인동 장씨 형제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장화순은 원주교구 소속 진광고등학교 교장이자 1970년대 災害委 중앙위원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동생인 장상순은 협동교육연구소 실무자이자 후에 災害委 상담원과 밝음신협 이사장, 신협 강원지구평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막내동생 장예순은 대성고 출신으로 원주교구 소속의 원주문화방송 설립시부터 참여하였으며, 신우회 회원으로 교구와 災害委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큰 틀에서 그 범주 안에 있었다.

던 학생운동 출신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점차적으로 넓어졌다. 당시 비원주출신으로 박재일, 김인성, 한 마리아, 김현식, 홍고광, 김현일, 정인재, 강태용, 유재동 등이 초기 원주그룹에 의해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었으며, 원주출신의 경우 이한규, 이경국, 김상범, 박양혁, 임광호, 최기식 등이 시간차를 두고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원주그룹은 기본적으로 1차시기 원주그룹의 사상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전반 재해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업문제연구소와 노동문제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신협연합회 등 전문기관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아 1960년대부터 박정희정권이 추진하고 있었던 근대화정책에 내재한 농촌농민정책과 정부의 주유종탄(注油從炭)정책 등 광산지역의 탄광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협동이념’, ‘농업의 협업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의 병행 발전’ 등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주그룹은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의해 피해화되고 있었던 농민과 광부들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신협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하도록 하면서 당시 만연해 있던 고리채문제와 중간상인의 횡포, 민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의 횡포 등에 맞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들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었다.

3. 원주 지역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

1970년대 전반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72년 남한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구성된 재해위는 <표3>과 같이 가톨릭 외원기관인 미제레오와 카리타스, 네덜란드 가톨릭 외원기관인 세베모 등의 외원자금에 기반해서 남한강사업과 한우지원사업, 원주원성사업, 소비조합육성사업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²⁴⁾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협동운동은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운동’으로 나아간 특징을 가진다. 원주그룹

24) 1973~1993년간 원주그룹이 미제레오와 세베모 등 외국의 천주교 외원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횟수는 연속사업까지 포함해서 22차례에 이른다. 이중 미제레오는 12회에 걸쳐 총 지원금액의 59.75%인 5,685,520마르크(1,055,239,285원)를 원주교구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세베모는 4차례에 걸쳐, 26.67%인 1,452,380플로린(463,981,188원)을 지원하면서 이 시기 원주그룹의 협동운동에 물질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이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활발한 교육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촌과 광산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주도층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들 농민·광산지도자를 중심으로 광범한 참여층을 끌어들이며 명실상부한 민간 주도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원주그룹은 적극적인 교육사업의 추진을 통해 많은 농민과 광부들이 참여토록 하고 있었는데, 1973~1985년간 농촌지도자교육과 부락대표자간담회, 신탁임원교육과 신탁실무자교육 등 원주그룹이 추진했던 제반 교육사업에 참여한 농민과 광부들의 수치는 초청교육은 257회, 이수자 8,638명, 기타교육을 포함한 현장교육은 985회, 57,922명 등 총 1,242회, 66,56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²⁵⁾

〈표3〉 원주그룹의 15개 사업명과 외원기관 지원내역 현황

연번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원)	외화	사업연도
1	남한강유역수해복구사업(농촌)	미제레오	316,691,498	DM 2,288,200,96	1973
	남한강유역수해복구사업(광산)	까리따스	63,142,080	DM 510,000	1973
2	한우지원사업	미제레오	29,234,080	DM 180,000	1973
3	원주원성수해복구사업(긴급)	까리따스	65,662,280	DM 228,000	1976
	원주원성수해복구사업(장기)	미제레오	109,940,730	DM 500,000	1977
4	광산소비조합육성사업	미제레오	78,311,774	DM 300,000	1977
5	농촌여성지도자교육사업	아세아기금	10,419,993	A\$ 19,210	1978
6	농촌청소년계도사업	미제레오	46,641,147	DM 154,000	1978
7	마을건강사업	아세아기금	20,417,876	A\$ 30,730	1979
8	농촌소비조합육성사업	세베모	147,762,498	NF 511,934	1980
9	우박피해농가지원사업	까리따스	22,503,900	DM 70,000	1980
연장	광산소비조합육성사업(속)	미제레오	29,109,300	DM 95,000	1981
10	광산소비조합 해외연수교육	미제레오	5,513,400	DM 18,000	1982
연장	농촌여성지도자교육(속)	아세아기금	23,865,445	A\$ 33,695	1981
연장	농촌청소년계도사업(속)	미제레오	44,060,374	DM 148,221.77	1982
11	농촌현장지도자활용사업	아세아기금	21,256,443	A\$ 34,277.11	1983
연장	광산소비조합육성사업(3년)	미제레오	42,634,482	DM 147,097.11	1983
12	광산소비조합협의회육성	일본까리따스	19,401,600	¥ 6,000,000	1983

25) 社會開發部, 1985 「교육실적표(1985.12.31)」 『사업현황』. 한편, 사회개발부기에 해당되는 1985~89년 간의 교육사업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소의 것만 살펴보아도 초청교육 42회, 참가자수 995명, 현장교육 68회, 3,142명이었다(社會開發部, 1987 「경과보고서('85.7.1~'86.12.10)」 『도농소비조합육성지원사업』; 社會宣敎局, 1991 「제1차 경과보고서('86.11~'87.6.30)」 『농촌소비조합확장사업(1021A)』).

연장	농촌소비조합육성계속사업	세베모	101,688,928	NF 393,357	1983
13	농촌소비조합지속사업	미제레오	53,302,500	DM 125,000	1986
14	농산물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사업	미제레오	127,575,000	DM 315,000	1986
15	농촌소비조합확장사업	세베모	119,780,784	NF 293,489	1986
연장	농산물직거래확장사업	미제레오	172,225,000	DM 415,000	1990
연장	농촌소비조합확장사업(종료)	세베모	94,748,978	NF 253,600	1990
합 계	미제레오 12건		1,055,239,285	DM 4,685,519.84	59.75%
	까리따스 3건		151,308,260	DM 808,000	8.56%
	아세아기금 4건		75,959,757	A\$ 117,912.11	4.3%
	세베모 4건		463,981,188	NF 1,452,380	26.67%
	일본까리따스 1건		19,401,600	¥ 6,000,000	1.09%
총 액			1,765,890,090		100%

출전 :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 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 부락개발, 신탁, 생명운동」, 연세대학교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5쪽.

1) 부락개발운동

부락개발운동이란 1972년 8월 남한강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구성된 재해위가 천주교 외원자금에 기반해 남한강유역 인근의 수해를 입은 3개도 13개시·군 내 80~90여개 농촌 부락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반 교육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의식계발을 추동하면서 이를 통해 점차 각성된 농민들이 생산협동체인 작목반과 이의 총괄체인 부락총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탁과 구판장의 설립·운영을 통해 전체부락민이 참여하는 부락개발을 전개해 나가면서 생산, 이용, 신용, 소비 등 부락 내 협동성을 증진시켜 나갔던 농민들의 의식계발운동이자 경제자립운동이며, 농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운동을 일컫는다.²⁶⁾

1970년대 원주그룹의 부락개발운동은 남한강유역수해복구사업과 한우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그 구상은 대홍수 직후 원주그룹과 농업문제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재해위는 몇 가지 사업원칙을 가

26) 災害委가 관할한 농촌부락의 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1973년 남한강사업과 한우지원사업이 착수되면서 지원대상 부락은 44개로 출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신탁운동이 전개되고 원주원성사업 등의 제반사업이 전개되면서 관할 농촌부락의 수는 급증되었다. 1979년 1월 현재 災害委가 관할하고 있던 농촌부락의 수는 120개였다. 1979년 3월 농촌상담원에 의해 집중적으로 상담·지도된 부락은 87~90개였다(災害委, 1979 「평가회의(1979.1.6)」 『전체회의록(1978.10.4~1979.2.19)』; 災害委, 1979 「상담원 담당지역 변경」 『인사관계철』).

지고 부락개발운동을 추진하였다. 먼저 남한강사업 중 부락개발사업의 지원자금 배정에 있어 부락 내 수해를 가장 많이 입은 농민과 빈곤한 농민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부락 내 사업의 선정은 가능한 한 생산적·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이자 부락민의 협동활동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재해위는 농촌부락 내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협동적 사업을 중심으로 자주·민주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작목반을 약 3~6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작목반의 총괄체인 ‘부락총회’를 구성케 하여 이의 관리하에 있도록 하였다.²⁷⁾

영월 남면 연당부락과 제천 한수면 포탄부락, 중원 양성면 대평촌부락 등의 사례를 보여주는 <표4>와 같이 재해위의 자금지원을 통해 각 부락에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4~5개의 협동조직체를 조직하였으며, 협산회와 신생개발회 등의 부락총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연당부락의 경우, 주민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착수를 위한 기반구축에 4개월이란 시일이 걸렸고, 10여 회에 걸친 회의 끝에 한우반·경운기반·약초반 등의작목반과 소비조합의 예비형태인 부녀구판반, 부락의 개발핵심체이자 이들 작업반을 총괄하는 부락총회인 ‘협산회(協産會)’가 구성되었다. 당시 협산회는 사업참여자 32명(한우반, 기계반, 약초반)과 기타 15명, 합계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⁸⁾ 이들 작목반과 협산회는 재해위로부터 5,236,000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작목반활동을 진행하였다. 대부조건은 연당부락의 경우, 무이자 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이었으며, 신용사업의 경우 단기자금의 조건으로 지원받고 있었다.²⁹⁾ 포탄부락은 초자원이 풍부한 자연입지 속에서 생산협동체인 한우반과 양돈반이 조직되었으며, 사업참여자 24명으로 구성된 부락총회인 ‘신생개발회’가 조직되었다. 포탄부락은 두 작목반과 신생개발회의 조직을 통해 부락개발의 중심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의도와 달리 지원받지 못한 부락민과의 갈등으로 부락 내 내분이 생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부락민의 참여가 가능한 소비조합과 신용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전 부락민의 참여에 기반한 이들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부락 내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27) 災害委, 1975 『제1차 부락개발사업 평가보고서』, 7~8쪽. 한편, 재해위는 교육수준이 낮고 협동활동의 경험이 없는 농촌부락의 농민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추동하기 위해 제반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농촌부락을 순회하면서 상담과 지도를 겸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28) 災害委, 1974 「연당1리」 『1974년도 영월지역 부락개발사업 보고서』.

29) 災害委, 1975 『제1차 부락개발사업평가보고서』, 18~24쪽.

있는 계기가 되었다. 30)

〈표4〉 부락개발사업 4개 부락 작목반 구성 현황 (1975.6)

부락명	호수	농가수	인구수	작목반	부락총회	사업량	지원액(원)	수혜자수	지원일시	상환조건
연당	73	62	359	한우반	협산회	21두	1,400,000	21	1973.5, 1973.10	2년/4년, 2년/3년
				구판사업		구판장	100,000	18	1973.6	2년/4년
				기계반		경운기 1대	1,536,000	8	1973.5	2년/5년
				약초		1,000평	1,200,000	9	1973.6	4년/2년
				신용사업		전 부락	1,000,000	47	1974.4	단기자금
포탄	49	48	284	한우	신생개발회	18두	2,280,000	18	1973.8	2년/3년
				돼지		30두	660,000	6	1973.9	2년/3년
				소비조합		전 부락	500,000	49	1974.5, 1975.3	1년/4년, 단기자금
대평촌	60		343	한우	복지회	14두	1,400,000	14	1973.5	1년/4년
				양돈		60두	600,000	17	1973.5	1년/4년
				소비조합		전 부락	400,000	58	1974.2	1년/4년
				신탁			0	58		

출전 : 김소남, 2014, 위의 논문, 152쪽.

1973년 5월 대평촌부락은 생산협동체인 한우반과 양돈반을 조직하였으며, 한우작목반 14명과 양돈작목반 12명 등 26명이 참여한 부락총회가 구성되었다. 31) 대평부락은 초기 가옥전과 농가 33호만을 대상으로 두 작목반이 조직되면서 내분이 생겼으며, 이를 해소하고 전 부락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기존 부락의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던 구판장을 재해위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 부락의 소비조합으로 발전시켰으며, 전 부락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탁이 창립되면서 대평부락은 4개의 협동조직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32) <표5>와 같이 재해위의 부락개발사업은 3개도 10개

30) 포탄소비조합은 원래 1973년 1월 부락의 부인회에 의해 착수된 소규모의 구판장을 1974년 10월 말 24명의 조합원이 출자금 5천원씩을 내서 인수하면서 개점을 할 수 있었다. 포탄신용조합은 두 작목반과 신생개발회를 중심으로 한 부락개발의 추진을 계기로 1973년 12월 24명의 구성원이 1좌 500원씩을 출자하여 결성되었다. 즉, 災害委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금지원과 부락개발 주체의 핵심역량을 기른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락 자체의 노력으로 창립된 것이었다(災害委, 1975 『제1차 부락개발사업평가보고서』, 49~51쪽).

31) 14명으로 구성된 한우작목반은 사육은 개별적으로 하되, 한우의 구입과 판매, 개우, 상환은 협동체에서 공동책임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12명으로 구성된 양돈반의 경우, 1가구당 5마리씩을 개별사육하면서 새끼돼지의 구입과 성돈의 판매, 사료의 재배 및 구입, 대부자금의 상환 등은 공동으로 하는 협업경영체였다.

32) 災害委, 1975 『제1차 부락개발사업평가보고서』, 98~108쪽.

군 20개면 39개리의 부락에서 협동조직체인 135개 작목반이 구성되었으며, 부락 내 작목반을 총괄할 부락총회도 대부분의 부락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33)

〈표5〉 협동조직체 및 부락총회 구성 현황 (1973~1976)

도	군	면	리	부락명	A	부락총회명	도	군	면	리	부락명	A	부락총회명	
강원	원성	부론	손곡1		5	평촌부락개발회	충북	중원	양성	능암	대평촌	4	복지회	
			흥호2	대흥	7				소태	북단1		7	오북회	
			법천1	비당	3	신흥회		제천	청풍		계산		1	개발회
			정산1	솔미	4						읍상		3	협업경영체
		호저	무장2	생담	5						읍하		2	개발위원회
	횡성		강림2		3					광의		5	개발회	
	안흥	부곡2		1	無					양평		4	자활부흥회	
		월현		1	부락개발위원회					북진		5	북진개발회	
	청일	유동3	농거리	1	농거리향토개발회					진목		4	개척자립회	
		하동	각동	3						방흥		2	건흥개발회	
	영월	남	연당1	와룡	5	협산회		한수	사기		3	신평개발회		
			연당2	아연	1	협심회			한천	참수계	4	개발위원회		
			북생3	후포	3	협심회			포탄		4	신생개발회		
			대화	신1	4	협심회			황강		2	협진회		
		평창	평창	후평		3	협동개발위원회	단양	단양	증도		3		
정선	동	화암	천포	5	정명회	매포	별곡		별곡	2				
소계	5	9	16		54		영춘		하	새마을	6	일심회		
경기	여주	대신	보통		4	개발위원회				밤수동	4			
		능서	내양		3	부흥회			상2	느티	5	無		
	양평	개군	부	신촌	1		적성	애곡	수양포	3				
소계	2	3	3		8		소계	3	8	20		73		
합계								10	20	39		135		

출전 : 社會宣敎局, 1991 『부락별 사업지원 현황』.

비고 : 1. A는 작목반 수를 의미함.

한편, 1973년 말부터 미제레오의 지원자금을 기초로 원주교구 관내인 원주원성지역을 중심으로 한우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한우지원사업은 무축농가인 영세농민에게 생산 소득기반의 마련을 위해 생후 6개월 된 송아지 120kg짜리 암소를 사서 대여해 주되 2년간 농가에서 키운 후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암소는 키운 농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송아

33) 작목반의 구성을 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16개리의 부락에서 54개의 작목반이 구성되고 있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20개리의 부락에서 73개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3개리의 부락에서 8개의 작목반이 구성되고 있었다. 각 부락별 작목반 수는 1~7개로 다양하였으나 전체의 66.7%에 해당되는 26개부락에서 3~5개의 작목반 수가 구성되고 있었으며, 2개 이하의 작목반 수는 25.6%인 10개부락에서 구성되고 있었다.

지는 상환 받은 후 이를 다른 무축농가에 재대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다.³⁴⁾ 재해위는 한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락 내에서 조직된 신협과 한우작목반의 자율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작목반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가난한 농민과 무축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우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락개발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영세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부락 전체의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가난한 무축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사육능력이 있는 유축농가와 부락 내 영향력이 있는 농민들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즉, 부락 내 유축농가와 부락지도자도 작목반에 참여하게 하여 이들을 통해 한우작목반을 넘어 부락전체의 개발로 나아가도록 유도하였으며, 생산협동체인 한우작목반의 활동을 통해 농민의 의식계발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신협과 구관사업의 조직·운영을 통해 부락을 협동화하고 개발하도록 추동하였다.³⁵⁾

1970년대 농민이 주도한 부락개발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먼저 재해위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농촌부락의 협동조직체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1974년부터 재해위가 수해를 입은 부락민뿐만 아니라 점차 전체부락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해 나가면서 부락 내 새마을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기존 행정조직의 농민지도자들도 부락개발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락개발운동의 주도자가 되어 갔던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재해위가 실시한 농촌지도자교육과 회계실무자교육 등 제반 초청교육을 이수하면서 부락지도자들은 점차 인식의 변화를 겪어갔으며, 새마을사업을 주도하였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농민지도자들도 점차 교육에 참여하면서 부락 내 협동활동을 위한 기반은 점차 확장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재해위의 자금지원을 통해 부락개발운동이 추진된 농촌부락에서는 면사무소와 농협 등 행정기관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면서도 부락실정에 맞는 농민 주도의 농촌개발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부락 내 작목반과 부락총회의 운영 및 협동활동을 중심으로 한 부락개발운동은 크게 변용되면서 전개되었다.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며 부락개발사업 대상부락의 상당수 작목반은 그 운영이 정체에 빠지면서 협동활동이 정체·중단되었다. 당시 상당수의

34) 사업의 소요예산은 미제레오로부터 6개월된 송아지 200마리의 구입과 본 사업을 담당할 2명의 지도요원의 행정비 소요자금 180,000마르크(약 2,460만원)가 지원되었다(災害委, 1976 『미제레오에서 원주교구에 보내는 서신(1973.8.28)』 『한우사업관계철』).

35) 災害委, 1975 『제3차 전체협의회-회의 속개(3.5)』 『1975년도 전체협의회 회의록』.

농촌부락이 박정희 정권의 급격한 산업화정책에 따른 농촌이농의 급증에 따라 부락 내에서 협동활동을 주도한 농민지도자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작목반 및 부락총회의 활동이 정체·중단되어 갔다. 또한 1976년 충주댐 건설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몰대상지인 제천과 단양, 중원지역의 사업대상 부락들이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작목반과 부락총회를 통한 협동활동은 크게 침체되었다.³⁶⁾ 아울러 유신체제 하 정부에 의해 추진된 새마을운동과 부락개발운동이 병행하여 전개되면서 재해위는 정보기관의 감시 속에서 협동운동을 추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단위농협 등의 견제와 갈등 속에서 부락 내 부락개발운동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락 내 협동조직체의 협동활동은 많은 부침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1977년경에 이르러 재해위는 생산작목반 및 부락총회에 기반해서 전개하였던 부락개발운동의 방향을 전체부락민을 대상으로 조직된 농촌신협을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한편, 1970년대 초 정부와 재해위가 추진한 새마을운동과 부락개발운동은 비록 규모와 지역범위의 차이는 있었으나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부락개발운동은 크게 농촌개발운동을 목표로 이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사업과 자금의 지원을 통해 부락단위로 마을회의와 부락총회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활동을 통해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였다. 특히, 정부와 재해위는 상당한 자금의 지원을 부락단위로 하였으며, 부락 내 농민지도자의 발굴, 부락공동기금의 조성과 활용 등을 통해 부락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였다. 양자는 모두 부락 내 농민지도자의 발굴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반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재해위가 추진한 제반교육에 부락의 핵심적인 농민지도자들은 공히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해위는 교육사업 초기 부락개발운동을 위한 농촌지도자교육을 추진하면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행정기관과 밀접한 기존 인물 외의 부락 내 실질적인 지도자를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였으나 작목반과 부락총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부락개발사업이 신협의 설립을 통해 전체부락민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락의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락 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다.³⁷⁾

36) 제천지역에서 충주댐 건설은 이전부터 이 지역에 유포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은 1976년 10월 9일자 신문보도를 통해서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몰지역은 제천의 청풍면과 한수면, 단양군에 이르렀으며, 부락개발사업 대상부락 중 12개 부락의 849호는 완전 수몰될 예정이었다(災害委, 1977 『1976년도 제천지역 부락개발사업 보고서』).

37)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은 행정기관과 농촌부락의 '경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새마을운동과 재해위가 전개하고 있었던 부락개발운동은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전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착수되어 발전된 것과 같이 농촌부락의 입장에서 새마을사업의 중심은 환경개선 10대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부락개발사업의 경우, 수해를 입은 농촌부락을 선정하여 생산 협동체인 작목반과 부락총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부락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신탁과 구관사업의 설립·운영을 통해 농민 주도의 부락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새마을운동 초기 새마을가꾸기사업과 환경개선 10대사업의 추진을 통해 일종의 농촌근대화적 성격을 가진 교육이 실시되면서 일정한 농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새마을 교육이 1972년 말 유신체제의 성립을 전후로 대중지지의 결집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유신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정신운동으로 점차 변질되는 한편,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전개된 공동체중심의 사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1974~5년을 기점으로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³⁸⁾ 또한 이 시기 새마을운동의 중점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와 공장으로 옮겨가면서 농촌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운동이자 농촌개발운동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당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이 정권의 지지기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락 내 농민들의 협동운동과 가톨릭농민회의 농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일선에서 활동하거나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양자의 성격은 크게 달랐음을 의미한다.

2) 신탁운동

1970년대 재해위의 신탁운동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며 진행되었다. 먼저 재해위는 남한강사업 및 한우지원사업의 농촌부락과 탄광지부에서 일찍부터 신탁의 설립을 추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4년 말까지 재해위의 주요 활동부분은 수해를 입은 수십여 개 부락의 농민과 탄광지역의 광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적 성격을 갖는 활동에 주력하는

부락을 연결시키거나 국가의 지시를 부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부락에 혼재한 부락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마을의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1960년대에 점점 관과 밀착해 나가고 있었다(윤충로, 2011 「구술을 통해 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새마을지도자 '만들기'와 '되기'사이에서」 『박정희시대 새마을운동과근대적 국민-주체의 형성』,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67쪽).

38) 하재훈, 2006 「박정희체제의 대중통치 : 새마을운동의 구조·행위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9~111쪽.

한편, 부락개발사업을 통한 농촌개발운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농촌지역에서 재해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부락별 생산협동체인 작목반을 부락민 스스로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반교육과 지도 등의 협동운동에 주력하되, 부락별로 설립된 신협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활성화 등 신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신협운동은 농촌부락 내 작목반별로 지원한 상당한 금액의 지원자금과 부락의 공동기금 등을 효과적으로 모아 운영하고, 이를 부락개발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조직기반의 차원에서 부락별로 농촌신협들이 설립된 경우가 많았다.

〈표6〉 1970년대 말 災害委의 농촌신협 설립과 부대사업 운영 현황(1979.1)

군	면	리	부락명	신협	구판	상비	평가	군	면	리	부락명	신협	구판	상비	평가	
원성	흥업	매지2	미촌	○	○	○	침체	횡성	서원	안흥	강림	●	○		발전	
		대안3	대송	●	○	○	침체				창촌		○		○	해체
		대안1	대수	○			발전				유현3	오상동	○		○	해체
	호저	무장2		○		○	중단				석화2	새점터	○			침체
		광격	영산	●			침체				매호		○		○	정상
	판부	서곡4	후리사	●	○		정상		둔내	현천2		○		○	침체	
	소초	흥양3	황곡	●	○	○	발전	영월	남	연당		●			발전	
		흥양2	하초구	○		○	통합	정선	임계	낙천		○		○	정상	
		학곡1	백동	○	○	○	통합					신1		●		○
		학곡1	백교	●	○	○	발전	평창	대화	신6		○		○	정상	
	흥호		●	○	○	정상					신7		○		○	정상
	부론	손곡3		○	○	○				평창	후평		○			
		단강		●						봉평	백옥포		○			
	문막	후용		○	○	○	해체	중원	양성	능암	대평	○	○	○	침체	
		비두		○		○	해체		소태	복탄		○	○		정상	
		동화2		○	○	○	해체	제천	청풍	진목		○	○	○	정상	
		궁촌1		○			정상				북진		○	○	○	침체
	귀래	운계		○		○	침체				방흥		○		○	정상
		귀래1	귀운	○		○	침체				광의		○		○	정상
	신림	황둔1	청용	○	○	○					계산		○		○	중단
		신림2	언당	○		○	침체		한수	포탄		○	○	○	해체	
		송계2	계야	○		○	침체			봉양	학산		●		○	발전
		성남1	청운	○	○	○	침체		단양	적성	애곡	수양포	○		○	
횡성	우천	하궁		○		○	해체	영춘	하	밤수동	○		○	통합		
		정금2		○		○	정상		대신	보통		●			정상	
	안흥	월현		●	○		침체	능서		내양		●	○	○	발전	
		부곡		○	○		해체		합계	26	53		14	21	39	

출전 : 김소남, 2014, 위의 논문, 293쪽.

비고 : 1) 신협항목에서 ● 표시는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단위조합을 뜻함.

2) 평가항목은 1982년 2월 13일 현재임.

3) 구판은 구판사업(소비조합), 상비는 상비약사업을 뜻함.

이러한 재해위의 활동은 197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신탁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침이 정해지고, 1975년 9월 농촌지역 부락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들이 신탁연합회가 주최하는 2주간의 신탁지도자교육을 이수한 후 신탁교도원의 신분으로 신탁의 설립·운영지도가 가능해지면서 부락개발사업 대상부락에 대한 신탁운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³⁹⁾ 1970년대 중반 급격히 진행되던 공업부문 위주의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이농의 심화와 1974년의 석유파동을 통한 경제위기 속에서 부락별로 작목반 및 부락총회를 중심으로 한 부락개발운동이 한계에 부딪치고, 이의 타개책으로 신탁을 중심으로 전체부락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면서 1970년대 중·후반 신탁운동은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원주그룹이 관계하던 농촌지역과 광산지역에서 각각 54개의 농촌신탁과 14개의 광산신탁이 설립·운영될 수 있었고,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농촌신탁과 광산신탁이 각각 14개와 10개 등 24개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었다.⁴⁰⁾

〈표7〉 1970년대 광산지역 신탁의 설립 현황

군명	읍명	리명	단체명	신탁설립	신탁인가	군명	읍명	리명	단체명	신탁설립	신탁인가
삼척	황지	화전1	한성탄광			삼척	장성	철암	강원탄광	1974. 3.26	1977. 12.26
		화전4	대진탄광	1977. 10.28	1977. 11.1		도계	도계1	삼마탄광		
		화전	어룡탄광	1978. 6.3	1979. 2.8		황지	황지	한마음신탁	1977. 6.29	1978. 6.29
		소도2	함태탄광	1977. 10.14	1977. 12.26	정선	사북	고한3	삼척탄광	1975. 12.9	1976. 4.7
		소도3	동해탄광	1973. 9.22	1974. 12.31				동고탄광	1976. 8.31	1977. 7.9
			태영탄광	1976. 8.8	1977. 3.19			사북5	동원탄광	1974. 10.13	1974. 12.31
		장원탄광	1974. 6.20		영주	강동		강릉탄광	1976. 7.1		

출전 : 김소남, 2014, 위의 논문, 328쪽; 한마음신탁, 1990 『현황 및 업무안내』.

비고 : 1. 창립총회 일자가 미정인 경우, 발기인대회를 기준으로 하였음.

39) 당시 참여한 상담원은 김인성, 이한규, 홍고광, 김상범, 정인재이며, 강습회에서 주로 강의되었던 과목은 신용조합론, 조합법 해설, 부기실무, 세법해설, 대부정책, 감사요령, 회의진행법,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견학, 특강 등이었다(災害委, 1975 「제16차 경과보고(9.1~12.31)」 『1975년도 MISEREOR』).

40) 災害委, 1979 「평가회의(1978.12.8)」 『전체회의록(1978.10.4~1979.2.19)』.

1970년대 탄광지부가 중심이 되어 설립·운영된 광산신탁은 직장신탁으로써 설립 초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탄광지부 내 상당수의 광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반면, 지역조합이었던 농촌신탁의 경우 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농촌신탁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부락단위로 신탁이 설립되면서 자산과 조합원 수가 극히 영세하였으며, 재무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예비조합이 많았던 점이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촌의 이농현상이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전개되면서 농촌신탁의 운영이 극히 어려웠다. 당시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사장 등 농촌신탁의 핵심 임원들이 이농을 하게 되면서 그 운영이 정체에 빠지거나 중단되었던 농촌신탁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 결과 농촌신탁은 재해위 등의 외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부락단위로 설립되었던 신탁은 그 규모를 키워나가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인근 부락들과 지역적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 당국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맞서야 했으므로 1970년대 후반기에 가시화되는 지역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당시 재해위는 인가신탁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의 부락개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몇 개 리단위 규모로 신탁의 통합과 지역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농촌신탁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그 부대사업으로 구관사업과 상비약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신탁의 특징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기능이자 협동조합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해 나갔다. 이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락별로 설립된 영세한 농촌신탁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하였다. 1970년대 중후반 생산, 유통, 소비, 구판에 이르는 종합적 업무까지 취급하고자 하였던 농촌신탁의 시도는 신탁자산의 영세성과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추진되었으나 재해위는 이들 농촌신탁들에 각종 자금지원과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기능이 수행되도록 추동하였다.

1970년대 재해위의 추동을 받아 농촌과 광산지도자들에 의해 설립·운영된 신탁의 주요한 특징은 유신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통해 농민과 광부들의 자주적·민주적 조직이 설립·운영되었다는 점과 관 주도의 정치구조를 민간 주도의 정치구조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부락을 단위로 한 농촌신탁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는데, 부락민들이 농촌신탁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따라 마을회의나 대동계, 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락단위의 기존 권력구조가 부락개발사

업과 신탁운동의 전개에 따라 점차 농촌신탁의 임원들이 마을회의의 여론을 주도하고, 대동계를 포함한 부락 내 각종 계의 흡수, 마을금고의 신탁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쳐 마을의 주도권이 바뀌는 일종의 ‘혁명적 경험’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락개발사업 초기 수해를 입은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운영된 작목반과 부락총회는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 권력구조 하에서 주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원주그룹이 부락개발사업의 범위를 전체부락민으로의 확대를 위해 신탁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부락 내 기존 권력구조 하에 있었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⁴¹⁾ 제반교육의 이수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를 거친 이들이 신탁운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기존 마을회의의 여론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기존 권력구조 하에 있었던 대동계와 마을금고 등이 신탁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 부락 내 권력구조가 크게 변동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횡성 강림신탁, 영월 협산신탁, 평창 대신신탁, 제천 북진신탁 등 인가를 받아 발전적으로 운영 중인 농촌신탁과 횡성 매호신탁과 같은 예비조합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이들 농촌신탁들은 면단위의 행정기관과 농협 등과 ‘일면 긴장, 일면 협조’ 관계를 가지며 일정한 자율성의 확보를 통해 부락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3) 소비조합운동

원주그룹의 소비조합운동은 크게 2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5년 원주소비조합의 창립을 기점으로 근대적 조합주의에 기반하여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였던 그 이전 시기와 생명운동에 기반해서 도농농산물직거래운동을 펼쳤던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대적 조합주의에 기반한 원주그룹의 소비조합운동은 농촌소비조합육성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부녀구관사업과 신탁의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1970년대와 농촌소비조합이 본격적으로 설립·운영된 1980년대 전반기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재해위에 의한 자금지원과 제반 지도·협력을 통해 부락민에 의해 추진된 구관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조합의 예비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2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부락개발사업과 한우지원사업에 의해 조직된 작목반

41) 1970년대 전반 災害委의 부락개발사업이 전개되면서 작목반과 부락총회의 운영에 있어 수해를 입은 영세소농이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1970년대 중·후반 전체부락민을 대상으로 신탁운동이 전개되면서 농촌신탁의 임원 중 부농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과 부락총회의 주도하에 구관사업이 추진된 1970년대 전반기이다. 재해위가 부녀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 부락의 구관사업을 협동조합의 원리와 소비조합의 이념에 따라 신협
의 부대사업으로 이를 추진토록 추동하였던 1970년대 후반기이다.

가. 1970~80년대 전반의 소비조합운동

1970년대 전반기의 경우, 재해위의 지원에 의한 구관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미 새마을
운동의 추진에 따라 각 부락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부녀구관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부
락개발사업 대상지역에서의 구관사업은 새마을운동에 의해 추진된 15개 구관장을 포함하
여 총 33개부락의 구관장이 운영되고 있었다.⁴²⁾ 당시 재해위의 지원을 받은 부락에서 추
진한 구관사업은 부녀구관사업과 농산물구관매사업, 그리고 소비조합사업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운영 주체별로 작목반 및 부락총회에서 운영한 구관장과 부녀회에서
운영한 구관장, 그리고 부락총회와 신협에서 운영한 농산물구관매사업 및 소비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부락개발사업을 통해 부락 내 작목반 및 부락총회에 의해 구관사업
이 전개되는 가운데 황강과 신리, 부곡과 월현 등의 부락에서 농산물구관매사업이 추진되
고 있었으며, 포탄과 대평에서 소비조합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재해위의 최초 소비조합은 포탄과 대평소비조합이었다. 포탄의 경우, 1974년 5월 장상
순에 의해 부락민 42명을 대상으로 소비조합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재해위로부터 50만원을
대부받아 40호의 참여 속에 소비조합이 결성되었다.⁴³⁾ 1974년 11월 이충호, 이학문, 최
강천, 장형구 등 포탄부락의 청년들은 스스로 소비조합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조합원의 출자만으로 조합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며, 30명의 조합원이 5,000원씩 출자를
하고 자재와 노력출자 형식으로 구관장을 건립하면서 소비조합을 운영하였다.⁴⁴⁾ 1973년
부락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대평부락은 수해를 계기로 건립된 주택문제로 인한 부락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락총회인 복지회가 기존의 부녀구관장을 맡아 운

42) 당시 부녀회에서 구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부락은 계산과 황강, 야연부락 등이었다(災害委, 1975 『1975년 제4차 제1회 부락대표자간담회 회의록』).

43) 당시 교육내용은 소비자협동조합론, 협동조합의 역사와 7개원칙, 유통구조와 상품관리, 회계실무 등이
었다(災害委, 1978 『경과보고(1974.4.1~5.20)』 『1976년도 MISEREOR』).

44) 포탄소비조합 운영 초기 부락 내 부녀회의 구관장과 개인상점은 그 구성원이 소비조합의 조합원으로
흡수되면서 통합되었다. 포탄소비조합의 운영은 총회 직영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를 두고 조합장과 서기
가 매월 1일 결산을 보았다. 조합원마다 장부가 있어 이용고배당을 해 나갔으며, 전 조합원의 의식계발
을 위해 총회시마다 협동조합의 이론과 원칙을 부락간부들이 강의하고 있었다(災害委, 1975 『포탄리(한
수면)』 『1974년도 제천지역 부락개발사업 보고서 3』).

영하였다. 1974년 2월 재해위의 소비조합 지원자금 40만원과 부녀구판장의 18만원 등 총 58만원으로 별도의 소비조합을 설립하였다. 1974년 12월 복지회와 소비조합에 기반하여 대평신협이 창립되었으며, 대평소비조합은 신협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45)

한편, 1975년 초 재해위는 광산소비조합의 육성을 위한 구상을 마련해 나갔으며, 1976년 10월 광산부녀교육과 광산지역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인 소비조합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재해위는 이를 기반으로 신협의 부대사업으로써 광산소비조합의 설립·운영을 확대해 나갔다. 1977년 8월 재해위는 광산소비조합협의회(이하 광소협 廣消協으로)의 결성을 추동하는 한편, 장기구호사업에 의한 기존 소비조합인 삼탄과 태백, 동고 등 3개 탄광지부 외에 광산소비조합육성사업의 추진에 따라 함태, 동원, 동해, 강원, 장원, 대진, 어룡 등 7개 소비조합이 설립되도록 지원하였다. 1970년대 후반 10개 광산신협에서 재무부의 인가를 취득하고 있었으며, 소비조합을 운영하지 않았던 강릉탄광지부를 제외한 9개의 광산신협에서 부대사업으로 소비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었다. 신협 인가를 받지 않고 소비조합을 설립 운영한 지부는 장원이 유일하였다. 광산소비조합의 임원은 주로 탄광지부 내 노조지도자이자 신협임원이 맡고 있었다. 대체로 황지읍에 있는 탄광지부들의 광산신협과 소비조합이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고한지역의 삼탄과 동고는 다소 양호한 운영상태를 보인 반면, 동원이 있던 사북지역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재해위는 1977년도 농촌부녀구판사업에 관한 조사결과와 분석검토와 1978년 12월 전체 협의회회의의 평가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락개발사업과 협동조합운동의 기반 위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농촌소비조합의 육성을 19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46) 당시 재해위는 농촌지역에서 신용부문보다 소비부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광소협 廣消協과 같이 농촌지역 구판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장도가격으로 취급물품을 대량공급할 수 있는 연합조직의 구성을 강구하였다. 47) 그 결과 재해위는 1979년 초부터 농소협 農消協을 조직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농촌소비조합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1970년대 신협운동에 이어 제2단계로 소비조합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45) 災害委, 1976 「제6차 협의회-회의속개(1976.3.9)」 『1975~1976년도 사업1부 협의회 회의록』.

46) 災害委, 1979 「평가회의-회의속개(1979.1.13)」 『1978년도 전체협의회 회의록』.

47) 災害委, 1980 「종합평가회(1.11)」 『1979년도 종합평가회의록(1980.1.11~2.15)」.

1979년 3월 재해위는 관할 농촌신협을 중심으로 한 소비조합의 육성을 위해 농소협의 창립을 추동하는 한편, 1979년 8월부터 협의회 소속의 단위조합에 소비조합의 창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을 해나가고 있었다. 당시 재해위는 1970년대 후반 부대사업으로 공동 구매사업을 추진해 오던 농촌신협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통해 소비조합의 설립·운영을 추동하고 있었다. 1979년 중반부터 재해위는 기존 수해복구사업에 의해 농촌부락에 지원했던 대부금의 상환자금을 기초로 소비조합의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을 농촌신협에 지원하고 있었으며, 세베모에 신청한 농촌소비조합육성사업이 198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나갔다. 이 시기 설립·운영된 농촌소비조합의 특징은 농촌신협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촌신협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농촌소비조합은 농촌신협의 운영상황과 발전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

1982년 당시 사회개발위원회 관할 112개의 농촌부락 중 54개부락에서 농촌신협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중 소비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단위조합이 23개, 신협의 기반이 없이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부락이 1개였다. 당시 24개의 소비조합 중에는 14개의 분점이 조직·운영되면서 모두 38개의 농촌부락에서 소비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원주그룹은 소협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농촌신협의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이었던 소비조합의 독립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86년까지 강원도 내 23개의 농촌소비조합이 독립되고 있었다.⁴⁸⁾ 이들 소비조합들은 1970년대 부락을 단위로 운영되었던 구판사업과 달리 몇 개리를 공동유대지역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원주소비조합과 한살림농산이 창립활동하게 되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들 조합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 5월 사회개발부는 농소협의 해체를 통해 그 자산과 부채 등을 모두 넘겨받는 방식으로 소협 강원도지부가 창립되도록 하였다. 당시 소협 강원도지부는 소비조합과 그 분점 총수인 33개의 소비조합 중에서 16개 점포를 정리하였으며, 23개 조합으로 출범하고 있었다.

사개위는 1979년 말 이후 전개된 정국의 격변 속에서 광산소비조합육성사업의 추진을

48) 광산소비조합의 경우, 1985년 2월 한국노총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가 조직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조합중앙회의 구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노총소협연합회는 광산지구협의회와 소속 광산소비조합들을 소협중앙회에서 관할 소속으로 옮기도록 전국광산노조 본부를 통해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광산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광산소비조합들은 社會開發部에서 추진하는 도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구상에서 제외되었다.

통해 신탁 광산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광산지역에서의 소비조합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1984년 12월 당시 광산지역 단위신탁의 조합원 수는 15,849명이었고, 광산지구협의회를 통하여 관련을 맺고 있는 이용자 수는 9,700명으로 추산되는 등 총 25,549명이 광산지역의 소비조합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신탁과 소비조합의 총자산은 35억 원이 넘었으며, 조합원의 출자금도 1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당시 보통 1년에 2~3회전 하는 여신자금은 광산지역의 고리채 일소와 지역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고, 광산소비조합사업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 광산지역의 신탁과 소비조합은 장차 외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급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 유기농업운동과 소비조합운동

1970~80년대 전반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소비조합운동은 생명운동에 기반한 유기농업운동과 결합되면서 도시생협운동의 길을 열었다. 당시 원주그룹은 붕괴하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순환성에 주목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상생의 공동체운동을 주창함으로써 이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에서 도시생협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적으로 나아갔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에 기반한 도농농산물직거래운동은 1970년대 후반 일부 농촌·광산지역 간 농산물직거래의 경험과 1980년대 전반 사개위, 농소협, 원주교구, 가농의 도농농산물직거래사업의 추진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1980년대 전반 일본유기농업과 일본생협을 견학할 수 있었던 수차례의 일본연수를 통해 원주그룹은 일본유기농업운동과 일본생협운동의 활발한 활동,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직거래운동, 도시소비자들에 의한 생협운동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할 등을 둘러 볼 수 있었다. 이 시기 생명운동에 기반한 원주그룹의 소비조합운동은 원주소비조합과 서울 한살림농산의 창립 등을 통해 생명운동에 기반한 도시생협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주그룹은 1984년 12월 일본연수 후 본격적으로 생명운동에 기반한 도농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추진을 위해 원주소비조합을 창립하는 한편,⁴⁹⁾ 이를 향후 도시소비조합의

49) 1985년 6월 24일 가톨릭센터에서 조합설립동의자 53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였다. 당시 총회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박재일·신문자, 그리고 장만자·김숙자·이궁래·이경국·박준길 등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감사로 최희원·김부강이 선임되었다.

모델로 키워 나가고자 하였다. 당시 원주그룹은 도시지역 간 농산물직거래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의 도쿄생활구락부와 같이 4~10세대의 소규모 단위의 ‘반(班)’을 구성하여 무점포 소비조합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⁵⁰⁾ 원주소비조합의 운영은 조합원의 사전주문에 의해 공급되고 있었으며, 취급품목은 일부 생활용품인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농산물이었다. 원주소비조합은 원주교구 내 교회조직과 밝음신협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5~10가구 단위로 반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조합이 취급할 상품을 엄선·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물품주문을 공동으로 주문하고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조합원이 소비조합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케 하였다. 초기 유기농업운동을 토대로 농산물 위주로 무점포로 운영되고 있었던 원주소비조합의 창립과 경험은 한살림농산의 창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원주그룹은 농산물시장이 좁았던 소도시인 원주를 벗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직거래운동의 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원주그룹은 미제레오의 지원자금을 기초로 농산물직거래·직판장사업과 농산물직거래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살림농산의 창립운영을 주도하였다. 한살림농산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농산물직거래운동이 도시소비자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으며, ‘생명’이라는 시대정신과 ‘협동’이라는 전통적·보편적인 가치의 만남을 의미하는 한살림소비조합의 창립을 추동하였다. 당시 한살림운동은 단순히 소비조합운동이 아닌 생명운동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한살림운동은 농업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가 병존하는 독특한 형태이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주로 유기농업에 기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도시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인식과 결합된 생명운동에 기반한 ‘제3세대적’ 성격을 띠는 소비조합운동이었다.⁵¹⁾

(원주소비조합, 1986 『제1차 정기총회 회의자료』, 2~3쪽).

50) 社會事業局, 1989 「제56차 월례회(1985.2.15)」 『1984~1989년도 월례회 회의록』.

51) 한살림모임 역, 1989 『제3세대 협동조합과 사회운동』(모심과살림연구소 자료집). 제1세대 협동조합운동이란 17~18세기 아메리카대륙에 이주한 청교도가 각지에서 건설한 종교적 공산촌을 발단으로 한 ‘협동촌’이라는 개척공동체건설운동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프랑스의 푸리에, 영국의 로버트 오웬 등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협동촌건설운동을 뜻한다. 제2세대 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엽 로치데일 공정개척자가 점포를 연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주요 특징은 참여자의 전체생활을 공동화하는 제1세대와 달리 개인의 전체생활 중 주로 시장경제에 관련된 부분만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본주의체제에 순응하게 되어 변혁의 에너지가 퇴화해 버린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국제적으로

4) 생명운동

원주그룹의 생명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은 1970년대 후반부터의 전환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940년대부터 장일순이 지니고 있었던 유불교사상과 동학사상, 간디의 비폭력사상,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사상 등 정서적·문화적 차원에서 내재되고 있었던 인식론과 사회운동론이 1970년대 전반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에 기반한 초기 ‘생명’ 론으로 나타났다가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일련의 성찰을 통해 1980년대 초에 새로운 차원의 탈근대론적 인식론이자 세계관인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정리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그룹을 이끌었던 장일순은 1940~60년대에 걸쳐 몇 가지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장일순은 먼저 간디와 비노바 바베의 ‘비폭력운동’과 ‘종교우회론’에 입각해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계급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운동이 아닌 비폭력운동론을 통해 지역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몇 사람이 앞장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해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과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는 지역자치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1960년대 중반 그의 지역사회운동은 계급운동에 기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개발운동의 기능을 가졌던 신흥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한편, 1970년 4월 서울 시내버스 여차장이 제기한 ‘뽕땅사건’과 이로 인한 ‘뽕땅심포지움’의 개최를 계기로 원주그룹은 새로운 방향에서 운동을 전개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생명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원주 내부에서는 뭐 데모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는 이 교회가 하는 목적 자체도 그렇고 질 낮은 운동이다, 말하자면. 그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 이거야. 그래 ‘생명’을 위주로 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70년도 4월 달에 ‘뽕땅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었어. ‘뽕땅 사건’이라는 게. 그게 생존권에 대한 심포지움이야. (중략) 그 뽕땅사건이 날 때 주장을 한

등장하고 있었던 생태주의운동·대안기술운동·여성자립운동·평화운동·차별반대운동·유토피아운동 등 다양한 사조에 입각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운동은 사상적으로는 제1세대를 계승하고 기능적으로는 제2세대의 기술로부터 출발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주관리가 가능한 규모를 토대로 조합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시하면서 지방분권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인간소외에 관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기존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지극히 회의적인 경향이 크다.

게 있어. 뭐냐 하면 생존권. 그때까지는 자유권만 가지고 박정희한테 대들었거든. 민청학련 사건 때도 대학생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태어난 인간을 짓밟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논리 아니야. 그래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생존권을, 자유권과 생존권이 같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 이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걸 ‘생명’ 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 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모든 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하고 일을 하기 전에 자꾸 박정희가 건드리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이미지가 커진 거지. 그러면서 70년대 초부터 원주는 방향이 내용적으로는 바뀌고 있는 거야.” 52)

당시 지근거리에서 장일순과 함께하였던 김영주의 구술과 같이 원주그룹은 이전까지 민중의 기본적 자유권에 입각한 관점을 가지고 반박정희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으나 ‘뽕땅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뽕땅사건’ 직후 청계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제반권리를 사회전면에 부각시켰던 1970년 11월 ‘전태일분신사건’과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급격히 생성된 도시빈민들의 불만과 생존권이 크게 사회적으로 환기된 1971년 8월 ‘광주대단지사건’ 등이 연이어지면서 원주그룹은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원주그룹 내에서는 민중의 기본적 자유권과 생존권에 입각해서 향후의 민중운동을 전개해 나가되 이를 ‘생명’ 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에 입각해서 협동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논의가 모아졌다. 그 결과 1970년대 원주그룹은 장일순의 지역자치운동과 초기 ‘생명운동’론에 입각해서 3개도 13개시군 80~90여개 농촌부락과 10여개 탄광지부에서 협동운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초 원주그룹은 내부적으로 1970년대 부락개발운동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1982년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을 내놓았다. 이 문건은 1970년대 후반 원주 지역의 반독재투쟁과 부락개발운동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의 추진 속에서 부딪치는 제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이를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 문건은 1960~70년대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원주그룹이 정서적, 문화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운동론이 일정하게 체계화되어 나타난 것이자 1970년 초 태동한 민중의 생존권 실현에 한정되었던 ‘생명’의 문제의식이 1970년대 환경과 생태계의

52) 2011년 7월 2일, 김영주 전 재해대책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 무위당만인회 상임대표 구술(원주 무위당만인회 사무실).

위기, 현대 산업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최시형의 동학사상 등에 대한 재해석과정을 거쳐 ‘사람’에서 ‘자연’과 ‘사물’의 영역으로 그 사상과 운동의 인식범위가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아울러 원주그룹 형성 이후 주로 맑시즘적 패러다임과 근대적 조합주의에 기반하여 반독재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에서 동학사상 등에 기반한 탈근대적 사고 및 인식 속에서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³⁾ 이 문건은 1980년 12월 출옥직후 원주교구 기획위원의 신분이었던 김지하가 장일순의 권유에 따라 사개위의 주요 평가회의에 참여하면서 1981년 9월 경 초안이 작성되었고, 장일순과 사개위의 상담원들이 이를 검토·수정하면서 1982년 초 완성·제출된 것이었다.⁵⁴⁾

1970년대 장일순이 이끌었던 원주그룹은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성장과 개발중심의 경제정책 하에서 급속히 붕괴되어 가는 농촌지역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정부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이농현상 심화와 농약화학비료 등에 의해 급속히 오염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삶도 황폐하게 만든다는 점,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 본연의 삶의 조건도 악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원주그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 모두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대량생산·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문명의 위기가 나타났다는 인식하에 자연을 사람 및 하늘과 동격으로 삼아 사물을 공경해야 한다는 동학사상에 입각한 근본적인 성찰과 인식의 전환,⁵⁵⁾ 정농회와 일본의 야마기시즘에 기반한 유기농업의 학습과 연구, ‘10·26’과 ‘5·18’로 인한 충격과 성찰, 일본연수를 통한 일본생협운동론의 부분적 수용 등을 거치면서 탈근대론적인 인식론과 운동론을 모색해 나갔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에 바탕한 생명운동론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53) 김지하는 1982년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을 원주그룹 내에 제출한 후 1984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19세기 중후반 최수운과 강증산 등의 동학사상과 민중사상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사상기행’에 나섰으며, 1985년 발간된 『남녘땅 뱃노래』에서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란 글을 통해 원주그룹의 생명운동을 세상에 내놓았다. 김지하는 이후 원주그룹의 생명운동과 다른 독자적인 ‘생명사상’의 체계화와 정립으로 나아갔다(김지하, 1984 『밥』, 분도출판사; 김지하, 1985 『남녘땅 뱃노래』, 두레; 김지하, 1999 『사상기행-민중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1-2, 실천문학사).

54) 김용우, 2009 「생명사상 및 운동의 초기 형성과 전개-원주를 중심으로」(미발표문). 원주그룹의 김삼범에 의하면 이 문건은 2년여에 걸친 치열한 내부회의를 통해 정리되었다고 한다.

55) 이러한 문제의식과 인식의 전환은 1970년대 저항엘리트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던 ‘부정부패 없는’ 개발주의와 ‘생산력 정제론’에 입각한 생산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 원주그룹이 반독재진영에서 차지했던 독특한 사상적, 운동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원주그룹은 생명운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1970년대 말~80년대 전반 농촌과 광산지역 간 농산물직거래의 경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농농산물직거래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효소농법·유기농법 등의 유기농업운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원주그룹, 가톨릭농민회와 농민·광산지역의 주요 협동조합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유기농업 현장과 일본생협 등을 견학하면서 생명운동에 기반한 생협운동을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1985년 6월 원주소비조합과 1986년 12월 한살림농산의 출범, 1988년 4월 한살림소비조합의 창립, 1989년 11월 한살림모임이 주도한 한살림선언 등 생명운동에 기반한 한살림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갔다.⁵⁶⁾

4. 맺음말

지금까지 장일순의 지역사회운동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개최로 인한 원주교구의 창설, 안티고니쉬운동에 기반한 신협운동과 원주그룹의 형성 등을 통해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1970~80년대 원주그룹의 부락개발운동과 신협운동, 소비조합운동, 생명운동을 통해 1960~80년대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우익 주도의 원주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한 장일순의 지역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를 통해 장일순을 중심으로 중도파적 혁신세력이 '4.19' 시기를 거치며 형성될 수 있었다. 한편, 1960년대 전반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가 개최되면서 세계교회혁신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원주교구가 설정되면서 가톨릭 내 혁신계열의 지학순신부가 초대주교로 부임하였다. 지학순 주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따른 교회혁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원주 지역 혁신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일순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를 통해 원주교구가 평신도 중심의 교구가 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마련

56) 한살림모임, 1989 『한살림선언-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한살림모임, 1990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더불어 사는 한살림』, 45~66쪽; 모심과살림연구소, 2010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다시읽기』, 도서출판 한살림.

되도록 하였다.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원주그룹은 꾸르실료교육 등의 평신도운동과 신협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진보적 학자들과의 네트워크와 원주그룹의 외곽조직이었던 교구청년연합회의 핵심인물로 구성된 신우회와의 인적 연결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원주그룹은 지역사회개발운동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신협운동에 주목하면서 원주신협의 창립을 필두로 원주교구 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직기반인 협동교육연구소와 신협 강원지구평의회를 창립해 나갔다.

1972년 8월 남한강유역 대홍수의 발생과 1973년 1월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창립은 제2차 원주그룹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의 범위를 넘어 3개도 13개 시·군, 80~90여 개의 농촌부락과 10여 개의 탄광지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농촌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다. 원주그룹은 남한강사업과 한우지원사업, 원주원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부락개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며 부락개발운동이 침체·중단과정에 놓이면서 부락 내 신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를 통해 1970년대 말 농촌과 광산지역에서 각각 54개의 농촌신협과 14개의 광산신협이 활발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신협운동은 유신체제 하 지역단위 내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추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관제협동조합의 민주성을 견인해 나가면서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가톨릭농민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지역단위의 민주화를 추동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후반 원주그룹은 신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민과 광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소비조합운동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광소협(鑛消協)과 광산소비조합의 결성을 추동하면서 광산지역에서의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 말 농소협 창립을 통해 1980년대 농촌지역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1970년대 말부터 원주그룹은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나갔으며, 농촌이농의 급증과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남용으로 붕괴되는 농촌현실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해 나갔다. 그 결과 1980년대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으로 나타나는 생명운동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갔으며, 원주소비조합과 한살림농산의 창립과 활동을 통해 1980년대 말 한살림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1960~80년대 농촌·광산지역에서 전개된 원주그룹의 협동조합운동은 당시 적실성이 있

는 운동이었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농민과 광산노동자들의 바람과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었으며, 농민운동 및 노동운동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운동성을 지니며 전개되었던 특징이 있었다. 1960~80년대 분단한국에서 원주그룹은 위로부터의 개발독재의 흐름과 상당히 다른 민간 주도로 전개된 협동적 농촌개발운동의 모형인 부락개발운동을 추진해 나갔으며, 한국근현대사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원주그룹이 수많은 사업을 통해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힘없는 약자의 삶에 천착해서 철저히 민중지향적이고 풀뿌리 지향적인 시선을 통해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지역의 민중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실을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원주그룹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을 전개한 후에 생명운동이라는 노선의 전환을 하였다. 이는 정치와 제도 등의 정치투쟁이나 권력투쟁만으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자각과 협동조직체들을 기반으로 협동적인 방향으로 생활양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긴 안목의 문제의식을 통해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를 전개해 왔던 것을 의미하였다. ●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원주 운동의 의미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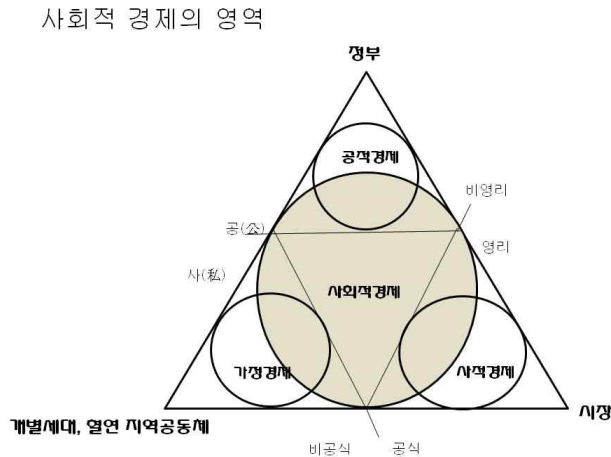
이경란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 협동조합사를 ‘공생(共生)’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최근 한국의 사회경제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협동사회경제영역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개별협동조합법시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대로, 나아가 사회적 기본법 제정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주체 역량보다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야말로 이 사회에서 협동사회경제영역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公)적 영역(국가) - 시장(사적) 영역 - 가정(개인) 영역 속에서 협동사회경제영역은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지향을 담고 있을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정, 국가, 시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때 이 삼자간의 상호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영역이 커지면 개인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영역이 커지면 사람들은 그저 소비하기만 하는 ‘경제동물’로 살거나, 생산자는 돈을 벌기 위한 시장생산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삶의 총체성이나 돌봄 영역이나 식품 안전 등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의 행위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회의 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스스로를 지탱하는 상호부조와 호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경쟁 상대이므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배웠다.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의 행복은 뒷전에 두고 경쟁과

돈벌이만을 위해 치닫는 사회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면서 매일 불행해지는 삶만 남고 말았다. 모두가 불행한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호부조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협동(호혜/사회적)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사회영역이 확산된다면 주민들이 호혜적 관계에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장영역에서도 호혜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호혜적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생활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기를 희망한다. 현재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호혜적 관계망으로 바꿔가기 위한 마을공동체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양식의 변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 깊숙이 파고든 ‘공유의 비극’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 소유와 관리 및 사적 소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론, ‘공유(지) commons’와 ‘sharing’의 논의는 사적인 이익 추구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추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세계 각 지역에서 공유지의 역사 또는 공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양상이 한 사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실제 한국사회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면서 개별 가정경제의 위기와 심각한 일자

리의 위기, 사회적 안전망의 파괴, 육아와 노인돌봄이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이 위기에 처해있다. 그 해법의 하나로써 공동체론과 협동조합론이 다시 부각되었다. 유럽의 경제위기에서 그 사실이 점검되었다. 유럽의 경제위기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기업의 도산이 일어나고 실업이 심화되자, 오래된 협동조합들이 굳건하게 기업과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지야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생존하는 방안은 공동체적인 관계망의 복원과 재구성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한 사람을 둘러싼 관계망을 호혜적인 관계로 통합 연결하여 호혜적이고 순환적인 일상생활세계를 복원 유지하게 하는 문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협동조합이 진정 협동조합답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생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농업부분에서의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으며, 환경운동의 대중화로 전개되었다. 이는 더 나아가 상품화된 먹거리 생산, 생산자들을 삶 전체를 보지 않고 그저 소비자에 대응하는 생산자로만 보는 시각, 소비자들이 그저 소비자로서만 살아갈 뿐 생산과 유통 소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근대’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는 협동조합운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와 유기농생산자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생활에 안전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새로운 협동적 섹터를 만든 것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이었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생산자의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책임지는 호혜적 상호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확산된 생협운동이 갖는 한국사회적 특징이다.

이 모든 논의의 밑바닥에서 ‘공생’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국가와 시장과 개인이 균형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공생, 지역과 지역의 공생, 이웃 간의 공생,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을 말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공유와 협동의 영역이 각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의 협동사회경제영역의 성장을 바라볼 때,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도

공생의 가치로 협동조합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이런 공생의 구조와 호혜적 지역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며, 그러한 새로운 인식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협동조합운동사의 맥락 속에서 원주운동이 갖는 위치를 확인한다. 이는 특별하다. 그리고 원주운동이 가진 협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속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본다.

원주협동운동이 완성태는 아니다. 과제는 여전히 많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협동운동사에서 원주는 참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고, 나름의 해법을 찾아왔으며, 많은 협동운동을 하려는 이들을 일깨워왔다. 이 글은 계속 진화하는 모델인 원주 속에서 한국협동운동이 일깨워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 때문에 원주협동운동이 경험했던 힘겨움이나 문제들 보다는 현재 우리가 협동운동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원주가 앞서 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2. 협동조합의 역사와 원주운동의 역사성

한국협동조합사를 검토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분단’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때 협동조합사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흥미롭게도 남·북한의 주류적 협동조합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 초기에 협동조합이 구성될 때 개인들이 필요와 열망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참여하였고 협동조합의 소유도 협동적 소유형태이지만, 점차 국가의 정책기구로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계획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국가주의적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생산의 정체와 생산과 소비의 수급불균형, 농공간의 불균형상태에 빠졌고, 나아가 주민들은 자율성이나 삶의 향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위치에 처하고 말았다. 또한 남북 모두 산업화의 과정에서 심각한 자연파괴를 경험했고, 농업부분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이용한 화학농법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일어났

다. 남에서는 농협과 수협 등 관제협동조합의 민주화와 조합원 중심구조로의 개선 요구나 민간의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인 신용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성장이 협동조합계 전반을 변화시켰다. 북에서도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소유와 운영관계의 전환이나 자연발생적인 장마당의 공식화와 같은 변화가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주체의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주의적 특성 자체가 분단의 산물이었다. 협동조합운동도 분단되어버렸다. 1920년대 소비조합운동에서 본격화되었던 한국협동조합운동은 1930년대에는 천도교,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지역적인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해갔다.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과 결합한 사회주의계열의 협동조합,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중심의 협동조합마을, 평안도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천도교계열의 조선농민사운동과 공생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재구성 등은 그 특별한 성과였다. 이들은 모두 지역 속에서 주민들의 다각적인 협동운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념적 대립과 민족운동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키려는 일제의 강력한 민족운동 탄압, 파시즘 농업정책과 교육정책, 금융조합 중심의 농업구조재편성정책 등으로 인해 사그러들었다.

잠복해있던 협동운동은 해방직후 다시 복구되었다. 그러나 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에서는 기독교 협동조합계열이 탄압을 받았고, 사회주의계열과 천도교계열의 협동조합세력만이 남았다. 남에서는 사회주의계열이 탄압을 받았으며 금융조합 중심의 파시즘계열과 기독교계열, 부분적으로 사회민주주의계열이 남았다. 남한의 경우 파시즘계열은 금융조합을 이은 국가주의적 금융 중심의 농협구조 속에서 주류로 자리잡았다.

남에서 협동운동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는 농업협동조합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정부와 여러 집단들이 협동조합법안을 제안하고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한편으로 그 논의 속에서 정치적 배제가 광범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처음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이 가시화된 것은 1950년 농림부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작은 토지를 불하받을 영세농민들을 조직하여 경제안정화를 꾀할 「농업협동조합법」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농림부의 조봉암 장관과 농림부 성원들은 사상적으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개량적 경향성과 정치적으로는 중간파의 입장을 지녔다고 평가

받는데, 이들은 국가의 계획과 경제의 협동적 관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조정하고자 했다. 제헌헌법의 균등경제 기조에 따라 농지개혁과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정책 방향을 세우고, 각 분야의 생산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계획경제·내포적 국가경제 발전을 구상하였다. 계획경제론에 입각한 농민자치적 협동조합론, 즉 조합주의적 국가건설론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농림부장관 조봉암의 사퇴, 국회프락치 사건, 1956년 진보당 사건 등을 거치면서 반공논리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당했다. 그 후 정부는 성장론적 자유주의경제와 국가가 협동조합을 정책기구로 운용하는 국가주의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의 제정, 1958년 「농업은행법」의 개정, 그리고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개정된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체제는 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농협은 ‘정부가 임명하는 중앙회장’ 체제와 리동조합-군농협-중앙회의 수직화된 국가주도형 협동조합구조를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참여가 어려웠다. 또한 생산지도, 유통, 신용, 공동이용, 공제, 가공사업, 의료사업, 정부위탁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농협을 지향하나, 생산협동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금융과 비료판매를 통해 농업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전문적 상업적 농업육성계획으로 인해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소농들의 협동을 활성화하기보다 기업가적 농업자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성을 지녔다. 결과적으로 종합농협이 본래 가져야 할 소농들의 생산-유통-이용의 영역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농협이 아니라 비농민적 정부정책의 대리기관이자 금융기관으로서 농민생활을 파편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만 것이다.

1960년대 초반은 사회 전체의 침체상태를 끊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협동운동으로 주목할 것이 가톨릭과 기독교계열에서의 협동운동이다. 1958년 충남 홍성 홍동면에 세워진 폴무학교는 일제하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서 이루었던 학교중심의 협동마을만들기를 지향하며 세워졌다. 협동운동의 주체를 길러내고자 하는 시도였다. 협동조합운동으로는 가톨릭에서 시작한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국 신협의 시작이라 불리는 부산 메리놀회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서울의 장대익 신부는 한국인들이 빈곤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근본적 방법으로서 협동조합운동에 주목했다. 두 흐름은 1963년 협동교육연구원으로 합류했고, 협동교육연구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여러 곳에서 신협

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신협은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했다. 신협운동이 성장하면서 1964년 55개의 신협들이 모여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했다.

원주의 협동운동은 1960년대 초반 가톨릭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와 토착 지역활동가인 장일순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1966년 가톨릭 신협운동을 받아들여 원주신협을 설치한 이래 1969년 협동교육연구소의 설치 등 신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을 원주와 강원도 일대에 확산하는 중심역할을 하였다. 이후 1972년 남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진행된 재해대책사업을 통해 농촌과 광산지역에서 신협운동뿐만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적 활동 등 여러 방면의 협동운동이 부락개발운동으로 통합되어 전개되었다.

원주협동운동은 한국 협동조합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진보당 계열의 사회민주주의 협동조합론이라는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에서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던 좌우합작적 맥을 잇고 있는 집단이었다. 거기에 개인에 기반을 둔 민주적 운영구조와 자치적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안티고니쉬운동이 결합하고, 영세 서민들의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인 신협운동을 통해 다각적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주는 대성중고등학교로 표현되는 기독교 민주주의자 ‘안창호’의 사상적 흐름과 해월사상으로 표현되는 민중사상과 민중운동의 역사성을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 민중적 민족적 민주주의적 사상흐름을 통합적으로 수렴하였다. 어쩌면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이념의 화해에 기반한 사회운동이 기층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원주협동운동의 의미와 역할

1) 정책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 문제로 접근한다

자주적 협동운동의 흐름을 실현하는 원주협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과는 대립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 제헌헌법의 균등경제구조가 1950년대 중반 이후 붕괴되어 가고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도 약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민중생활은 피폐해져갔다. 이런 상황이 1960년 4.19의 공간 속에서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

라 노동운동의 폭발로도 발현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성장주의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박정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민중생활의 안정화 또는 균등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

원주협동운동의 본격적 조직화는 1972년 남한강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구성된 재해대책 위원회였다. 재해대책위는 외국에서 들여온 막대한 금액을 농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초로 만들기 위해 농민교육과 지역내 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이를 원주활동가들이 내면화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담원이란 이름으로 수해 지역 3개도 80-90여개의 농촌마을과 10여개의 탄광지역을 돌아다니며 농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경험이었다. 이들은 농민과 광산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핵심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 농민이 정책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시키는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재해대책사업은 신탁운동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자체 학습모임을 통한 지역문제 현안인식, 협동조합방식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신탁 - 소비자협동조합(구판장) - 생산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유기적 종합농협을 지역단위에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재해대책위는 농민경제안정화라는 일반적인 농정구호와 달리, 지역단위 생활공동체운동으로서의 협동운동을 실현하고자하였다.

이런 경험을 밑바탕에 깔고 민중생존권운동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 농민들은 정부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농민과 농촌을 살린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경제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새로이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가톨릭노동청년회(1964 설립), 가톨릭농촌청년회(1966 설립)의 활동경험을 축적하여 1972년 가톨릭농민회가 정식 출범했다. 원주캠프는 이 가톨릭농민회운동에 깊게 간여했다. 이들은 1970년 ‘뽕땅사건’과 전태일 분신 등을 계기로 민중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문제,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드러난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형성된 도시빈민의 생존권문제, 원주에 가까이 있는 사북지역 탄광노동자들의 처지 등을 검토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결합해 갔다. 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단순한 자유권과 민중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초기 인식이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2)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간다

한국협동운동사에서 지역의 문제가 유의미하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였다. 다양한 시각에서 협동운동이 자리를 잡는 동시에 사회주의계열, 기독교계열, 천도교계열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각 정치적 입장과 결합된 민족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원주협동운동은 다양한 협동운동을 지역 속에 복합적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간의 순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농민과 광부들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활동을 우선하였다. 이는 농협의 금융 중심운영과 농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완전한 지원체계와 농민들의 생활과 삶에 대한 무관심, 깨어져 있는 금융-소비-생산의 관계, 농민들이 배제된 협동조합운영이라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기도 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는 농정가들에게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재해대책위원회 시기의 농촌과 광산촌 내부의 순환경제적 협동운동을 실현했던 경험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원주 지역 내부에서의 다방면에 걸친 협동운동과 그들 간의 유기적 연계구조를 만드는 방향이었다. 1980년대 광산노동운동과 재해지역의 농촌조직화사업이 일정하게 중단된 이래 원주 지역의 운동은 신탁운동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2003년 6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창립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후 한국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사회경제적 문제인 실업, 빈곤, 양극화, 복지 등의 전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의 힘을 ‘협동’하는 ‘협동조합’의 방법으로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역과 풀뿌리조직에서 자주적 협동으로 해결하고자 한 전통이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2013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으며, 회원단체도 확대되었다. 10년 만에 초기 8개 단체에서 현재 23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조합원단체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운동기관 등 다양한데, 영역을 보면 생활영역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최근에는 부분 간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가고 있다.

신탁(원주밝음신탁)

농업생산(남한강영농조합법인, 토옹영농조합법인, (주)원주생명농업)

생산가공(㈜살림농산, (유)다자원, (합)햇살나눔, (주)노나메기, (주)행복한 시루봉)
 로컬푸드(원주푸드협동조합, 로컬푸드카페협동조합 '한그릇애')
 생산가공(㈜살림농산, (유)다자원, (합)햇살나눔, (주)노나메기, (주)행복한 시루봉)
 소비자생협(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의료생협(원주의료생협)
 육아와 교육(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노인(노인생협)
 자활기관(원주자활센터,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갈거리사랑촌)
 문화(문화생협, 한국전통예술단 '아울', (사)음악만들기 앙상블)
 생태마을((사)서곡생태마을

“대안사회의 실현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내의 여러 협동운동은 각 부분별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망라하며, 여러 계층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고 있어 지역적으로는 계층통합적이며 호혜적 생활양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각 영역별 협동운동들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3) 다른 협동사회경제 관계망을 확대한다.

원주협동운동은 협동운동을 전국화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협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신협운동을 1970년대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시킨 토대 위에서 전국적인 신협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협연합회는 다시 소비자협동조합 지도자를 양성해 소비조합운동의 성장에 기여했고, 전국소비조합연합회(1969)와 한국소비자연맹(1971)의 창설을 지원하여 소비자운동의 조직적 기초를 마련했다. 신협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원주캠프의 역할은 컸다. 1960년대 새로이 시작된 소비조합운동은 신협운동에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협과 소

협을 중심으로 각 곳에서 활동했던 자주적 협동조합활동가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를 강화해갈 수 있었다.

유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한살림 자체의 전국 구조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소비조합운동이었다. 1980년대 산업화가 일정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인식이 성장하는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저열한 생산품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그 산업화의 결과 발생한 생명의 위기는 과거 선진국보다 빠르게 유기농업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유기농산물매장으로 인식되는 생협이다. 이 두 운동의 결합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태도를 키운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자로서의 주체성만을 강화해 간다면 붕괴되기 쉬운 구조이기도 했다. 한살림이 제안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순환적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한편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태도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생존권문제와 농협민주화에 집중하고 있던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운동세력 또한 새로운 협동운동과 결을 같이하여 운동의 방향을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4) 반체제운동에서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일반적인 협동운동세력은 경제운동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나, 원주협동운동은 그 경제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민주화운동, 정치운동에 깊게 결합했다. 즉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협동운동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려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중심의 민주화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치우쳐가고, 생존권운동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계층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원주협동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생존권운동, 그리고 모든 계층과 이해관계자들의 호혜적 순환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환경운동이나 통일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며, 체제전복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을 생활공동체운동과 풀뿌리운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사회

개혁을 제안할 수 있었다. 즉 생활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화 민중 민족 통일 생태 이 모든 것이 일상적 삶 속에서 녹아있고, 그것이 정치화되는 것. 생활공동체운동 속에 모두 녹아들어 그렇게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렇게 살기를 제안하는 운동이다.

5) 지역에서 세계를 보며, 세계를 향해 제안한다.

대개 지역에서의 활동은 중앙보다 정보력이 약하고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다.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원주협동운동은 그 통념을 뒤집었다. 무위당과 원주캠프는 한국사회의 어떤 집단보다 새로운 정보와 세계를 읽는 시야가 넓었다. 초기 재해대책위원회시기 건국대 농업문제연구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진과 결합된 활동은 내포적 경제발전론으로 정리되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틀로 자리잡았다. 리영희 선생 등과의 긴밀한 관계는 원주캠프의 정보력을 크게 보완해주는 한편 리영희를 통해 세계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새로운 인물이 원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열린 분위기와 정보를 주체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여 내부학습을 한 후, 이들은 그것을 사회로 내놓았다. 민족경제론, 폐다고지 등의 아젠다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 구성이나 활동가교육을 통한 대중운동활성화 방안 등의 교육방식 등은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한 성과이자 동력이었다. ●

- 김소남, 「1960-80년대 원주 지역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 부락개발, 신탁, 생명운동」,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용우, 「원주 지역의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고찰」, 2007
- 김태일, 「한국의 이익정치와 농민-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념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0집3호, 2003.
-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2012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협오년사』, 1966
- 무위당을 가리는 모임,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2004
- 박현채, 『한국농업의 구상』, 한길사, 1981.
- 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 노선의 경제사상-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최호진박사강단50주년기념논문집간행회, 1993
- 양봉식, 「내가 만든 실행협동조합」, 『농민생활』 17-11, 1955. 11
-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 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2010
- 이경란,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 2013 봄.
- 이기춘, 정진화, 나종연,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소비생활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4호, 2008. 12
- 이우재, 「8·15 직후 농민운동 연구」,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I』, 연구사, 1988
-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2006
- 장일순, 『나라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 정은미,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2006. 가을
-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52호, 2009.
- 정호경, 「한국기독교농민회-그 역사와 아념」, 『종교신학연구』, 1988
- 조규남, 「이승만 정부기 경제건설과 경제정책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참고.
- 조완형, 「한국협동조합의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경과와 과제」, 『2010년도 한국유기농업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현대 북한연구』 8권3호, 2005
- 최성현, 『좁쌀 한알』, 도솔, 2004
- 홍병선, 『농업협동조합강화』, 승문사, 1958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시원,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박승옥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의 침몰 서곡

1)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 국가주의의 침몰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국가주의의 침몰 서곡이자 자본주의 영리경제 체제의 와해 서곡이다. 그러나 이것을 서곡이라고 깨닫는 자유인들의 연대와 실천이 없다면, 스스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탈출과 전환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구조될 수 없을 것이며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예는 노예 취급을, 자유인은 자유인 취급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재민의 국가이다. 입법, 행정, 사법을 비롯하여 환경과 에너지, 건강, 교육 등 대한민국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국가 권력의 주인은 대한민국 인민들이다.

그런데 이 주권이란 사실 위임할 수도 위임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천부인권과 마찬가지로 주권(主權) 또한 양도불가능하다. 주인의 권리 즉 주인으로서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곧 힘을 잃는다는 뜻이다. 주권자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권자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인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인 행정권을 모두 다 한꺼번에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순간 대통령은 수많은 인민들의 행정권력 전체를 다 가진 엄청난 권력자로 제왕처럼 인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인민들이 입법권을 모두 다 한꺼번에 국회의

원에게 위임하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입법 권력자로 인민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인민들이 사법권을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 위임하는 순간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민중의 몽둥이가 된다. 4년 또는 5년에 하루 동안만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란 감옥 속의 노예가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특별 휴가를 받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자신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이 인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있는데, 경찰과 검찰, 공무원들이 인민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직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위임민주주의란 교언영색의 사기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다. 위임민주주의란 실제로는 위임독재 체제로서 왕조체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엘리트 귀족정치이다.

식민지 근성이 골수에 박혀 서양을 선진국이라 부르며 서구 산업화와 근대화, 근대정치학 이론들을 주저리주저리 무조건 추종하는 이른바 한국의 엘리트 전문가와 정치인들, 관료들과 언론들은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 외면한다. 독일의 히틀러 파시즘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서구 위임민주주의의 귀결이다. 미국이 통킹만 사건과 대량살상무기를 조작하면 서까지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도 주권자가 거의 노예 상태로 떨어져 버린 미국의 정치체제 때문이다. 물론 부시를 히틀러보다 더한 전쟁광으로 평가하는 논자도 있긴 하지만, 그나마 50개 국가의 연합으로서 출발한 미국은 분권을 제도화한 연방주의에 더해 대영제국과의 식민지 독립전쟁 과정에서 정착시킨 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과 견제,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국가 개입 거부의 자립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에 최소한 파시스트 전체주의 체제의 출현은 막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 선거, 시민사회 등을 제도화한 서구의 대의민주주의 또한 파시즘을 경험한 이후 삼권분립과 권력 분산의 연방주의, 강한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통해 주권 위임을 가능한 축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대주의 기득권 세력들은 인구가 많으면 위임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이른바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왜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요컨대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주권재민은 사상누각의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제 총독부를 대신한 미군정의 역할은 막강한 결정력을 발휘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조선 인민들은 문명개화한 일본인들과 달리 무능하고 자치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미개한 어린애 취급을 했다. 그런 조선 인민이 사법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구나 한국을 통치하는 데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인민의 사법권을 위임 절차도 없이, 하다못해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 같은 선거 절차도 없이 그냥 사법 관료들에게 맡긴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인민들은 그렇게 사법 주권을 누구에 의해 강탈당했는지, 심지어는 사법주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반세기 이상을 주권 부재의 인민들로 살아 왔다. 그리고 그런 주권을 위임하고 빼앗긴 적폐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 만 것이다. 주권을 위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은 주권도 없는 노예상태의 인민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는 자리보전과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윗분들의 심기 살피기일 뿐이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에 앞서 의지도 전혀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인사권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들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30분이나 떨어진 진도 실내체육관의 차디찬 바닥에서 난민처럼 지내면서 설사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릴 때, 경찰과 정부 관료들, KBS와 KTV 취재진들은 팽목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수원의 따뜻한 온돌방을 차지하고는 휴가를 보내듯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국립남도국악원은, 자신들의 연수원을 세월호 유가족 숙소로 사용하자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상급기관에 의해 간단히 묵살되고 말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재벌과 관료, 정치인과 언론이 유착해 법과 제도를 농단하는 1% 기득권들의 세습 귀족국가이다. 삼성재벌의 떡값을 받은 검사들, 판사들, 고위 관료들은 어느 누구도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재벌도 이견회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삼성 재벌 떡값 검사의 이름을 공개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또한 그 이전의 술한 사고들처럼 다 지나가 버린 일로 희미해지고 말 것이다. 이미 20년 전인 1993년의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품백화점 붕괴, 그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이를 입증한다. 주권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되찾아 직접 관료들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관료들과 국가기관을 인민들의 봉사자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큰 재난과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임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다음 재난이 핵발전소 사고가 아닐지 걱정이 될 뿐이다.

2) 지상목표는 오직 이윤, 자본주의 영리회사가 침몰시킨 세월호와 희생자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민낯을 보게 된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자본주의 영리 경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다시 목격한 사건이기도 하다.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특정 기독교 분파가 운영하는 일종의 종교 재벌 소속의 기업이었다. 청해진해운은 할 수 있는 온갖 편법과 탈법, 불법 행위를 다 저질렀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돈이었다.

와우아파트도 성수대교도 삼풍백화점도 똑같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의 대다수 재난 사고의 원인을 캐다 보면 사람 인건비와 시설비, 재료비, 안전 관리비 등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더 늘리기 위해 벌인 영리회사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거대한 뿌리로 드러난다. 이윤 극대화의 지상 목표 아래 사람은 그저 이윤극대화에 동원되는 소모품일 따름이다. 이런 영리회사의 이윤 추구가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지금은 거의 모든 공기업까지 침투해 있다. 지하철과 고속철 사고가 빈번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경제 체제를 찾아야 한다.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경제로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협동의 사회경제이다. 그리고 협동의 사회경제를 기반으로 다른 정치 체제과 구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역 자립자치와 연방주의의 협동사회정치이다.

2. 국가주의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핀 새로운 사회운동

: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운동

그런데 이 같은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찍이 밑바닥에서부터 실천한 선구자가 다름 아닌 장일순과 원주그룹이다. 장일순은 한국전쟁 이후 원주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개개의 주민들이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지역 주민들이 주인, 주체가 된 지역자치공동체를 재생시키는 치열한 실천을 해 온 선각자였다.

한국은 조선 후기부터 근 1백 년 이상을 서구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추구해왔다. 이를 추동한 것은 강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국가주의는 지금도 남북의 모든 인민들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장일순은 식민지 지배의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와 지배 실상을 뼈속까지 체험하며 성장했다. 또한 1945년 해방 이후 자주독립 평등평화의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과정과 한국전쟁을 몸소 겪으면서 강한 국가주의 정치운동의 실상과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였다. 장일순은 단지 체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서구 근대화와 국가주의,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어떻게 밑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사람의 삶과 사회와 국가를 바꿀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실천에 옮긴 행동하는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원주그룹이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며 찾아낸 삶의 방식과 사회운동 전략이 바로 생명운동이다.

그러나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돈오돈수처럼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1980년대 초반 새로운 사회운동 선언과 실천은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의 밑바닥 사회운동 실천이 술한 진흙탕의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풀뿌리에서 피운 연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민중해방운동은 국가를 어떻게 뒤집어엎을 것인가, 인민이 어떻게 억압과 착취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서 혁명운동의 전략을 기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다. 그런데 장일순은 다르게 생각했다. 인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깨닫고 각성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회혁명도 진정한 혁명이 되지 못하고 인민의 삶과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다. 국가권력의 타도와 교체만을 염두에 둔 혁명은 결국은 인민의 삶을 또다른 국가권력, 새로운 유형의 억압과 착취 구조 아래 가두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민 개개인이 자신 속의 한울님을 깨닫고 기르고, 다른 사람과 천지만물 어디에도 깃들어 있는 한울님을 똑같이 공경하고 기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장일순의 생각은 다름 아닌 동학의 사상이자 1896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사상적 지침이기도 했다. 장일순은 서구 근대화 산업화라는 압축 경제성장을 통해 풍요의 극점을 달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로 근본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전통 농업사회에서의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 사상가이자 사회혁명가였다.

해방 직후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난 조선 인민에게 자유인으로서의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폭발한 거대한 희망의 시기였다. 인민들은 새로운 자주적 독립국가와 새로운 평등 평화 사회가 곧 실현되리라는 강한 열망에 들떠 있었다. 사실 해방 후 초기 김일성이 소군정 지배하의 북조선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남한 인민들에게까지 폭넓고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아니라 대단히 유연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실천한 것과 토지개혁이었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조선의 건국에 합심협력하자는 구호는 수많은 인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구호였으며,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지주계급의 지지까지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주도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뼈띠부르조아인 대다수 소농자영농들에게 평생의 소원인 자기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갖게 해 줌으로써 김일성의 지도력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의 지배 아래 박헌영의 남로당이 연합전선을 부정하고 온건 좌파 공격을 최우선에 둔 12월테제(1928년의 코민테른 극좌노선)의 연장선상에서 8월테제를 작성하고 이후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치닫게 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자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 반탁이었고 토지개혁과 자주관립이었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찬탁 반탁 논리에 앞서 대다수 소작농들의 열망은 자주독립국가에서의 자유와 자립과 자치, 토지 분배였고, 식민지와 똑같은 외세에 의한 신탁통치가 아니었다. 찬탁 반탁의 좌우 대립과 함께 이후 김일성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급속하게 북한에 한정되게 되고 만다.

장일순은 해방 후 동학사상의 세례와 기반 위에서 여운형, 김규식 등의 좌우합작운동, 아인슈타인의 연방주의와 평화운동 등에 공명하고 참여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실천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 여운형 등의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 지배 하의 남한에서 친일과 지주계급의 한민당과 극좌노선의 남로당을 극복하면서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여운형은 결국 이승만에 의해 암살되고 만다. 이후 한국전쟁과 남북분단과 함께 인민이 주체가 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은 사라지고 남과 북에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보다 더 강력한 기형의 쌍둥이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고 만다.

장일순은 누구보다도 일찍이 이 같은 국가주의 체제의 극복을 위해 치열한 실천을 밑에서부터 준비한 사람이었다.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장일순의 실천이 소도시 거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자립자치 공동체운동이었고, 자본주의 극복의 사회경제 운동이 협동조합 운동이었다.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협동조합운동과 재해대책위원회의 지역자치공동체 운동은 국가주도와 주민주도, 주민동원과 주민주체 등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확연히 그 성격이 부각된다.

1960년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의 신탁운동, 1970년대 재해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지역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용광로와도 같은 일종의 새로운 사회운동 실천과 실험이었다. 사실 당시 협업농업 실험의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의 밤수동 협업농장은 소농 자영농의 공동체라기보다 일종의 북한식 협동농장 모델로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소농 자영농이 농업노동자가 되는 수도작 협업 농장이었다. 노동력 제공에 따라 가을걷이 후의 쌀을 분배하는 이같은 생산과정에서의 전면 협업은 농업의 기계화와 과학화(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는), 그리고 생산력 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생산력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토지 공동소유의 협업 농장은 대체로 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초기에는 성공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정하게 관료화가 진행되고 나면 토지 공동소유의 협업농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만다. 국가 주도건 민간 주도건 마찬가지이다. 협업 농업은 소농 자영농 경영과 달리 자신의 농지가 아니고 자신의 농사가 아니게 되며 결국 의무화된 노동량에 따른 분배는 농민을 타율로 농사를 짓는 임노동자로 만들게 된다. 밤수동 농장 또한 초기에는 개별 영농과의 갈등과 기타 이유로 탈퇴자가 속출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협업농업의 성과가 크게 부각되면서 1990년 또다시 수해로 농장 운영이

중지될 때까지 관이 인정할 정도의 모범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협업 농장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재해대책위의 다양한 사업, 농민 스스로의 공동체 사업과 각종의 지역개발 사업 또한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우작목반은 한우 가격의 폭락으로, 고추건조 반과 농기계반은 유가 상승의 이유 때문에, 양돈반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잠반은 생사 가격 하락과 일본의 한국생사 수입규제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하고 만다. 박정희의 새마을공장 사업과 유사한 농촌 가내수공업 사업으로서 피혁가공과 신발, 장갑과 바캉스 모자 생산 사업이었던 지역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급격한 이농으로 한국 농업 전체가 붕괴되는 사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부락개발 사업은 일정하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생산력주의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하게 거대화되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가고 있던 한국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처음부터 경쟁이 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일순과 원주 그룹의 가톨릭과의 행복한 동거, 일종의 종교우회론 또한 1979년 재해대책위가 사제들 중심의 사회개발위원회로 개편되고 급기야 1983년 원주교구의 사회사업국 사회개발부 산하로 종속되면서 종말을 고하고 만다. 원주교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를 지배계급과 기득권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기여하는 교회에서 가난하고 억눌리는 인민들의 교회로 전혀 새롭게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근거지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생명사상의 근거지를 마련해 주었던 우애와 환대의 교회이기도 했다.

이처럼 1980년대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새로운 사회운동 모색은 30년이 넘는 지역공동체 활동과 각종 사업의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의 등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민주화운동 또한 강력한 군사적 성격과 국가주의 사회운동으로 치닫고 있던 가운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과 사회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1980년대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은 동학사상과 좌우합작운동의 이념, 아인슈타인의 세계 연방부의 평화운동과 간디와 비노바 바베의 비폭력 운동,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 197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던 공해반대운동과 생태

사상 등 다양한 사상과 철학, 사회혁명 전략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이래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문화와 사상의 배경 아래 원주 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밑바닥 풀뿌리에서 형성된 사회운동 사상과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한살림 생명운동,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바꾸는 사회혁명의 사상과 실천

장일순과 원주그룹이 주도한 한살림운동은 단순한 유기농 생산 운동과 도농 상생의 직거래 운동에 머무르는 경제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장일순과 원주그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근대 산업문명의 폐허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원대한 대안의 세상을 실제 현실에서 이루고자 했다. 특히 모든 생명이 다 하늘이라는 동학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사람들을 못 생명을 평등하게 모시고 자신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유인으로, 한국 사회를 새로운 자유인들의 연대-연합 사회, 생명 살림의 사회로 바꾸고자 했다.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사상에 기반한 한살림선언과 한살림 사회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30년 이상을 지하에서 도피하며 보따리 선생으로서 평생 동학사상을 인민들 속에서 설파하고 다녔던 해월 최시형처럼 장일순은 평생을 인민들과 함께 풀뿌리 지역공동체 속에서 개인과 사회를 개혁하고 혁명하고자 하는 실천을 해왔다. 뿌리 깊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양반과 상놈, 남과 여, 아이와 어른이 모두 평등하다는 동학 사상은 당시 인민들에게는 충격과 개안의 새로운 신천지였다. 게다가 단순한 개인 해방의 평등사상을 넘어서서 동학 사상은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새로운 사회경제 사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서세동점의 서구 근대화와 산업화의 거대한 격랑 속에서 사회혁명 사상이기도 했던 동학의 새로움이었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상에 기반한 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거의 모든 삼남의 농민들이 대부분 동학교도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동학 사상의 혁명성과 보편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살림선언 또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는 새로운 사상과 실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림주구와 외세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농민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자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다른 형태의 혁명으로 부활해야 하며, 한살림선언은 그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두 갑자 후의 동학농민혁명은 철저한 비폭력의 생명살림 혁명으로, 자유인들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혁명운동의 새싹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회운동은 조직을 필요로 한다. 조직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이끌어갈 수 있다. 장일순은 해방 후부터 이미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의 실천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조직의 지도자에 대해 깊은 성찰을 거듭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많은 협동조합 교육과 재해대책위의 교육 당시 지역공동체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직접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강사로 교육을 진행했다. 장일순이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늘 했다는 ‘기어라’라는 말은 인민과 함께 하지 않는 지도자의 엘리트 귀족화, 권력화를 경계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직접민주주의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민주집중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어라는 말을 문자주의로 해석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 조직운동까지도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장일순의 삶 전체를 희화화하고 왜곡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일순은 장삼이사의 조합원과 농민들, 주권자들에게 기어라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한살림생협을 비롯한 한국 생협운동은 지금 물류통합을 중심으로 경제사업으로서의 일정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일순과 원주그룹이 지향했던바 새로운 사회혁명 운동으로서, 생명살림, 농업살림의 생명운동과 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 재생운동으로서, 자유인들의 연대운동으로서 한살림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협의 물류통합 사업은 도시 소비자와 유기농 생산자 사이의 연대와 연합이라기보다 강력한 중앙물류 사업체에 수직계열화 된 순전한 갑과 을의 경제적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협동조합 사업이 결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경향은 근본의 성찰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협동사회경제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지역의 엘리트 귀족정치를 주민 주체의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정치로 바꾸는 사회운동의 전망을 처음부터 갖고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장일순과 원주그룹의 생명사상이 한국의 협동사회경제운동과 사회운동에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2부 | 대화모임

“우리 시대 협동운동의 진단과 내다보기”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하승우 | 땡땡책협동조합

1. 들어가는 말

협동조합 ‘과’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건 어떤 효과를 가진다.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두 개념이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된 느낌이다. 구분이 분리는 아니어야 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분리의 느낌이 강하다. 여유가 있으면 필요할 때 한번 접목해 봐야지,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바뀌서 물어보자. 흔히 협동조합을 사업체이자 결사체라고 한다. 흔히 사업체의 운영방식을 경영으로 표현하고, 결사체의 운영원리를 민주주의라 표현한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 그렇다면 협동조합 활동가, 실무자, 조합원들은 경제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자연스레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민주적인 통제’는 뭘 말하는 걸까? 조합원이 통제하는 민주적인 조직이고 1인 1표를 가지고 있다는 2원칙에 대한 설명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민주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협동조합 7원칙 중 두 번째 원칙은 다른 여섯 가지 원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

또 협동조합운동의 오랜 역사를 말한다. 그런데 역사는 끊임없이 현실과 맞닥뜨리며 전진하고 후퇴한다. 협동조합운동의 역사가 만들어온 구조가 있다면 현실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할 구조도 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현실의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켜 왔을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대다수 협동조합들의 정관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건 내부구조나 활동양식도 동일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2. 서기 2020년의 협동조합운동은?

더글러스 러미스(D. Lummis)는 『래디컬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지적한다. 지금 현실과 관련된 오해들을 추려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는 민중의 복지를 돌보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민중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이다.
- 민주주의는 자유선거이다.
- 민주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 민주주의는 민중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러미스는 이런 오해들을 반박하면서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를 가지는 게 아니라 민중이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것이고, 발전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정치가 선거라는 형식적인 장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갈라질 수 없고, 민주주의는 민중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제도나 원리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민중이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 출렁출렁 유동적인 상태라는 게 러미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떠한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렁거리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인가? 1980년에 레이들로 박사는 그 유명한 『레이들로 보고서』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특성이 협동조합의 모든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했다.

- 조합원 간에 어느 정도의 균질성과 연대의 기초가 되는 조직적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각각 2ha의 농지를 가진 빈농 500명과 2000ha씩 소유한 부농 5명으로 조합원이 구성될 경우, 대농의 큰 사업량이 협동조합의 생존능력에 기여할지 몰라도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기반은 되지 못할 것이다.
- 민주주의는 투표율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의하여 측정된다.
- 완전히 민주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인 조합원만이 임원과 이사를 임명하고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 민주적인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모든 단계의 지도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민주적인 협동조합에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완전한 의미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 별도의 “남성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적인 “여성의 역할”도 존재하지 않는다.
- 사업장에서 종업원 사이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한다고 할 수 없다.
- 조직의 민주적인 성격은 조합원에게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합원이 의견을 제출하고 피드백(feed-back)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판별할 수 있다.
-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모든 보고나 정보는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소수민족을 위해서도 그들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중요한 결정은 위계질서에 따른 명령보다도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깊이는 관리구조의 최하위 단위에서 제출된 제안에 따라 얼마나 결정되느냐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 민주주의에서는 전문가나 전문기술관료가 조합원에게 상담과 조언, 그리고 권고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평조합원이 결정한다.

레이들로 박사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내다보며 이를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 과제들 중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건 얼마나 될까? 조합원들 사이에는 빈부를 넘어서 조직적인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나? 조합원의 참여율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나? 임원과 이사는 어떻게 선임되고 있나? 조합은 어느 정도의 교육과 지도자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 조합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구분되지 않고 다양한 남성들/여성들의 정체성이 인정되고 있나? 실무자나 활동가들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나? 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조합원들은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나? 조합은 다양한 언어,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 가장 아래에서 제출된 제안이 어떻게 전체의 합의로 모아지고 있나? 평조합원이 조합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나?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이런 물음에 어느 정도로 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뵘
싸, 이미 시간은 2000년을 훌쩍 넘어 2014년이 되었다. 과거의 협동조합운동은 시대를
앞선 과감한 결정들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은 어떠한가?

2013년 1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2020년을 내다보면서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
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조합원제도
와 지배구조에 있어 참여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현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젊은이에 초점에 맞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탐색하여 참
여와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 구조가 조정될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
다.
- 민주적 참여와 관계, 관여에 혁신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찾아내서 전파하고 유지시킨다
- 모든 협동조합이 조합원 전략을 채택하고 매년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원한다.
- 소셜미디어를 통한 논평, 대화, 논쟁, 관계와 같은 여타의 혁신적이면서 전통적인 참여의 형
태가 조합원제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조합원, 후원자, 추종세력과 같은 서로
다른 참여의 형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전통적 조합원제도의 요소
들을 검토한다.
- 공동생산과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하여 기업조직의 맥락에서 혁신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한다.
- 개별적인 추진과제로서 자본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협동조합 특성을 저해하거나 손상시키
 않으면서 자본 제공자를 위한 조합원과는 다른 제한적인 형태의 참여를 검토한다.

아이쿱생협연구소가 번역한 이 보고서를 여기저기서 읽은 것으로 아는데, 협동조합운동
의 전략으로 어느 정도로 고민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참여구조가 고민되고 있는지, 협동조합 내의 혁신적인 참여 사례가 전파/공유되고 있는
건지, 조합원의 참여를 끌어낼 전략이 매년 수립되고 있는 건지, 단순 홍보용 수단을 넘
어 소셜 미디어가 쌍방향 소통의 수단이 되고 전통적인 참여형태와 접목되며 새로운 의사
소통/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지,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확보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맨 마지막의 자본확보와 관련해 조합원의 참여형태를 다각화하는 문제 정
도만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논의되고 있다.

『레이들로 보고서』나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과 더불어 우리는 한국의 협동조

협운동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정말 서기 2020년의 협동조합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매번 땀질하듯 단기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 말고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있나? 20세기 협동조합은 21세기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새로운 세대구성과 사회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까?

3. 한국사회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협동조합이 ‘섬’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수준인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은 어디인가? 마을, 학교, 공장, 사무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SNS, 어디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느끼고 경험하며 그 감각과 방법을 키우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우리는 어디서 고정되고 획일화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민주주의 ‘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을까? 무기력한 대의민주주의와 당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최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무슨 민주주의가 더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지금으로도 민주주의는 충분하고 민주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고, 외국에서 얘기되듯이 현재의 문제는 과잉된 민주주의(demorecracy)라는 거다. 지금껏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했거나 자기 삶과 연관된 결정들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론장에 모습을 드러내면 기득권층은 기함하며 이들을 막아선다. 마치 당장 무슨 변고가 일어날 것처럼,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한때 몫 없는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했다. 몫 없는 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체이니 치안의 질서에서 벗어나 강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며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치안의 힘이 너무 강하다. 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청도, 여러 지역에서 마을이 위협받고 있고,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콜트콜텍,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권리의 목록을 제 아무리 길게 만들고 읽어줘도 그것을 실제로 쓸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 쓰고 쓸 수 없는 게 약자의 권리 아니던가. 뭇을 논하는 순간 돌아오는 이 폭력 앞에서 민주주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한때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말이 유행했다. 한국에서 노동자와 청소년, 소수자들은 이미 혈벗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그 현장과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할 뿐 우리는 ‘죽음의 뽕뽕이’를 들고 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존재들이다. 무기력한 민주주의가 이 뽕뽕이를 멈출 수 있을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좀 과잉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목소리와 개입이 있어야 기득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잉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뜻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다가서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누가 과잉을 주장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누가 민주주의의 과잉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단순히 자기 뭇을 못 챙기는 사람들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뭇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 자체가 없다. 중요한 정치의제는 언제나 중앙이나 외부에서 논의되다 삶으로 툭 떨어진다. ‘자아성찰’과 ‘자기판단’은 교과서어나 나오는 얘기이고 실제 삶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 수많은 착시현상들이 판단을 방해하니 판단력은 더욱 떨어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시민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대략난감이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스스로 주체로 서지 못하는 민주주의, 서로를 알아보고 동등하게 인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새로운 관계와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가식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 권리목록을 만들고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나 공론장은 계속

줄어드는데, 권리를 교육받은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생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건 공리이지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리는 분노보다 냉소를 낳기 쉽다. 이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다른 권리목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식화와 교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공공성은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시장, 시민 사회의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엉키거나 충돌하는 지점이 늘어나고, 기후 변화나 먹을거리, 에너지 문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들이 많아지는 우리 삶을 반영한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파국을 함께 대비해야 하기에 공공성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물론 공공성 자체가 그런 다양한 사안에 관한 모범 답안은 아니다. 공공성은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같은 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없이도 공공사업의 진행은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은 민주주의 없이 확보될 수 없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해야 하는 건 우리의 자유를 위해, 더 솔직하게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다.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협동조합운동이 힘을 가지려면 이런 많은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찾으며 사회의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가 조합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지 말고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리처드 세넷(R. Sennett)은 『투게더』(현암사, 2013년)에서 협동과 관련해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협력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세넷은 실험과 소통이라는 기술에 주목한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는데, “실험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젊은이들은 반복적으로, 점점 더 큰 규모로 연습을 해나가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초기의 소통은 모호하다. 아기들이 보내는 신호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말이다. 놀이 규칙을 협상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아이들은 그 애매모호성을 협상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이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술, 발언만이 아니라 동작과 침묵까지 파악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잘 관찰하기 위해 스스로는 말을 자제해야 할지는 몰라도, 그 결과 나누게 되는 대화는 더 풍부한 보상을 가져다줄 것이다. 더 협동적이며 더 대화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

을 테니까.”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연마해야 한다.

엄기호 역시 소통을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⁵⁷⁾ “우리에게 소리로만 전달되는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고통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말 아닌 방식으로 고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목소리마저 독점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누가 고통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는가를 먼저 관찰하고 찾아내서 그 소리와 말을 공적인 무대에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외치면서 우리 사회가 단속사회, “자기를 ‘단속(團束)’하며 타자와의 관계는 차단하며 동일성에만 머무르며 자기 삶의 연속성조차 끊어져버린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회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더딘 민주주의이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예산제도, 타운홀미팅, 어큐파이(occupy), 공유공간, 희망버스, SNS를 통한 이슈화 등. 이번 변화와 협동조합이 무관할까?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회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섬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4. 조합원주권과 민주주의

한살림운동은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을 뛰어넘는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화두는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조합원주권은 이 하나됨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조합원이라는 부름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규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보면 생산자/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은 갈등을 거듭해 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하는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소비자

57) “‘징징거림’과 ‘조리돌림’의 세계, 대한민국에서 ‘성장’은 가능한가?”, 《프레시안》 4월 18일자.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주권은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한다. 협동조합은 소비자에서 조합원으로 건너갈 징검다리를 놓아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는 협동조합이라면 같은 조합원으로 묶이는 이 양자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안 맥퍼슨 교수가 지적했듯이 협동조합은 주권을 조합의 여러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줘야 한다. 조합원에게 주권이 있다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무기력한 반복이 아니라 조합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그 과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그런 과정을 조직의 목적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개별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가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민들이 자기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한살림운동에서도 이런 주장이 등장한다.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이순로는 “죽어가는 밥상, 생명을 살리고 갈라진 삶을 더불어 사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길, 그것은 미리 깨달은 사람, 올바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뜻으로 그동안 한살림을 많은 가족들이 이용해 왔지만 이용만 해왔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손님 자리에서 적극적인 살림꾼으로 탈바꿈한 것이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이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계획 소비와 책임생산이 가능해져서 개별단위로 남아 있을 때 이용할 수 없었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구입, 공동나눔 속에 개인발전과 참삶의 맛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살림운동은 무농약 농산물을 어떤 특정한 계층에 공급하는 이기주의적인 활동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적으로 만나 인간과 대지의 거룩한 생명을 살려내며 불합리한 삶의 모습을 걷어치우는 ‘함께 살림’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힘을 모아서 꼭 해야 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합시다.”라고 강조했다.⁵⁸⁾ 이순로는 물품을 이용하는 손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공동체 속에서 참삶을 찾는 협동운동을 강조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소비에는 ‘공부’가 중요하다. 소비영역의 활동에서 한살림

58) 이순로, “가장 중요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사장 취임인사, 88년 5월)

의 특징을 찾는다면 공부모임에서 찾을 수 있다. “초창기 한살림을 더욱 한살림답게 한 것은 회원들과 진행한 공부였다. 1990년 4~5월에 걸쳐 열린 과천지역 한살림 공개강좌는 ‘공부하는 어머니는 생명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주제를 내걸었다. 매월 정기강좌가 진행되고, 화곡이나 관악, 과천 등 활동 주체가 꾸려지고, 모임이 튼튼하게 꾸려진 곳에서는 지역강좌도 마련되었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교육 자료를 발행하기도 했다.”⁵⁹⁾ 외부의 전문가나 지식인을 불러오는 강좌나 스스로 만든 교육과정, 이런 다양한 공부들이 소비자의 의식을 조합원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개별화된 소비자를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로 조직했다. 지금도 이런 활동들이 ‘교육’과 ‘자주공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한살림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의 식생활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중 기초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1% 대라는 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임들이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장이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 회원 생활 수칙’⁶⁰⁾은 지금도 되새길 만한 수칙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물질문명의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은 온갖 오염으로 정작 모든 생명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남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여 한살림을 이루고자 합니다.

- 언제나 나의 존엄함을 생각합니다.
- 나를 솔직하게 느낄 수 있는 기도와 수행을 생활화합니다.
- 힘닿는 대로 봉사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 우리말 우리 글을 바로 씁니다.
-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간단하게 조리합니다.
- 합성세제 대신 비누를 씁니다.
- 천기저귀와 면생리대를 씁니다.
- 쓰레기 양을 최소로 줄입니다.
-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59) 『스무 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중에서

60) 《한살림 회원 2만명 기념자료집》, 2000년.

-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반대합니다.
-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합니다.
-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 아이들에게 공동생활에 필요한 예의를 가르칩니다.
- 시간을 잘 지킵니다.
- 적은 액수라도 매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내고,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해서 후원합니다.
-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합니다.
- 생산자에게 편지를 하거나, 생산지를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육류의 소비를 줄이고, 지금 가능한 곡식과 채소 중심의 식생활로 바뀌어나갑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작은 생명체라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씁니다.
- 길에서 마주하는 아이도 우리 아이로 보살핍니다.
- 시설을 이용하는 놀이보다 자연 안에서 놀입니다.
- 한살림 물건을 집을 때 '내가 작은 것 고르면 누가 큰 것 먹겠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살림운동을 이웃에 권하여 함께 펼쳐갑니다.
- 환경보전형 농업(유기농업) 육성에 힘씁니다.

수칙은 존재하는데 이 수칙에 따라 지금 이곳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존재하는가? 수칙을 수련하는 조합원은 얼마나 존재할까?

그리고 조합원 주권이 실현되는 장은 어디인가? 총회인가, 이사회인가? 매장인가? 인터넷 장보기인가? 조합원의 주권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이 있고, 조합원이 그 장의 영향을 받으며 조합원 의식을 강화시켜야 협동조합이 정체성이 강화되고 협동운동이 확장될 수 있다. 마거릿 콘(M. Kohn)은 이런 협동조합운동의 확장을 ‘감염’으로 본다. “물리적 접촉으로 새롭고 위험한 이념의 확산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출신이 다양한 회원과 연대 구조, 영토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치 동원의 토대로 구실하기에 아주 적합한 조직”이었고, “생계를 위해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기댄 것이 아니라 상인이나 중개인에게로 돌아갈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원으로 나누어” 줬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은 “다양한 농민과 노동자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경제적 투쟁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이 되었”고, “그러한 자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대

감, 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비슷한 지위 하락을 경험하던 다른 개인들과의 수평적인 유대감이었다.”⁶¹⁾ 주권은 수평적인 유대감 속에서만 제 몫을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이룰 방법을 찾는 건 여전히 과제이다.

5. 나가며

이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때로는 그 변화를 거스르며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해 조직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킬지, 조합원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고 주권을 강화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씩 진행되며 협동조합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해야지만 2020년의 협동조합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나하나의 협동조합들이 자본주의 속에 틈을 만들고 조금씩 역량을 강화시켜도 그것이 하나의 섬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요즘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이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간혹 듣는데, 대체 그 이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형태도 없이 공허하고 흐릿하게 나열된 것은 이념이 아니다. 이념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좌표이다. 사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만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그건 사회현실을 바꿀 수 없을뿐더러 대안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준다. 우리 시대의 냉소주의와 맞서려면 운동이 자기 원칙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도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에 이념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할 구체적인 사업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우 공허한 이야기들만 서로 주고받을 것이라 믿는다. 반면에 이념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생존전략이기에 구체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마취제 놓듯이 몽롱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진짜 실용은 현실을 냉정하

61) 마거릿 콘, 『래디컬 스페이스』(삼천리, 2013년)

게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생존을 이야기할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몇몇 정치인의 무능이 아니라 정부시스템의 무능이고, 삼성그룹을 통해 증명된 것은 시장의 부패이다. 이 무능과 부패 속에서 침몰하는, 어쩌면 이미 침몰해버린 것은 사회이다. 이 침몰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안을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

협동조합과 노동

김신양 |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1. 문제제기

1) 협동조합과 노동의 관계

협동조합이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고자 했던 바는 다음과 같다.

- ①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의 측면 : 고용/피고용관계로 인한 노동의 소외와 그로 인한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이를 위하여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통제하는 결사체 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임금노동관계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 ② 노동의 사회적 역할(mission)의 측면 : 이러한 결사체를 통하여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지역사회와 협동조합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세움.

이러한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었으며 그 이상은 제대로 실천되었는가?

그동안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참여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노동결사체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 내적으로는 결사체 형식의 조직방식을 통하여 노동관계 및 노동문화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나 직원노동과 조합원활동은 단절을 보였으며, 조직 외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향상 등 사회적 기여의 문제는 구성원(조합원) 이익 중심 경향으로 인하여 다소 간과되어 왔다.

그리고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의 다루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③ 노동의 질과

성격의 측면이다. 노동이 노동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삶의 터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는 노동의 문제이다. 사람과 사회를 위한 노동의 문제이다. 노동조건이나 노동관계를 넘어 사람의 활동으로서 노동 그 자체의 성격을 고민하며 노동하는 사람에게 노동이 미치는 영향, 노동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에 대한 문제는 협동조합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노동의 문제를 생각하는 지금, 이루지 못한 과제와 잃어버린 이상, 그리고 준비해야 할 미래를 위하여 노동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하지 못한 숙제를 하거나 예습을 하는 일이 아닌, 생명의 위기, 사회의 위기, 생태의 위기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을 살아야 하지 못한 숙제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니까.

2) 노동문제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협동조합을 오래된 미래라고 한다. 그 오래란 언제쯤일까? 아마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공동노동조직으로서 서구의 동업자 조직인 길드나 한국의 두레와 계 등의 전통이 토대가 되어 이들 조직이 근대에 들어 민주주의 가치의 도입으로 재조직되면서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 즉 그 야만적인 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시장의 발전 이전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협동조합의 운명을 시장 속에서 사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노동의 문제도 시장의 관점 즉, 고용관계, 고용조건의 측면에서만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체가 탄생한 이유가 시장이 아닌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다시 사고하자는 것이었듯, 협동조합의 운명 또한 근대의 산물인 시장의 틀에 한정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의 문제 또한 그러하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자/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지배와 착취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투쟁의 전선에서 생명의 전선으로’ (박맹

수)의 전환을 제안했듯 이후 사회운동은 갈등의 운동에서 사회협동의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시장의 관점을 벗어나 사회(사람과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와 또 다른 나인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상호 의존하여, 상호긍정적인 부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노동 방식과 노동 문화, 특히 자본주의가 배제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기존의 노동질서와 사회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며 관계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사회와 협동조합

1) 협동조합 탄생의 비밀

협동조합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사회를 꿈꾼 사회유토피아가 실패한 결과물일지 모른다. 소위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이라 불리는 오웬(Owen), 생시몽(Saint-Simon), 까베(Cabet), 푸리에(Fourier), 프루동(Proudhon)은 애초에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사회유토피아’라 불리는 그들의 이상은 대안사회였으며, 그 진행과정은 합리적 모델을 구상하여 그 지속성(생존가능성)을 확신하고, 2단계에는 전체사회의 공격을 피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실험을 한 뒤 성공한 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오웬(1771-1858)은 임금 및 노동시간에 대한 혁신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824년에 미국에서 문명사회와 거리를 둔 New Harmony를 건설하고 나서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한 말년에는 임금노동사회와 빈곤의 종식을 위하여 1848년에 『The New Moral World』를 저술하였다. 그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부정의의 근원으로 보고 1817년부터 약 2000명의 ‘상호협동촌락’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돈이 이윤의 매개체이므로 이를 노동쿠폰(labour-notes)으로 대체하고, 노동시간을 산정하여 상품비용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가치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1832년에는 ‘교환거래소’를 실험하였는데, ‘각자 노동에 따라’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배송된 제품은 그 자신이 평가한 노동시간에 따라 쿠폰으로 지불되며, 구매자는 이 가격을 지급한다. 이 실험은 지속될 수 없었으나 공정가격에 대한 아이디어 발전에 기여하여 ‘로치데일의 공정개혁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의 사회유토피아는 “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인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가 말하는 환경이 바로 결사체(association)이다. 결사는 “모두와 각자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경제적·정신적 힘을 공동으로 모으는 것이며, 공동의 행동을 위하여 감정과 지성을 가진 존재인 개인의 모임이나 집단”을 뜻한다. 결사의 토대는 계열, 즉 (무엇인가를) 행하는 이해와 협력하는 즐거움을 결합하는 것으로 그의 새로운 사회의 구상은 노동세상으로서 공동체 모델 팔랑스테르(phalanstère)를 통해 실현된다. 공동체(phalange)에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푸리에의 시스템은 노동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원칙으로 운영된다: ‘각자는 자신의 노동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공제주의를 주장한 프루동(Proudhon, 1809-1865)은 사회주의를 정서와 형제애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당시의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를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노동조직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주의 이론은 민중의 주권에 기초한 새로운 학정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계한다. “소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다”(회고록 I)며 소유권이 노동자 착취 및 교환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어 부정의의 원천으로 보고 자본주의의 위기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착오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유통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집단의 힘과 노동의 분화가 조화되는 association으로서 공제조합이론을 주창한다. “공제조합이론, 즉 현물교환은, 가장 단순한 형태는 소비대출인데, 집단적 존재의 관점에서 소유권과 공동체라는 두 아이디어의 종합이다”. 그에 따르면 결사체는 정의의 원칙, 즉 “타인이 너에게 하길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하라”라는 문구에 따라 결사한 구성원간 신용대출에 대한 신용대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상호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1848년에 교환은행을 설립하여 무료상호신용대출, 화폐의 폐지, 교환쿠폰의 일반화라는 세 원칙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실

패 후 자본주의사회의 봉건성과 노동자결사체의 민주주의를 대별시키며 공동체의 유토피아를 포기하고 결사체를 옹호하게 된다.

2) 잃어버린 이상을 다시 찾아야 할 때

"별을 바라보고 가도 별이 있는 곳에는 가지지 않는다 해서 별은 거짓이란 말은 되지 않는다. 가도가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참이요, 지도목표가 될 수 있다. 실현되는 것이 이상이 아니라, 영원히 실현 안 되는 것이 이상이다. 실현되는 이상은 실현되는 그 순간 죽어버리나 실현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뜻으로는 순간마다, 또 영원히 계속되어 실현이 되면서 이끌어가는 산 이상이다"(함석헌, 2012). 함석헌의 말처럼 도달할 수 없기에 유토피아가 아니라 저 멀리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처럼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이었기에 거기서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러한 공동체의 이상이 있었기에 협동조합이라는 현실이 탄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앙리 데로쉬(Henri Desroche)는 초기 선구자들의 실험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유토피아적 사막의 대상도 신기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기루가 없었다면 어떤 사막의 대상도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달하고자 한 곳은 공동체 유토피아였으나 협동조합이라는 우회로를 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후예들은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유토피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탄생했다. "유토피아의 좁은 문을 통해 선한 현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드(Gide)가 말했듯이...

초기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의 공동체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유토피아가 있었기에 많은 후세의 사람들이 지금의 협동조합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초기의 선구자들이 실험한 공동체는 마이크로 코스모스로서, 그 안에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공동체는 사회개혁을 위한 실험이었고 공동노동의 실천만이 아닌 다른 교환, 소비, 분배의 원칙을 시도하였다. 공동체의 실패는 그러한 관계의 변화의 실패를 의미하며, 남은 것은 공동노동이라는 형식, 즉 노동결사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협동조합의 이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동노동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인지, 공동체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인지를.

3. 협동조합은 임금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결사체인가?

1) 노동결사체를 통한 임금노동의 종식

초기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 뿐 아니라 이후의 많은 연구자와 실천가들은 Association 혹은 노동자결사체를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였을까? 경쟁, 이윤, 사적소유 등 그들이 공히 비판한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임금노동이었다. 임금노동 중심으로 사회가 변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그 삶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이한 사상적 흐름을 가진 이들도 임금노동의 극복을 공통의 과제로 두고 노동자결사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 사상가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1848년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결사체가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대체할 것임을 환기하였다. 그는 지배적인 전통경제학과 단절하지는 않았으나 부의 생산에 관한 법칙은 ‘자연의 진실’로 간주하고, 부의 분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구분하여 경제의 문제는 자연의 법칙이며 부의 분배는 사람(제도)의 문제로 간주하며 당시 산업사회의 효과에 대해 비판하였다.

사회적경제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공화국’의 실현을 주장한 지드는 “‘임금노동 철폐’라는 문구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 즉,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이 자본가, 기업주, 소유주를 살찌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의 노동의 성과를 온전히 그 자신이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노동자가 알게 되는 경제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가 고용된 기업에서 그는 그 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새로운 기업이 구축하는 공화국에서 그는 더 이상 신하가 아닌 시민이 될 것이다”라며 협동조합이 노동자가 예측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다.

2) 또 다른 노동소외의 공간이 된 협동조합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이념은 오늘날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데 그 결사체의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동안 협동조합은 직원노동에 의존하여 유지 및 성장해왔으며, 직원노동과 조합원 활동의 분리가 고착화되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임원진과 조합원의 인식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노동을 일반기업을 위해 투여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협동조합이라는 곳을 선택할 때부터 실무자들은 직원으로 채용되지만 이미 활동가로서의 삶을 지향한 것이다. 그러나 직원이라는 이유로 결사체의 운영에는 소외되고 실무(사업)에만 자신의 노력이 투여되니 회의가 들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직원 또한 협동조합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형식에 얽매어 자신의 노동을 전적으로 투여하는 직원보다 조합운영에 별로 관심없는 조합원의 의사와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경영에서 소외되고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다보면 실무자(직원)들은 탈출구를 노동조합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 이 상황까지 가면 이제 실무(직원)의 문제는 노사간의 대립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협동조합이 노동의 문제에서 기존 일반기업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단지 소통의 부재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조합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이라는 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소외의 문제이다. 이 노동소외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제도적 요인과 인식의 문제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대립관계를 전제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협동조합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또한 노동관계를 맺는 근로계약은 일반기업의 노동문화를 근간으로 한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제도와 시장관행에서 오는 이중의 제약 속에 놓여있는 것이 결사체 조직의 딜레마이다.

둘째. 이러한 환경 속에 위치한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인의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이라는 결사체 조직에서 노동은 소외되지 않고 노동의 주체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무(직원)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점으로 피고용인 대우를 하며 조합운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허다하

고, 조합원의 참여는 조합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필요한 노동 외적인 활동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생협에서 왜 직원만 배송을 담당하고 조합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조합원들이 시간이 없고 참여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은 점차 이용만 하는 소비자로만 남게 되었다. 이용만하는 것이 조합원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노동결사체의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과 활동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수익의 문제이고 경영의 이유로 벌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4. 세계화/상품화로 인한 생명위기/생태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의 과제

1) 다른 노동을 위한 짧은 실험

외환위기 이후 실업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제3섹터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보호자없는 독거노인의 무료간병도우미, 컴퓨터 및 음식물재활용, 사랑의 집고치기, 학교 보건환경개선 등 주요사업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생계보호대책인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장년층의 저학력 노동자였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기, 사회의 위기를 맞은 시기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주체가 되었고 그 일자리는 죽어있는 것을 살리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고 죽어있는 공간을 살리는 노동이었다. 이는 이후 ‘사회적일자리’로 계승되어 무료도시락 배라이나 장애아통합교육보조원사업 등으로 확장되었다.

사회적일자리의 의미는 시장중심, 혹은 국가중심이 아닌 ‘사회적 협동을 통한 노동의 개발’을 의미한다. 또한 이 이 노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받고 되돌려주는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

이었다. 일자리라는 명칭이 붙여졌지만 이 실험은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삶의 터전에서부터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이었고, 그 노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시장이 버린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한국사회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로 왜곡되긴 하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돈을 안 버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동하여 만드는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재정조합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상노동으로(자원활동가) 참여하며, 사회의 불이익자들은 노동자이자 교육생으로 참여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간의 발전과 시민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역사회(공동체)의 일반이익을 추구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문화와 실천을 “노동의 가치를 더 큰 사회적 질에 이르게 한다는 사회적기업정신의 기본 원칙”에 두고 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법은 네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 사람의 치유를 위한 행동
-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인정되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의 회복과 생산적 이용
- 제품과 서비스의 질, 생산방법의 질, 작업장 및 노동자간 관계의 질
-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관계의 민주성, 권리 존중과 개인의 기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동의 질

위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기능주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치유와 존중, 그리고 생명과 살림의 가치를 가지고 협동을 위한 관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을 고려하면서도 끊임없이 협동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프랑스 버전인 공동체이익협동조합인 SCIC 또한 사회적 목적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SCIC은 무엇보다도 지역성을 강조하기에 최대한 지역사회의 많은 집단과의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하여 복합이해당사자구조를 취

한다. 지역에 기반한 SCIC이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관별할 수 있다.

-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생산조직
- 생산물이 최대한 다수에게 용이한 접근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 동원 능력
- 경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정도
-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정도

2) 협동조합과 다른 노동

사회적경제선구자들의 이상, 노동결사체의 전통,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진 제3섹터형 일자리 및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험은 협동조합운동이 노동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준다. 앞서 살펴보았듯 다른 노동관계와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제는 관점의 전환과 더불어 시대를 제대로 읽어 내어야 할 것이다. 이제 협동노동이라는 추상적인 슬로건을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노동, 치유가 되는 노동(노동의 주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살림의 노동(노동의 결과), 돈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한 비상품적인 노동(노동의 교환),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며 새로운 노동을 개발하며 새로운 노동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모두에게 빛을 지는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 주고받고 되돌려주는 다른 사회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진 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 생명살림의 노동 : 화재 및 자연재해 대비, 재난구조 및 구호 등. 예방 차원의 교육적인 활동과 전문인력 보조. 예) 재난가능지역 살피기, 재난가능지역 등산객 동반, 덤불치기 등
- 남부국가와의 연대 및 기술 원조 : 역사적인 채무관계의 해결하기 위한 활동. 예) 남부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공정무역(민중교역)
- 삶의 터전 지키기, 자연살림의 노동 : 지역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시골집, 버려진 집, 산업

화로 인해 황폐화한 땅을 유용하게 하는 활동. 공공부문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문화유산 지키기 예) 지역건축 발굴, 지역고문서 조사, 지역에 대한 기록, 장인활동의 부활 등

- 과학기술의 인간화 및 순환에너지 : 전통기술을 복원하고,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정기술, 전환기술 등
- 품앗이노동 : 상품화 및 화폐의존성 감소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한 품앗이 노동(지역화폐)의 활성화 예) 주택협동조합의 임대료 지급방식: 현물, 혹은 돌봄서비스 등
- 자급과 자치를 위한 노동 : 농민농업의 전통과 농문화를 지키기 위한 지역먹거리 생산 및 유통체계 예)호혜시장 ●

생명 위기 시대, 협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정규호 | 모심과살림연구소

1. 생명위기 시대 한가운데서

“산업문명이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급속히 생명을 파괴해 가고 있는 오늘의 죽임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요청은 바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입니다”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한살림선언’을 세상에 내놓은 한살림모임은 창립의 정신을 이렇게 밝히고 시작한다. 그런데 25년 전의 이 말이 요즘처럼 절실하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적도 없다. 지금 우리는 ‘생명위기’ 시대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밀바닥까지 충격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꽃다운 청춘의 시절을 지옥 같은 경쟁의 굴레에서 보내다가 모처럼 학교 교실을 떠나 짧게나마 한껏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할 어린 생명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닷물 속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사태를 무기력하게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부끄럽기만 하다. 과연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사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물음들이 사람들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고의 발생과 구조과정,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과 정부의 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 상식마저 허물어버리는 사실들만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 정부 기구도 문제인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 수습’보다 ‘여론 수습’에 더 몰두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sociopath)를 의심케 하는 언행들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넘어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놓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진단이 있다. 바로 ‘돈’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우선하는 지금의 세태가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수명이 다되어가는 낡은 선박을 수입해 불법 증축하고, 규정을 어겨 화물을 과적하고, 업체와 유착된 담당자들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운항의 책임자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사고 직후 선박 구조를 위한 해상크레인 투입도 사용료 부담 문제로 늦춰지고, 민간 인양업체가 사고 수습에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각종 잡음의 배경에도 결국 ‘돈’ 문제가 얹혀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 남아 있는데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의 여파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에도 성수대교 붕괴, 서해페리호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등 수많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 예방과 관리, 수습 체계 강화를 정부가 약속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반복, 확대 재생산되는 위험 요인들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심정으로 마냥 버티고 살아갈 수만은 없다. 이제라도 이윤 추구의 돈 중심의 사회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기심에 대한 무한 추구를 전제로 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동체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돈을 앞세운 일상화된 낡은 관행들이 쌓여서 비극적인 재난으로 드러난 것이다.⁶²⁾ 적어도 사고 발생까지의 과정을 보면 관련 당

62) 개별로는 아주 작은 오류나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일반적인 작동과정을 통해 상호작용

사자들은 예전처럼 관행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는데 결과는 엄청난 참사로 돌아왔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관련자들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면 구조 및 시스템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위험의 본질은 놓칠 수 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낡은 배는 그냥 두고 운행하는 사람만 바꾸는 꼴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 배치와 콘트롤타워 강화는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위험사회가 만들어내는 사고의 성격상 수습 자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관련분야 행정조직은 더 커져 테크노크라트들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모습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한편,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선장’을 찾아나서는 일 못지않게 보다 근본적으로 ‘낡은 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생명위기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인식들을 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산 시민들이 노후된 고리원전을 재가동하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부산 단체장 후보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낡은 국가주의, 관료주의,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과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을 자각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가 대개조’와는 성격과 방향,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하는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위험한 ‘낡은 배’라는 것을 자각하고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총체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지금부터라도 인내를 가지고 아래로부터 모아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돈’보다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게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의 경제를 모색해 온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을 일으킨 결과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두고 미국 사회학자 찰스 페로(Charles Perrow)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라고 불렀다.

2.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기대와 복잡한 시선들

시대와 환경, 지역별로 협동조합에 강조되어 온 역할들은 다양한데, 여기에서 생명위기 시대에 걸맞는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현실에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높은 기대의 배경과 복잡한 시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우리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의미 있는 대안으로 갑자기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고, 협동조합 관련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반도 되지 않아 전국에 4천여 개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고, 당분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인 협동조합은 진공상태가 아닌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만큼,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 및 과제에 따라 그 역할과 전망,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근대 산업혁명의 길을 일찍 나섰던 영국에서 노예노동에 혹사당하던 노동자들이 나서서 소비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고, 농업이 중심이 된 프랑스에서 농민 생산자들이 나서서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고리대금업자의 횡포가 심했던 독일에서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신협운동이 등장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자본주의 태동기와 성장기의 협동조합이 같을 수 없고, 제1세계와 제3세계 협동조합 모델이 같을 수 없으며,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협동조합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협동조합이 상황에 따라 사회적 대안의 영역을 창출하기보다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국가의 통치나 시장의 지배를 유지, 확대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주류 협동조합들의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농협의 경우 240만 명의 조합원에 23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 10번째 조합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 농가 숫자는 1975년 248만3천 호에서

2012년 말 115만5천 호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농협 임직원 수는 2만2천 명에서 8만6천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서민들의 금융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운동으로 등장했던 우리나라 신탁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창립 54년을 맞은 현재 자산 55조 원, 조합원 수 590만 명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4번째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초창기의 정신은 상당히 퇴색해 버렸고, 오히려 지금은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인 제2금융권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⁶³⁾ 여기 에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 종교기관의 사업 자금줄로 신탁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에 달하는 1,600여만 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산 총액이 4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양적 지표와 협동조합 사회의 실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⁶⁴⁾ 그나마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곳이 생협인데, 생협 또한 전체규모로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압축 성장을 해왔고, 이로 인한 적지 않은 해결 과제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⁶⁵⁾ 이 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합원 수나 사업규모 같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지표를 넘어서 시대적 환경과 변화를 예리하게 읽어내고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바람’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련 분야 종사자나 연구자들 외에는 사회적으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2-3년 사이에 협동조합이 마치 새로운 유행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자립과 자치의 원리로 협동조합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 참여의 질을 얼마나 높여나갈 수 있을지는 이후 과제로 두

63) 조합원 교육 소홀과 방만한 경영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400여 곳의 신탁이 해산 또는 청산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로부터 4조 8천억 여원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64) 유정규, 2013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한국협동조합의 과제와 지역사회기여>, 충남사회적경제 SE연구활동.

65)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생협들은 생협법이 발효된 2000년부터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당시 생협 조합원이 모두 4만 6천여명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43만명으로 10배 정도 확대되었고, 공급액도 2000년 300억에서 2010년에는 5,200억원으로 15배 정도 증가했다.

더라도, 생협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 바깥에 있었던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은 분명 놀라운 변화다. 어느새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도 익숙한 말이 되었고, 실제로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고자 나선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토록 협동조합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협동조합 자체가 가진 매력이 주는 ‘끌어당김 효과’(pull effect)와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삶의 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밀어냄 효과’(push effect)가 서로 증폭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먼저, ‘끌어당김 효과’부터 살펴보면, 2012년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통해 협동조합이 널리 소개된 점,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점,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협동조합을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제로 인식하고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의 대안적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점 등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도 협동조합 영역들이 축적해 온 앞선 경험과 사례들 또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으로 작용했다. 즉 협동조합이 나름의 오랜 역사와 이론적 체계를 갖춘 데다, 자본주의 위기 이후 대안의 부재 속에서 스페인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 지역 협동조합 등을 통해 성공한 모델들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협동조합들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10억 명의 조합원을 둔 UN 소속 세계 최대 비영리 조직으로서 보편성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협동조합 바람은 일어나기 어렵고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이처럼 갑자기 높아지게 된 데는 어

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겨진 깊은 마음(民心)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금을 생명위기 시대로 진단했듯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면한 현실의 불안정성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고도성장’, ‘지속성장’, ‘동반성장’의 신화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울한 노동의 시대’로 불리듯이 일자리 문제는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빠지고 있고, 부채 문제 또한 심각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⁶⁶⁾ 특히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데, 고용 양극화가 소득, 교육, 의식주, 건강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세대간, 세대별 양극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⁶⁷⁾

결국 이러한 현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불행)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사활을 건 경쟁 속에서 관계는 단절되고 낙오와 소외, 배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을 피로사회, 탈진사회, 단속사회로 진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이 홀로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관심과 필요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협동적 삶’의 길을 적극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⁶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개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협동’,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졌고, 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협동경제, 공유경제, 호혜경제, 살림의경제 등 다양한 이름의 ‘대안적’ 경제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해졌다. 1844년 영국 로치데일의 공정 선구자조합이 근대적 협동조합의 길을 개척한 지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의 영역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66) 가계부채 1,000조, 국가부채 500조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삶이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의 희생과 부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67) 스펙푸어, 허니문푸어(10-20대), 베이비푸어, 에듀푸어(30-40대), 워킹푸어, 하우스푸어(40-50대), 실버푸어(60-70대)처럼 양극화 문제는 세대별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68) 지그문트 바우만은 복잡한 사회관계와 연결망을 느슨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개별화, 개인화시키고 각종 위험에 무기력하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담과 실패의 책임까지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근대사회의 특성라고 이야기 한다(지그문트 바우만, 2009: 16), 그런데 이러한 근대화의 특성이 역설적으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다.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자본주의 성장 국면에서 가능했던 소득증대 전략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선택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지출감소 전략은 내핍 생활을 감당해야 해서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방식은 협동의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차단된 승자독식의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의 생활권 단위로 상호부조의 호혜적 연결망을 촘촘히 짜나가면서 서로의 관심과 필요를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본능적 자각들이 일어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과 기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관심의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대와 시선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바라보는 협동조합의 역할은 주로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영역에 맞춰져 있다. 사실 이것들은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로 다뤄오던 것인데, 경제위기와 부채증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자 자신들 역할의 대행자로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인식들이 강하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나 지역에서 일자리나 복지, 지역 개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해외 사례들의 소개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대를 더욱 높여주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우선하는 공공기관의 논리가 자율과 자립, 자치를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논리와 충돌하고 나아가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까지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사회운동 영역의 시선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협동조합, 특히 생협인 경우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 자립 수단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하고, 조합원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독과점적 구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조합원 참여에 바탕한 다양한 사회실천 활

동들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 조직들이 가진 폭 넓은 대중조직 기반은 사회운동 영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협동조합 스스로 중심을 확실히 잡고 내부에 견제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외부의 요구에 흔들리고 동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이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일반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은 ‘돈도 벌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기실현이든 소득창출이든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적 환경에서 개인이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꾸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데, 협동조합을 통해 그런 부담도 덜고 정부로부터의 지원(인건비, 구매)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협동조합은 특히 청년실업자, 조기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함께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다. 협동조합 바람이 불기 전에 사람들은 비슷한 기대로 자활(2000년), 사회적일자리(2003년), 사회적기업(2007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관심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⁶⁹⁾ 현재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운명 또한 전혀 다르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⁷⁰⁾

결국 ‘돈이면 다 되는’ 천민자본주의 지배하는 현실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돈’ 중심의 사회를 ‘사람’ 중심의 사회로 바뀌내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소유적 개인주의 문화를 그대로 둔 채 틈새 영역에서 작동 가능한 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을 다루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기도 쉽지 않고 조직적 지속성을 담보해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는 협동조합에 새로운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주의 계획경제가 가진 경직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탐욕성을 넘어서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69) 예를 들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2012년에 800여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생겨났으나 이중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70) 기본법 제정 이후 만들어진 신생 협동조합들의 평균 조합원수는 22명, 출자금 22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소자본의 형태를 띠고 있다.

3. 생명위기 시대에 협동조합운동의 의미와 역할 다시보기

지금의 생명위기 상황은 우리의 인식과 통제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문제의 원인 또한 그동안 당연하게 믿고 의지해 왔던 가치와 제도, 시스템 자체에 내재해 있다. 그만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는 예전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서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 한다(2012: 56-57). 지금이야말로 ‘오래 된 믿음에 대한 낯선 통찰’⁷¹⁾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되, 해당 사회와 지역이 가진 맥락과 조건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은 데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자본주의의 영리 기업과 경계가 모호한 협동조합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좋은 것’, ‘만들기 쉬운 것’으로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이 만병통치약일수는 없다. 협동조합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부작용들을 치유하는 데만 머무를 수만도 없다. 지금과 같이 주류의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적 모순을 드러내고 균열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 시대의 협동조합은 ‘대체자’나 ‘보완자’ 역할을 넘어서 총체적인 전환을 매개하고 대안의 거점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자체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동시적 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위기 상황이 만들어 내는 각종 문제들 예를 들어 일자리와 복지, 지역개발 문제를 수습하는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룰 것인가는 비슷하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71) 통찰(insight)은 기존의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임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인식 수단으로서, 현상 이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invisible+sight) 능력을 말한다(레베카 코스타, 201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태동기와 성장기에 필요로 했던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 모델을 참고는 하되, 자본주의 후기 장기 저성장시대에 맞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⁷²⁾ 여기에서 지금은 거대한 생태학적 도전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 생활의 토대가 바뀌고 있는 중에 기존의 경제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시대의 경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외에 생산조건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식량, 에너지, 물 등 경제활동과 생존의 기본 요소인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혜로운 이용은 협동조합은 물론 지금 시대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요구되는 가치 기준이자 책무라 할 것이다. 근대적 산업사회형 협동조합을 넘어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근대 이후 협동조합 모델을 찾아나가야 할 때다. 생명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협동조합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표 1> 협동조합을 둘러싼 시대적 환경 변화

근대사회	근대 이후 사회
· 자본주의 등장과 발전, 신자유주의 확장 · 경쟁자로서 사회주의의 존재와 붕괴 · 지속 성장기에서 선성장 후분배 전략 · 영리 추구형 기업활동의 확대 · 자본주의와의 병행 발전과 협동조합의 관료화, 제도화, 탈협동화 · 면대면 소통을 통한 신뢰의 확보 · 사회운동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 ·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 생태위기의 지구적 확산	· 근대 성장체제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균열 ·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부작용 노출 · 장기 저성장 시대, 전환에 대한 고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강조 · 체제적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 · 정보화 시대의 소통 채널의 다변화 · 기존 운동 한계와 새로운 대안운동 출현 · 사회경제 영역으로 민주주의 확장과 심화 요구 · 예견된 재난으로서 생태위기 전면화

72) 산업화시대에 태동했던 협동조합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아 대부분 소멸했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고용과 복지문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사회적 필요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들이 등장했는데, 이 역시 자본주의 성장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의 생명위기 시대의 바탕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세대간의 관계의 단절이 자리하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를 매개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것을 촉진, 확대시켜 왔다. 생명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관계의 단절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 한편에서는 사회구성원들 다수를 파편화, 무기력화 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과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켜 지배구조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단절과 분리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드러난다. 오늘날 생명위기 시대의 실상은 여기에 있다.

‘예견된 재난’의 성격을 띤 생태학적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각종 재난형 사고가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데다,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 개인 모두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의 틀에 갇혀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다려라’는 잘못된 정보가 가져다 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생명위기를 수반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운동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4. 협동조합 영역에서 생명과 생태 가치에 대한 고민

사실 그동안 협동조합 영역에서 경제적 욕망의 틀을 넘어서 대안으로 생명과 생태의 가치를 고민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룬 레이들로 박사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의 방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했던 레이들로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변화하는 환경과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 멸망한 공룡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⁷³⁾

73) 이것을 레이들로는 “적의 무기를 이용하여 적의 진지에서 대적하려고 한다면 중국에는 전쟁에서 패할

레이들로 보고서는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초창기를 이끌어 온 ‘소비자 제일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보존 사회’(Conserver Society)⁷⁴⁾에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번덕과 과시적 소비욕구로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도록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레이들로, 2000: 126).

“만약 세계가 빈약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소협은 경제성과 검약을 강조함으로써 후기산업시대 소비자사회의 거품과 낭비를 추방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음식을 부리거나 방종하려는 잘못된 습관과 욕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풍요롭고 포식하는 사회에서 소협은 놀라운 판매기록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방종하지 않는 건실한 사회에서는 어떤 것을 팔지 않는가에 의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이 평가될 것이다.” (레이들로, 2000: 126-127).

레이들로 보고서에 담긴 ‘보존 사회’는 1970년대 초 제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캐나다 환경론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한 것으로, ‘성장의 한계’에 대비해 기존의 ‘소비자 사회’(Consumer Society)를 유한한 지구 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아껴서 사용하는 ‘보존 사회’(Conserver Society)로 갈 것을 주장한 데서 영향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협동조합 영역에서의 생태학적 문제의식은 1980년대 이후 오일쇼크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 속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희석되고 사라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모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⁷⁵⁾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고민들이 협동조합운동 영역에 제대로 자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2009년에 이르러 유럽협동조합연맹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ACT(Addressing Climate Treat)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⁷⁶⁾ ICA에서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협동조합의 주요 과제로 삼은 것은 의미

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한다(2000: 125).

74) ‘보존자 사회’ 또는 ‘절약 사회’로 소개되기도 한다.

75) 캐나다에서는 ‘보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살려 내서 끊임없이 소비와 생산을 종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에서 ‘생존 사회’(Survival Society)로의 길을 새롭게 내놓았다. ‘생존 사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는 지금의 인류문명은 ‘보존 사회’로 시스템을 전환하기에 이미 때를 놓쳤다고 보면서, 고도성장에 대한 미련이나 환경보존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버리고 파괴된 지구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6) 이것은 유럽 소비자협동조합의 연대체인 유로코임이 2007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문제를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의제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인데,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뒤 온 소비자협동조합이 기후변화를 주요하게 다룬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시장의 한계 영역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으며, 협동조합 내부적으로도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관심사로 되어 있다. 그나마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별 조직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확장시키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따라서 지금의 협동조합이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이나 사업 모델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위기 시대에 대한 체제적 대안으로서 어떤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생태학적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은 더욱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체 필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규모는 세계 9위,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는 1위 수준이다. 식량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생산량과 곡물가 변동의 폭이 점점 커지면서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2.6%에다 세계 6위 곡물수입국인데 농업 포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체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의 직선적이고 물량적인 ‘성장 사회’에서 순환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깊은 관계에 바탕한 ‘성숙 사회’⁷⁷⁾로의 전환이 필요하다(정규호, 2012). 이 점에서 협동조합이 자신의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생명을 중심으로 삼아 협동운동의 영역을 새롭게 열어온 한살림의 경험과 고민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현재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살림(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기본 인식은 오늘날 한살림 생협의 모체가 되는 ‘한살림농산’(1986년)과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1988년)의 설립 취지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소, 2013: 121-134).

77) ‘성숙 사회’라는 말은 1972년 영국의 미래학자인 데니스 가보르 교수가 쓴 책 제목(Mature Society)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성장의 한계’에서처럼 브레이크 없는 경제 성장의 중독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더해가는 분열, 불신과 공해가 만연하는 죽음의 삶을 협동과 화합, 민음이 가득한 살림의 삶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는 한살림 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살림농산을 개설한다” (한살림농산 설립 취지문 ‘한살림을 시작하면서’ 중에서)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은 생명살림의 실천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을 지양하고, 사람다운 협동의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먹을거리를 살려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려 한다.” (이상국, 1992: 232)

또한 한살림운동의 핵심 가치를 담은 ‘한살림선언’(1989년)에서도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을 바탕으로 현대 산업사회 문명이 만들어 낸 죽음의 질서를 생명살림의 질서로 바꿔내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합원의 눈높이로 정리한 ‘한살림운동의 지향’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이웃과 자연생태계를 더불어 살리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지향은 한살림운동을 생명운동, 생명협동운동으로 부르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주목할 점은 생명가치를 협동조합운동에 창조적으로 결합하게 된 이유다. 이것은 한살림의 뿌리가 되었던 ‘원주지역 협동운동’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원주 지역은 1970년대를 전후로 협동조합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곳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조합 교육과 함께 신탁운동을 전개했고, 1972년 남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대해대책사업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면서 농촌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신탁과 소비조합들을 만들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부락개발사업들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에서도 원주가 중요한 구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원주 지역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197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0년대 들어서 운동 노선을 ‘생명운동’으로 전환했으며, 이것이 한살림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누구보다 활발하게 협동조합운동을 펼쳤던 원주의 협동운동가들이 당시 새로운 방향 전환을 고민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 농촌과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을 열심히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애써 만들어놓았던 협동조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기에다 도시 공산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기존의 소비조합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자립과

생명력을 높여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토대인 땅이 비료와 농약으로 파괴되고 농민들이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에서 산업사회의 양적 성장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협동조합운동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 농촌과 도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운동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생명협동운동이고 한살림운동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통해 도농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실현코자 한 한국형 생활협동운동의 시작은 기존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 지구가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일순, 1997: 148)

“지구 생명지원체제 자체가 파손 직전에 도달한 오늘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몬드라곤 방식의 생산공동체운동이 과연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김종철, 1997: 199)

이처럼 생명협동운동을 일군 1세대 선배들에게는 서구의 근대적 소비자협동조합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인식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 편으로는 생명위기의 징후가 더욱 뚜렷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초기의 정신을 시대 변화와 과제들에 맞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5. 생명 감수성과 책임성을 가진 협동조합을 기대하며

오늘날 우리는 생존의 터전을 파괴하는 데는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보존, 복원, 재생하는 능력은 급속히 퇴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적어도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보다 좋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

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윤리이다. 생명위기에서 생명살림으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지금,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강조해 온 협동조합의 보다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생명위기 시대의 협동조합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경제위기와 생태학적 도전으로 위기에 처한 개체 생명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사업과 활동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로 협동의 그물망을 확장시켜나가는 노력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생명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치유와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 이윤을 매개로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호혜의 경제 영역을 확장시켜나야 한다. 여기에서 생존의 토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지혜롭게 이용하면서 기후변화와 식량,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조직화 된 기반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협동조합이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욕구를 실현하고 결핍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절에 따른 외부화’를 ‘연결을 통한 내부화’로 바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을 포함한 생명 존재들의 깊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망각한 채 관계를 단절, 파괴시키고, 문제 해결의 책임과 비용부담은 물론 위험 요소까지 외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내부화는 상호의존적 관계성에 대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다.

내부화의 가장 큰 차원은 경제-사회-생태계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윤에 대한 무한 추구를 속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 체계와 생태계 속에 제자리를 잡도록 함으로써 사회 및 생태적 인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생태경제학 창시자인 허만 데일리(Herman E. Daly)가 생태계의 재생능력과 자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모델로서 제안한 ‘정상상태 경제학’(steady state economy)이나,⁷⁸⁾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독자 논리로 작동하는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를 사회 속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조한 ‘거대한 변환’(The Great Transformation)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가능성은 크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편화 된 주체 즉 출자자, 이용자, 소유자, 관리자, 수혜자로서 역할을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역할 영역으로

78) 구체적으로 재생가능 자원은 재생 속도 범위 내에서, 재생 불가능 자원은 재생가능한 대체재가 마련되는 속도 범위 내에서, 오염 물질과 폐기물은 자연의 자정과 재생 속도 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결합시켜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주체들이 가지는 다중적인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단절과 파편화 경향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생태적 가치, 노동의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적절히 균형 있게 반영한 가격체계를 운영하는 것 역시 협동조합의 내부화 전략에 해당한다. 다만 시장에서 자원에 대한 선택과 흐름을 정하는데 있어 가격이 주는 영향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비용과 부담은 외부화 한 채 수익만 내부화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안경제 영역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놓고 경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만큼 협동조합이 가진 조합원 조직기반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내부화 전략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내는 출자금으로 협동조합 체계 속에 자원을 내부화 하는 것이나, 협동조합 내부는 물론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내부거래 활성화로 지역 순환과 자립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생산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생협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온 과정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생명 가치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조합원들의 목적의식적인 선택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소유적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관계 지향적인 협동조합인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특히 생명위기 시대에 협동조합이 적합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협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면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자발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협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기본으로 한다. 협동하는 사람 없이 협동조합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협동하는 사람이 협동하는 조직을 만들고, 협동하는 조직이 협동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동하는 사람은 협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협동하는 마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협동의 실질적인 힘이 역설적이게도 ‘같음’이 아닌 ‘다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각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개성과 차이들 속에서 공통의 필요를 발견하고, 협동에 따른 이익을 넘어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마음,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 하는 자세, 심지어 손해를 볼 수 있어도 함께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벽(경계)을 넘어 마음(뜻)과 마음(뜻)이 통하는 것’(以心傳心),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易地思之)이 협동하는 마음의 출발이다. 일찍이 수운 최재우 선생은 이것을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吾心卽汝心)으로 이야기했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라고 하였다. 윌리엄 이케스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보다 깊은 만남의 관계로 나아가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여섯 번째 감각(六感)이라고 이야기한다(2008: 72). 생명위기 시대에는 ‘나’와 교감하고 공감하는 ‘너’의 범주에 사람은 물론 못 생명, 사물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 내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 구조와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협동의 관계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동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자원과 이익의 교환(exchange)과 공유(sharing)의 차원을 넘어서 공생과 상생사회로 나아가는데 협동조합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위기 시대의 대안으로서 국가의 지원이나 시장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은 자립적 삶의 모델들을 협동조합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자립(自立), 자급(自給), 자율(自律), 자치(自治), 자작(自作), 자정(自淨)으로 일컬어지는 ‘스스로’(自)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주류적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감과 상상력도 나올 수 있다. 삶이 공유될 때 가치의 밀도도 높아질 수 있다. 생명위기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은 현실의 모순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긴 호흡으로 준비해가는 ‘인내’와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 목표 가치를 확립하고 확장시켜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은 결국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비롯된다.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축이 바로 ‘사업체’와 ‘결사체’인데, 이

들 각각을 구성하는 운영원리는 서로 다르다. 사업체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반면, 결사체로서 특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참여와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에는 작동 논리와 호흡이 서로 달라 긴장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사업체와 결사체의 조직 원리를 균형을 잡고 끌고 나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은 물론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해 온 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사체와 사업체의 역동적인 균형을 통해 협동조합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는 사업체와 결사체의 ‘균형잡이’이자 ‘방향잡이’에 해당한다. 레이들로 박사가 협동조합의 위기 현상을 진단하면서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에 이은 세 번째 단계의 위기로 ‘이념 및 사상의 위기’를 경고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협동조합 초기에는 정직과 개방, 타자에 대한 배려 등 주로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가치가 강조되었다면, 협동조합의 발달하면서는 민주주의, 평등, 연대와 같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가치가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생명 위기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지금에는 생명과 생태 가치를 협동조합의 목표와 역할 속에 새롭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토대이자 공동체적 삶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주로 경제적 차원에만 제한적으로 맞춰져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조합원 공동의 필요와 열망의 내용으로 경제적 차원은 물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 생태적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 위기 시대에 걸맞게 협동조합에서의 생산 성격과 내용을 ‘더 많은 생산과 소비’에서 ‘더 좋은 생산과 소비’로 바꿔내는 것은 결국 협동조합 지향하는 목표 가치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과 협동조합이 대안경제 주체로서 자신들의 생산과 소비의 성격과 내용을 바꿔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식량, 에너지, 물 등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본 요소인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지혜로운 이용은 오늘날 협동조합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책무다. 이점

에서 현재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물품의 생산 방식과 유통 및 소비 과정이 이웃과 자연, 미래세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회·생태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파괴적인 죽음의 질서를 생명살림의 질서로 바뀌내기 위한 활동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지 깊은 물음이 필요하다(정규호, 2013: 102).

셋째,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조합원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큼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인식의 틀(here-now-ego complex)을 시공간적으로 확장시켜낼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의 원리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동의 필요와 열망’(common needs and aspirations)이라는 것이다. 즉 조합원 개별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조합원 구성원들 간의 공감과 합의 과정을 통해 확인된 ‘공동’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의 핵심은 주어진 선호(preference)를 다수결을 통해 산술적으로 결집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숙의(deliberation)의 과정을 통해 선호를 전환(transformation)시켜 의사결정의 ‘질’(quality)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욕망의 체계가 개인들의 삶과 욕구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의 영역을 창조해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웃과 미래세대, 못 생명의 가치를 배려하고 공존·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이 필요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근대적 협동조합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및 운영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다 참여 조합원들로부터 질 높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과정의 섬세한 설계와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조합원과의 소통과 정보 전달 과정에도 상호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서 공감과 합의의 기반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자발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상호 소통을 매개하는 다양한 수단들 또한 개발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

- 김종철, 1997, “한살림운동과 공생의 논리”,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레베카 코스타 저, 장세현 역, 2011, 『지금, 경계선에서: 오래된 믿음에 대한 낯선 통찰』, 쌤앤파커스.
- 레이들로 저, 김동희 역, 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1980년 모스크바 ICA 총회 A.F. 레이들로 보고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2012, “소비의 새물결이 마케팅을 바꾼다”, CEO Information, 제848호(2012. 4. 4).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2013, 〈밥상의 전환: 기후변화와 농업, 협동조합의 미래〉, 한티재.
- 윌리엄 이케스 저, 권석만 역, 2008, 〈마음읽기: 공감과 이해의 심리학〉, 푸른숲.
- 유정규, 2013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한국협동조합의 과제와 지역사회기여〉. 충남 사회적경제 SE연구활동.
- 이상국, 1992,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의 실재와 발전과정”, 사)한국소비협동조합연구회, 〈한국소비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 장일순, 1997,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정규호, 2012,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문명 전환기의 도전과 과제”,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규호, 2013, “전환의 시대, 사회운동의 방향과 역할”, 모심과살림연구소, 〈모심과살림〉 1호. pp. 82-103.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2009,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 한살림, 1989, 〈한살림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김영옥·홍승아 역, 2012, 〈행복의 경제학〉, 중앙북스.

나는 누구인가?

김성훈 | 민들레의료생협

1. 나

이 대화모임의 주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 노동,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서로 다른 사전적 의미를 갖는 말이지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이다.

따라서 21세기 초입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의 길(道)을 찾는다.

해월 최시형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 1897년 4월, “나”를 찾는 후학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그것은 “향아설위(向我設位)”였다. 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나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이며, 노동은 나의 창조성에 대한 것이며, 생명은 나의 우주성에 대한 것이다.

주체성, 창조성, 우주성은 본래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그러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나”가 그렇듯이, “너” 또한 그렇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 노동,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실체인 조합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집단적 자각을 위해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 결사체를 본질로 하는 협동조합의 핵심과제이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장일순)

나는 너와 더불어 우리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되지 못한다.(김상봉)

운명공동체, 한살림운동엔 한마음 자각이 있어야 한다.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일 수 있으면 시천주(侍天主)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초점이 하늘님이 아니라 이미 하늘님인

나에게 있어야 한다.

2. 우리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란 말은 이미 오래되었다.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과 정부에 기대온 우리의 처참하고 참담한 자화상을 발견하였다. 시장과 정부의 배후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인류문명은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공동생활집단으로서 “사회”의 안부를 묻는다. 사회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3. 지역사회

사회는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느낄 수 있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의 윤리적 요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가까운 사회, 얼굴있는 사회, 나의 주체성, 창조성, 우주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영향력이 커야 한다. 그래야 남탓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기력과 무능력, 우울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품앗이, 두레, 계, 향약과 같은 전통의 결속이 가능한 현장은 지역사회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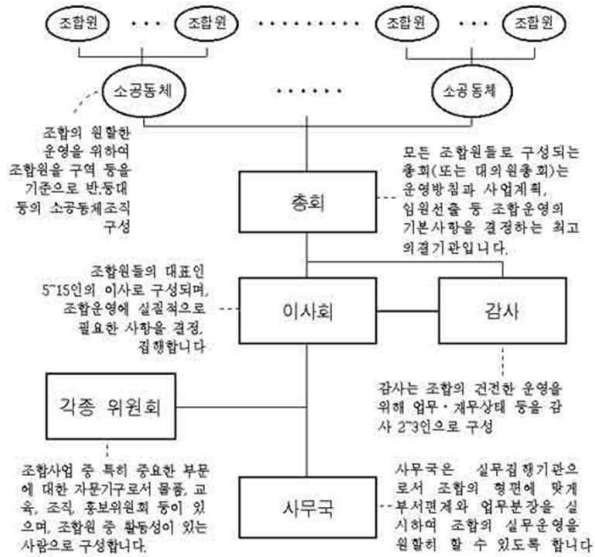
지역사회 재구성을 위한 두 가지 열쇠. 공유(公有)와 공유(共有)(만남포럼)

협동조합 지역사회

4. 현장이 학교다

결사체를 본질로 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통해 공유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힌다.

5. 민주주의



6. 노동

조합원과 직원의 협동.

조합원과 직원은 서로주체

노동자 자주관리

7. 생명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 (중용 첫 장)

스티븐 코비는 효과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말한다.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독립성에서 상호의존성으로, 그리고 8번째 습관에서 “the inner voice”, 우리 표현으로는 “양심”

의 소리를 찾으라고 말한다.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박재순)

모두가 달라 모두가 좋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빛나는 마을 만들기 (미나미의료생협)

나로부터 시작하는 희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무기력한 대의민주주의와 당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대립을 넘어서

구교선 | 원주생협

협동조합이 초기 설립 단계를 지나서 내부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에 의한 직접적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정도로까지 성장했을 때, 조직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식화 제도화하는 과제가 부여되는 시기가 있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제때에 조합원들의 요구와 자기 조직 수준에 맞는 대의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적 위기를 겪은 사례는 많다. 설립자들의 초기 유대관계와 그들의 비공식적 의사결정은 신속하기도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주권이 조합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조직 수준에 맞게 대의제도를 정돈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두 차례 조직적 위기를 겪은 많은 생협들은 생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위법하지 않도록 소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들은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하느라 늘 긴장해 있다.

이안 맥퍼슨이 말한 바, 협동조합은 주권을 조합의 여러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줘야 한다는 말이 요즘 들어 더욱 뼈아프게 들린다.

최근 모 생협에서 상당한 규모의 물품 안전사고가 났다. 딱 10년 전인 2004년에 소위 ‘더불어식품의 물품사고’가 났는데, 당시와 비교해보면 피해 조합원의 숫자도 금액도 기간도 몇십 배 크다. 그런데 협동조합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많이 달라 보인다. 이제 이런 사고쯤은 조합이 매뉴얼에 따라 잘 처리해서일까? 각 조합의 대표자들은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매장에 게시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딱히 관심 없어 보이고, 조합은 그런 조합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지도 않는다.

2004년 당시 각 단위생협들은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단위에서 사고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또한 연합 조직 차원에서도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생협다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조합원 모두에게 웹으로 안내지로 빠짐없이 공개되었다.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조직 단위 수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고 논의 과정은 수개월이 걸렸다.

2014년 5월, 해당 이사회는 자기 권한을 합당하게 행사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조합원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을 펼치기 위한 면밀한 노력은 생략되었다. 당연히 조합원이 그 장의 영향을 받으며 조합원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협동운동을 확장할 기회도 사라졌다. 해당 업체의 비윤리성을 비난하고, 가능하다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새로운 납품 업체를 찾고 관리시스템 강화를 선언하는 것, 이 프로세스에는 조합원 참여의 장면이 없다.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 협동운동의 확장은 꿈꿀 수 없다.

발제자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좀 과잉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 달라는 목소리와 개입이 있어야 기득권이 해체된다. 사실, 한국의 협동운동의 역사에서 어느 협동조직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장려 내지 경험하고 생명력을 키워갔던 성공 사례는 잘 모른다. 반면 조합원의 참여와 자기표현을 민주주의의 과잉이라 불편해하고 무언가의 절차로 간단히 대체해버린 사례는 더러 알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활발한 자기표현은 일정하게 조직을 혼돈에 빠트린다. 조직이 지극히 비정상 상태가 아니라면, 구성원 사이에 중심을 잡기 위한 상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은 성장하게 된다.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고, 조직의 리더들이 조직 논리에 빠져있다면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내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 감각과 방법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우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속의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사안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체 조합원의 참여로 의사를 결정하는 일도 도입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자기표현을 유연하게 수렴하여 조직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규범을 만들고,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동조합들이 민주주의의 경험과 훈련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도 여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주권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겁게 받아 안고 협동운동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합원주권 실현 혹은 민주적 운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원주 지역 협동운동을 생각해보자.

[원주 지역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과정]을 발제한 김소남 님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금융 소비 생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가 많은 곳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운동기관, 농민생산자 단체, 마을공동체 등 원주 지역 23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 지역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터운 역사적 연륜, 인구 대비 조직화 조합원의 높은 비율, 활동 영역의 다양성, 광범위한 네트워크 등의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주 지역 협동운동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조합원들은 생활상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들을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협동조합은 그 구성원 조합원이 표현하는 삶의 위기와 해결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 안고 있는가?

2013년부터 원주생협 조합원들은 육아사랑방 품앗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두레생협의 조합원들은 생활응원사업, 고령자 식사모임 등을 통해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조직한 일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타 지역 사례도 많다. 지금까지의 소비재 공동구매라는 협동사업을 넘어 돌봄 위기, 노동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새로운 협동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조합원들의 자기표현과 이를 수렴하는 조직역량에 달려 있고, 조합원주권에 입각한 민주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협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자이자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협동조합의 힘, 소통

우미숙 | 한살림성남옹인

설립 5개월을 맞이한 어느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5개월 전과 비교해 훨씬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은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일에 자존감을 찾고 직장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졌다. 이들에게 가장 매력으로 다가온 것은 자신이 속해 일하는 곳이 자신들이 소유한 것이며, 어떤 문제든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해결해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세우고 나서 “협동조합은 참 좋다”고 표현한다. 작업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기게 되고, 일이 먼저 끝나면 늦어지는 동료의 일을 도와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게 되고, 작업과 조합운동을 사람들과 함께 결정하여 책임을 나눠지는 든든함을 갖게 되며,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협동조합의 생명력은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힘에서 나온다. 그 힘은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잘 반영되어 협동조합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데에서 생겨난다. 바로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조합원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을까. 수많은 회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면서도 항상 소통에 굼주려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조합원이라면?”하는 질문을 한다. 조합원조직이 조합원에게 묻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히려 집행부나 이사진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합원의 생각인양 말하거나, 조합원에게 말을 걸고 묻는 일을 소홀히 하는 예가 많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참여’에 있다고 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얼마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앞에 소개한 직원협동조합은 30여 명의 조합원 규모라 조합원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한 달에 두 차례 한다. 회의에서는 이사장이 “조합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주문하면 조합원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 자리에 꺼내놓는다.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도 그 회의에서 조합원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니,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자존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조합이라면 조합원 전체가 운영에 참여해 발언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대의제를 운영하게 된다. 대의제 운영으로 조합원의 참여구조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단조로워진다. 그러다보니 조합의 사업내용과 방향의 중요한 결정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대의원과 이사들이 하게 된다. 여기서 협동조합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조합원은 이렇게 원하고 생각한다”며 말한다. 조합의 공동소유자이며 운영자인 조합원도 대의제 아래에서는 오히려 소통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한살림 생활협동조합과 조합원의 현재와 미래

한살림은 1998년 생협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생협의 옷을 갖춰 입기 시작하면서, 생협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한살림에서 회원조직이 생협조직으로서, 회원은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도 꽤 힘이 들었다. 그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살림을 예로 들면, 조합원은 대의제를 통해 운영에 참여하고, 한살림 지향에 따른 생활실천을 하며, 생명의 가치와 친환경적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합원의 주권이 무조건적 우대 요구와 ‘큰소리로 호통 치는’ 모습, 단순한 이용자로서 고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살림은 건강한 밥상과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을 통해 땅과 농업을 살리고,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내는 운동을 해왔고, 그 취지에 동감한 조합원들이 한살림을 선택하고 그 실천에 동참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의 조합원은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하나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한살림운동에 함께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더불어 살고 싶은 욕구가 지역살림운동 생활문화운동의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에서 한살림운동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다. 생활에 뿌리를 내리는 한살림활동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조합원들은 이웃의 조합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함

께 돌보고, 오염된 환경을 바뀌나가고,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활동을 한다. 이처럼 먹을거리부터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필요는 확대되고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움직임은 한살림조합원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가 바로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합원의 지역살림운동이나 생활문화운동이 지역의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조직의 생명력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조합원의 생활 속 필요와 열망이 지역살림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합원의 조합운영의 참여가 막연하게 "이러쿵저러쿵 호통치고 잔소리하며 이것저것 요구하는"식이 아니라 생활 속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그 필요와 요구를 활동에 담아내고 조합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사람 사업이다.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해냄으로써 자존감을 얻으며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가능한 곳이다.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면 최고의 조직이고 안정적인 조직이다.

새내기 협동조합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다. “왜 하필이면 협동조합을 선택했나?” 이 질문에 대개 처음엔 당황한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선택했다”거나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만들기보다 쉬워서 했다”는 답도 한다. 뚜렷이 왜 협동조합이라는 옷을 입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 “누구에게 소속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으로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존감”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찾는 것에 대한 매력이 협동조합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도 ‘소통’의 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

우리 시대 협동운동의 진단과 내다보기

김선기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협동조합을 통해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국가와 시장도 아닌, 누구의 힘에 의해서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통해 개개인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다.

또한, 레이들로 박사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을 통해 “거대정부와 거대 기업 사이에서 일반 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했으며, “공포스러운 정도의 기업권력 시대에 일반 시민이 법인권을 획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협동조합이라 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꿈의 종착지 역시 주민 필요와 염원에 기반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립과 자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법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이 협동조합에 부합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제도화가 오히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지 않게 흐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인격 취득 = 협동조합’이라는 공식이 만연돼 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이다. 하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 대부분은 공통의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5인 이상의 기계적 결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자발성 역시 본인의 필요와 염원에 근거하기에 보다는 단순 후원차원이 강하다.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전 이처럼 형성돼 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정의가 협동조합 법인격을 취득하는 데 그냥 알아야 할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게 되면 법인격은 있되 협동조합은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돈이 중심이 돼 사람은 경시되는 시스템에서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타개해 보고자 개개인의 의지를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에 비해 생동감이 넘치고 사업의 활로 역시 쉽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명한 일이다.

4천여 개가 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협동조합의 부실을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의 본질을 ‘결사의 부실’에서 찾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협동조합은 다른 범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의 조건 역시 다른 범주에서 찾아야 함에도 기존의 체제에서 찾고 마치 협동조합을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흐름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협동조합의 정의를 비롯해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염원을 근거로 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발적 결사가 자본주의 체제, 국가주도 체제에서 만개할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 협동할 때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사’의 문제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은 협동조합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와의 관계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발전 의제를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협동조합의 든든한 지원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은 현장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새마을 운동하듯 위에서 내려온다. 정책의 수립은 현장에서 필요가 모여져 만들어지고 지원은 이를 근거해 수립해야 함에도 정책과 지원 모두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절대성이 협동조합 진영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관에서 협동조합을 바로 보는 시각이다. 아직까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과 국가와는 전혀 다른 주체가 시장과 국가와는 전혀

다른 자기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그들뿐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허상이며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역시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본질부터 시작해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려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역시 관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협동조합의 지옥을 함께 만들어 낼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밖에도 1인 1표로 이야기되는 박제된 민주성이 아닌, 소통과 참여, 정보전달에 기반한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협동조합 내부에서 살아나야 한다. 사업 때문에 필요와 염원을 가진 사람을 압박하는 현상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협동조합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찬찬히 살펴봐야 할 영역이 매우 많다. 큰 그림은 그리되 그 그림이 우리 대에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도 버려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정착 100m를 계획하면서 1cm도 못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

무위당 20주기 기념 생명·협동 대화마당

퍼낸날 2014년 5월 21일

편 집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 동훈빌딩 5층

전화 02)6931-3604 전송 02)6715-0819

전자우편 mosim@hansalim.or.kr

누리집 <http://mosim.or.kr>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무위당 20주기 기념 생명운동 대화마당

지금 여기, 치유와 전환의 생명운동을 위하여

생명운동 집담회

모심과살림연구소

밝은마을

생명평화결사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예수살기

한알학교

한울연대

무위당 20주기 기념 협동운동 대화마당

한국 협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무위당만인회

모심과살림연구소



재생종이로 만든 책